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22-04

정책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Revitalization of
Camping Industry

박주영
장진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Revitalization of Camping Industry

박주영·장진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장진희 자유연구가 (법학 박사, 워싱턴DC 변호사)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야영장 관련 수요와 공급의 급증, 양적 성장 지속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야외 공간에서 소규모로 즐기는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영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캠핑인구는 689만 명(한국관광공사, 2021)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9년 538만 명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임. 전국의 야영장 숫자는 야영장업 등록 야영장 기준으로 2019년 2,233개에서 2020년 2,363개로 약 6%(130개소)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야영장의 질적 관리 필요성 부각
 - 2014~2015년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으로 추가 신설하여 야영장업 등록제(야영장업 관광사업자 등록 기준 제시)를 시행하고,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근거를 마련하며 야영장을 관광객 이용시설로서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영장 화재 및 안전사고,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야영장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상당수 야영장이 각종 인허가와 안전·위생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최근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갖춘 야영장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위생, 품질 등 질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 새로운 야영 시설로서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야영장업 관련 법에는 이러한 신종 시설에 대한 명확한 조성 및 관리 기준이 부재해 야영장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음
 - 현재 법적 근거는 있지만 시행하고 있지 않은 야영장업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를 포함해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야영장업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야영장업 실태와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야영장 이용자와 사업자,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주요 제도 개선 이슈를 도출하며, 제도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대상적 범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내 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을 대상으로 함
 - 해당 법령에 따르면,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함
- (시·공간적 범위) 야영장업을 본격적으로 제도에 편입해 관리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함. 공간적 범위는 전국 일원에 관광객 대상으로 야영 사이트를 조성해 야영장업을 등록·운영하는 공간 모두를 포함함
- (내용적 범위)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로서, 야영장업과 관련한 법·제도 현황, 야영장업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 제도 개선 이슈 도출과 제도 개선 방안을 내용적 범위로 함

2) 연구 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언론 기사 분석, 커뮤니티 후기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인터뷰(야영장 이용자, 야영장업 사업자,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전문가), 설문조사(야영장 이용자, 야영장업 사업자,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해 다차원적인 분석을 수행함

〈표 1〉 주요 연구 방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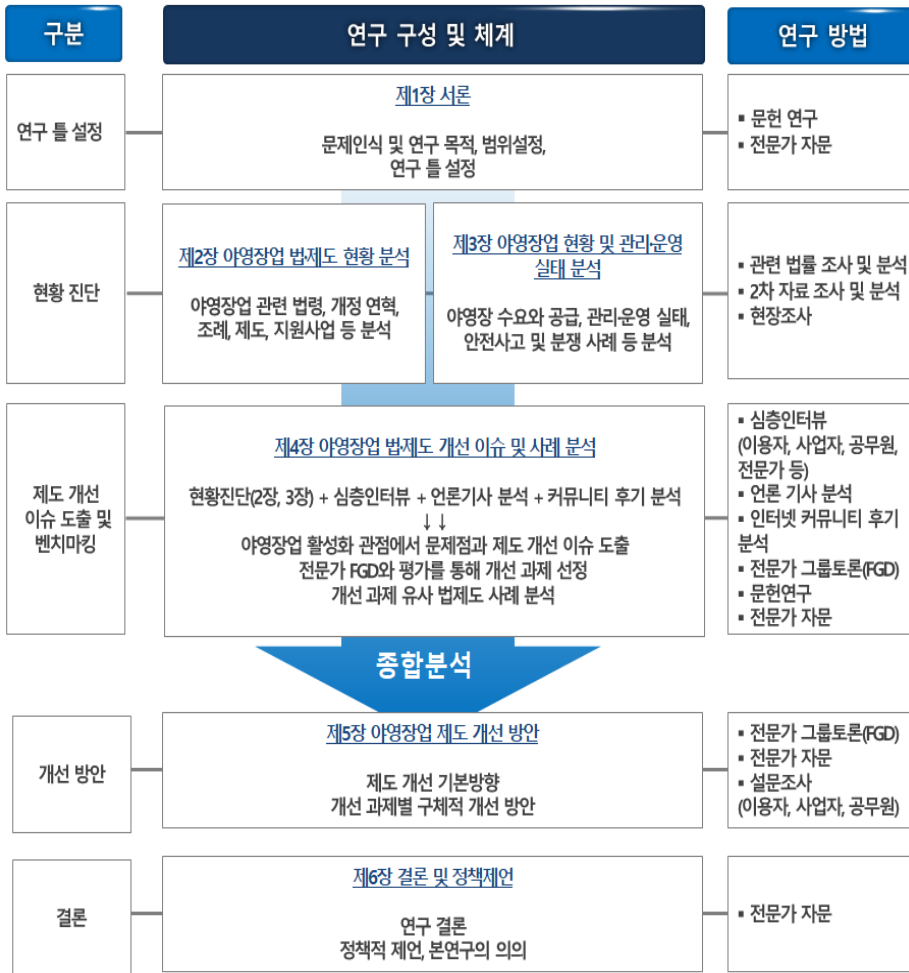
구분	개요	주요 목적 및 내용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야영장(시설관리공단 운영): 일반야영장업,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보유 - 공공야영장(민간 위탁 운영): 일반야영장업, 기본시설(야영 사이트)만 운영 - 국립공원 야영장(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 일반야영장업 - 민간야영장: 일반야영장업, 펜션 + 글램핑 운영 ◦ 기간: 2022년3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조성 및 운영 현장 조사 ◦ 공공/민간 및 운영 주체, 시설 보유 형태 등을 구분하여 조사 대상 선정
심층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인터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1: 야영장 이용자 3명 - G2: 야영장업 사업자 5명 - G3: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4명 - G4: 전문가 6명 ◦ 기간: 2022년 3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개선점, 애로사항, 한계 등 조사 ◦ 그룹별 특성에 따라 반구조화된 설문지 설계
언론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매체: 각종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 검색어: 캠핑장&문제, 야영장&문제 ◦ 검색기간: 2021년1월~2022년4월 ◦ 분석대상: 중복 기사 제외 6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관련한 문제, 사회적 이슈 등 파악
인터넷 커뮤니티 후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매체: 2007년 개설해 95만여 명 회원 수 보유 인터넷 커뮤니티 ◦ 검색어: 불만 ◦ 검색기간: 2021년1월~2022년4월 ◦ 분석대상: 428건 게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관점에서 제기되는 야영장 관련 문제점 파악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대상(유효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1: 야영장 이용자 200명 - G2: 야영장업 사업자 51명 - G3: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38명 ◦ 기간: 2022년 7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주: 연구자 작성

다. 연구 수행 체계

- 본 연구는 수요와 공급 양적 측면에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야영장업의 질적 성장과 안정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서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함

[그림 1] 연구 수행 체계



2. 야영장업 법·제도 현황 분석

가. 야영장업 관련 법령 현황

1) 야영장업 정의 및 종류

- 야영장업의 근거 법은 「관광진흥법」이며, 동 법령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등록·관리됨

- (야영장업 정의)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제3조제1항제3호다목)으로 정의되어 있음
- (야영장업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야영장업을 (i) 일반야영장업과 (ii) 자동차야영장업의 2종류로 구분(제2조제1항제3호다목)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각각의 시설기준을 적용함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는 야영장에서 조성하는 편의 시설 중 하나로서 야영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야영 장소(사이트)의 한 형태일 뿐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음
 -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는 야영장에서 제공하는 시설의 종류이지 업종이 아님
- (타 법령별 야영장 구분) 「관광진흥법」 이외에 타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유형의 야영장 조성이 가능함. 다만, 청소년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야영장은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하려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 숲속야영장(산림청), 자연공원 야영장(환경부), 관광농원 야영장(농림축산식품부), 유원지 야영장(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수욕장 야영장(해양수산부) 등이 있음

2) 야영장업 관련 법령 현황

- 야영장 조성이라는 개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허용 가능한 개발 행위에 따라 야영장 조성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하고 개발행위 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환경허가 등 사전 인허가 절차를 거쳐 허가 기준에 맞게 개발 후 준공검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완료한 이후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뒤 야영장을 운영하여야 함
- (야영장 입지·조성) 야영장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조성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해당 부지에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지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는 용도지역을 구분

하고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음

- 「건축법」에 용도별로 건축물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야영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 종류 가운데 제12호 수련시설, 제29호 야영장 시설 등이 해당함

- (야영장업 등록) 청소년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야영장은 관광객에게 야영 시설을 제공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자동차야영장업과 일반야영장업으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음

- 등록 신청: 야영장업 등록 및 관리 업무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으로 구분됨
- 등록 처리: 등록 신청을 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서류심사, 현장 확인, 등록 순의 절차를 수행하며, 등록신청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처리 기한은 7일 이내임
- 입지의 안전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 이행, 인허가,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설비 구비 여부,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함

- (야영장업 관리·운영) 야영장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화재 예방, 전기 안전, 가스 안전, 긴급 대피, 사고 예방, 위생 관리 등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함

-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법령 위반 사업자 제재)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따라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 또한 위반 행위별로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한 위반에 대한 내용만 포함하고 있을 뿐,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가 부재함

3) 관광진흥법 내 야영장업 법령 개정 연혁

- 야영장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야영장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성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해 오
- 야영장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것은 2015년이라고 볼 수 있음
 - 1988년 12월 자동차야영장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일환으로 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5년 1월 시행)하여, 야영장업을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추가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을 나누어 등록기준을 마련함
 - 2015년 2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2015년 8월 시행)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자에게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2015년 이후, 일부 등록기준은 완화하였지만,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과 관련한 기준은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강화해 나감

4) 야영장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 일부 광역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로 가평군이 유일함
- 경기도,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남도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를 근거로 야영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야영대회 개최, 우수 야영장 평가 및 지정, 야영 교육,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야영장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나. 야영장업 제도 및 지원 사업 현황

1) 야영장업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

- (등급제) 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자 2015년 「관

광진흥법」의 일부개정으로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품질인증제) 2018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야영장업을 포함하여 야영장업에 대한 품질인증이 가능하게 됨
- (고려사항) 하지만 아직 등급제와 품질인증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각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음
-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야영장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등급이나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야영장업자가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도 고려할 요소임

2) 야영장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표 2〉 야영장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지원 사업

구분	추진사업	추진내용
2005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자연친화적이고 저렴한 가족단위 국민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추진 • 지원내용: 방갈로, 통나무집, 캠핑카, 야영장 등 조성 • 2016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이양)
2015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2015년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마련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 지원내용: (안전시설) 전기·가스시설과 경보기, 재해방지사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안전·안내 게시물, 비상용발전기,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물처리 시설 등 • (위생시설)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 시설 등 • 지원규모(국비): 공공야영장 최대 4천만 원, 민간야영장 최대 2천만 원
2016년~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2016년부터 체험·교육형의 가족단위 매력 있는 야영장 운영을 확산하고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문화예술, 지역여행, 체험, 오락·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규모(국비): 시군구 지자체, 최대 1억 원
2019년~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2019년 야영장 편익시설인 글램핑, 트레일러 등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화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 • 지원내용: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글램핑 시설 방염 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m 이상) 확보를 위한 이진 설치 등 지원 • 지원규모(국비): 공공야영장 최대 3천만 원, 민간야영장 최대 1.5천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2022년부터 일반 텐트사이트 이용자 대상 질식사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지원 • 지원내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해 일반 텐트 이용자에게 대여해 줄

구분	추진사업	추진내용
		수 있도록 경보기 구입비용 지원 • 지원규모(국비): 공공야영장 최대 2백만 원, 민간야영장 최대 2백만 원
2022년~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 목적: 캠핑카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야영장 내 캠핑카 편의시설(dump station)을 구축 • 지원내용: 캠핑카 편의시설(전기, 급수, 오폐수 배출 등) 설치, 캠핑카 이용에 따른 진입로, 시설 내 도로 폭 및 사이트 면적 확대 등 캠핑카 이용에 따른 수용태세 개선 포함 • 지원규모(국비): 공공야영장 최대 6천만 원

주: 연구자 정리

다. 시사점

- (현행법과 현장 간 큰 괴리) 야영장업의 세부 업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 두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이 혼재되어 있음. 또한 이용자들에게 야영 공간을 제공하는 기본시설 없이 글램핑과 트레일러만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어 현행법과 현장 간의 괴리가 큼
- (야영장업 등록과 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마다 등록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관할 야영장 개소 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사업자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이해 등록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 (야영장업 관련 법령 개정 추세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 수립 필요) 2015년부터 야영장업 등록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부 등록기준을 완화해 법적 테두리 속에서 야영장업을 관리하고자 하였고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과 관련한 기준은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강화해 나감. 야영장업 관련 법령 개정 추세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야영장 품질 관리 제도 운영 여건 검토 필요) 야영장 품질 관리 제도인 등급제와 인증제는 국민들에게 야영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운영 필요성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운영 근거를 갖추고 있음. 하지만 현재 야영장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급 혹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야영장업이 등급제 혹은 인증제를 운영하기에 적절한 여건인지 검토가 필요함

- (야영장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사업 설계 필요)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야영장 이용자들의 수요, 트렌드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지원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야영 문화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야영장업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 분석

가. 야영장업 수요 및 공급 현황

1) 야영 수요와 공급

- (야영 수요와 공급 증가) 야영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 추세에 있음. 다만 야영 인구가 2019년 538만 명에 비해 2020년 689만 명으로 약 28% 증가한 반면, 등록 야영장 숫자는 같은 기간 6%(2,233개→2,363개) 증가하는 등 야영 인구 증가 추세에 등록 야영장 수가 못 따르고 있음
- (미등록 야영장 여전히 존재)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개소수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2019년 360개소로 집계된 바 있음.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등에서 파악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미등록 야영장이 상당수임을 추측할 수 있음
- (야영장 공급량의 지역별 편차) 야영장의 공급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함.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전체의 27.5%(651개), 강원권에 20.7%(488개) 등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과 강원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도 5개 미만인 곳부터 200개 가까이까지 지역별 차이가 큼
- (민간 중심의 야영장 공급, 소규모 야영장 비중 80%) 공공이 조성한 야영장은 490개(20.7%)이고 민간이 조성한 야영장은 1,873개(79.3%)를 차지하는 등, 야영장 수 기준으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임. 전체 야영장 가운데 사이트 개수가 50개 미만인 소규모 야영장이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함

2) 야영 형태 선호도

- (캠핑카, 트레일러, 글램핑 선호 증가) 야영장 내 선호하는 숙박 형태로 일반텐트를 쏘는 비중이 가장 높긴 하나,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 ‘글램핑’의 비중이 연도별로 점점 증가 추세임
- (글램핑, 트레일러 시설 보유 업체) 2021년 11월 고캠핑에 등록된 야영장 기준으로는 전체 2,860개 야영장 가운데, 430개(15.0%)가 글램핑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322개(11.3%)가 트레일러(카라반)를 보유하고 있음. 일반텐트 사이트만 운영하는 업체는 2,197개로 전체의 76.8%를 차지함

3) 야영장 이용자의 정보 채널

- (인터넷 중심 정보 습득) 2020년 기준, 야영장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야영장 정보를 얻는 경우가 80.2%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이어 친구·동료(67.4%)와 가족·친지(31.7%) 등에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친구·동료와 가족·친지에게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함. 다양한 야영장이 새롭게 조성·운영되는 데 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기에 친구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야영 경험자에게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정보 채널) 야영 정보 습득 인터넷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5.5%로 나타남
 - 고캠핑 사이트에서 야영장업 등록 야영장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용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4) 야영 이용자 만족도

- (만족도 저하) 야영(캠핑) 이용자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 2020년 이용자들의 최근 캠핑 경험의 평균 만족도는 3.97점으로 2019년(4.01점) 대비 다소 감소하였음. 한편 이용자 가운데 만족(만족+매우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77.1%로 2019년 82.7%에 비해 감소하였고, 불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하였다
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3%로 2019년 1.3%와 비교할 때 증가한 수치를 보임

- (불만족 이유) 전문가들에 따르면 캠핑 경력자들의 증가로 야영 활동에 대한 요구
내용과 수준이 다변화되고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야영장이 따르지 못한다거나, 우
후측순으로 야영장들이 조성·운영되는 데 비해 야영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이용 시 기대치에 못 미쳐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처음 야영을
경험하는 인구가 늘면서, 오랜 기간 야영을 해 온 경력자 층과 야영장 이용 문화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나. 야영장업 관리·운영 실태

1) 야영장 관리 실태

- (관리·감독 체계) 야영장의 안전·위생 관리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며, 매일 1회 이
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
록 관리·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정기 점검, 행정안
전부 주관 국가안전대진단 등 휴가철·장마철 등에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부 단위에서 안전 실태 등을 관리·감독함
- (각종 불법, 위반 사례 적발) 현장에서는 개별법의 인·허가 미이행을 비롯해 안전·
위생 기준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표 3〉 야영장 관리·운영 실태 조사 결과

연도	대상	조사 결과
2022년	◦ 경기도 소재 79개 중·대형 야영장	◦ 78개가 안전기준에 미달 ◦ 총 456건의 위반사항 지적
2021년	◦ 부산 소재 15개 등록 야영장	◦ 총 20건의 위반사항 확인
2020년	◦ 전국 50개 등록 야영장(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 총 213건의 위반사항 적발 - 보조금 관리 38건 - 야영장 등록 운영 100건 - 안전관리 75건
2019년	◦ 전남 5개 시·군 22개 등록 야영장	◦ 총 43건의 위반사항 적발
2019년	◦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운영 캠핑장 20개	◦ 총 95건의 위반사항 및 지적사항 확인

2) 야영장 안전사고 및 화재 발생

- (안전사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접수된 야영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172건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평균 44 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한국소비자원, 2019)
- (화재)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야영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3) 야영장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

- (예약 취소와 환불 관련 분쟁) 야영장업 사업자와 이용자 간 예약 취소와 환불 관련한 분쟁 발생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예약금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야영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사고와 위험을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임
- (예약 취소와 환불 관련 규정 기준 부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기준 마련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야영장은 관련 기준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다. 시사점

- (이용자 수요에 부합한 야영장 공급 필요) 야영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등록 야영장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등록 야영장이 수도권에 입지하여 있는 등 야영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음. 더욱이 민간 야영장에 비해 저렴하고 입지가 좋아 인기가 높은 공공 야영장은 불과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 예약을 하기 대단히 어려움. 한편 이용자들이 직접 텐트를 설치하는 형태에 대한 선호 비중이 지속 감소하는 반면, 캠핑카 및 카라반, 글램핑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 요컨대 야영장 이용 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등록 야영장 현황 파악 및 등록 활성화 필요) 야영장업 등록제도를 시행한 것은 야영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므로써,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야영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임.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 야영장이 운영 중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미등록 원인을 밝히고 등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야영장에 대한 활용도 높은 정보 제공 필요) 다양한 야영장이 새롭게 조성·운영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짐. 등록 야영장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제공 채널로서 한국관광공사가 ‘고캠핑’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이용자들의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야영장 이용자 만족도 제고 필요) 야영장 이용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한편, 이용자의 불만족이 증가하고 만족도가 저하되는 부분은 향후 수요 확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할 사항임. 야영장 이용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불만족 요소를 해결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야영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위생 기준 강화 필요) 야영장의 안전·위생을 위해 등록제도와 안전·위생기준 마련 등으로 야영장 관리를 위한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야영장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야영장에서 위반 사례가 지적된 것을 고려할 때, 야영장 점검 체계가 미흡하고 안전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요컨대 야영장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법·제도 상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나 글램핑 내부에서 제공하는 화장실, 에어컨, 싱크대 등에 대해서는 위생 관련 기준이 미비한바 조치가 필요함
- (야영장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 필요)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이용자가 안전하게 야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충분한 환경(시설과 서비스)을 제공할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한 야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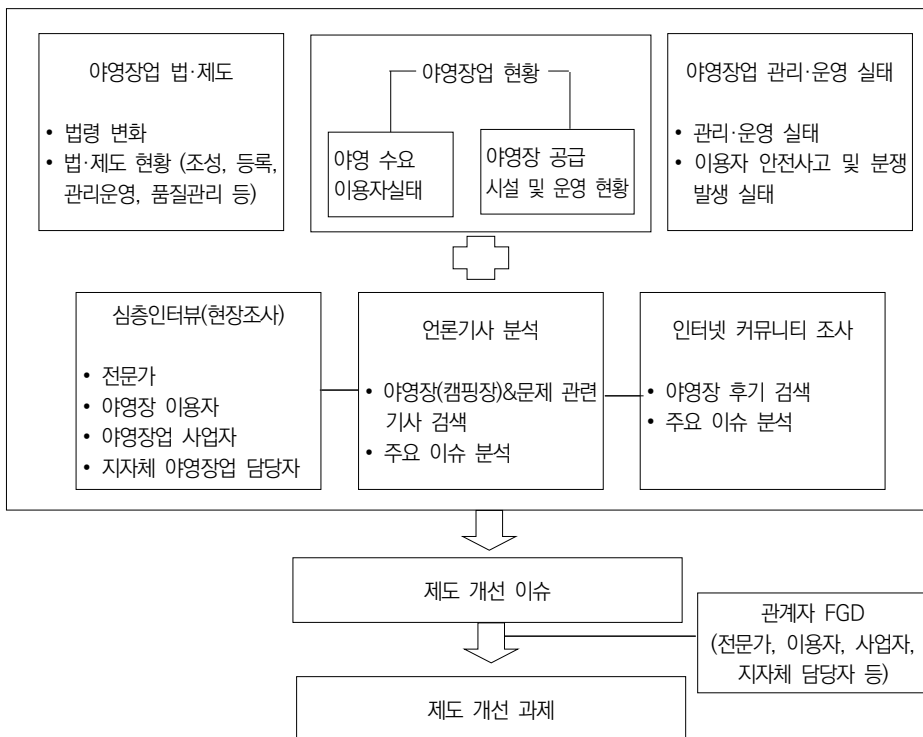
4.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 이슈 및 사례 분석

가.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 이슈

1) 법·제도 개선 이슈 도출 체계

- 제2장에서 분석한 법·제도 현황과 제3장에서 분석한 야영장업 수요와 공급 현황 및 야영장업 관리·운영 실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야영장 이용자 및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자의 의견 수렴과 심층인터뷰, 언론 및 인터넷 커뮤니티 조사 결과를 결합해 제도 개선 이슈를 도출함. 그리고 개선 이슈 도출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과 효과성, 시급성 등을 집단 토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함

[그림 2] 제도 개선 이슈와 과제 도출 체계



2) 심층인터뷰 조사

① 심층인터뷰 개요 및 내용

〈표 4〉 심층인터뷰 개요 및 내용

구 분	내 용
심층인터뷰 기간	2022년 3월-6월
심층인터뷰 목적	야영장업 제도 개선 이슈 도출
심층인터뷰 대상 및 주요 내용	
야영장 이용자(3인)	야영장 이용 특성(동반자, 선택기준, 정보습득경로, 주요 활동 등) 야영장 이용 시 만족, 불만족 요소 등록 야영장 인지 여부, 등급제 등 도입 필요성
야영장업 사업자(5인)	야영장 운영 기간 및 운영 현황 야영장업 등록, 관리·운영 시 제도적 애로사항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 등 도입 필요성
지자체 야영장업 담당자(4인)	야영장업 등록 현황 야영장업 등록, 관리·감독 업무 시 애로사항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 등 도입 필요성
야영장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6인)	야영장업 현황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슈

② 심층인터뷰 결과

- (야영장 이용자) 예약 및 요금, 환불로 인한 불편과 야영장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함. 사이트 간 이격 거리, 위생 및 청결 관련한 시설 관리 미흡 등을 불만족 경험으로 꼽음. 야영장업 등급제와 인증제에 대해서는 선택 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임
- (야영장 사업자) 야영장 조성 면적 규모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함. 관광 트렌드 변화와 수요자 욕구에 부합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싶으나, 야영장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등록권자인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이 달라 어려움이 많음. 야영장 내 안전사고의 상당수가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등은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부여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음. 야영장업 등급제와 인증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함께 함. 또한 미등록·불법·편법 운영 야영장이 제대로 적발·관리되지 않아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 야영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함

- (야영장업 지자체 담당자) 야영장 내 조성하는 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해석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 밖에도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 및 적용이 쉽지 않음. 야영장업 등록 신청 시 처리 기한의 현실화를 원함. 야영장업 관련 업무 외에도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이 있다 보니 야영장 조성하고 운영이 활발한 곳은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음. 반기별로 야영장업자에게 안전 점검표를 제출받아야 하나,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형식적으로 안전점검 의무를 이행함
- (야영장업 관련 협회,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이용자들이 미등록 야영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야영장이 자발적으로 법·제도적 테두리 내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야영장업체 대상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함

3) 언론 기사 분석

① 언론 기사 분석 개요

-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언론 기사 가운데 ‘야영장(캠핑장)’과 ‘문제’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중복 기사를 제외하고 총 67개의 기사를 추출함. 해당 기사 원문의 내용에서 야영장 관련한 문제, 사회적 이슈 등을 분석함

〈표 5〉 언론 기사 검색 개요

구 분	내 용
검색 사이트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
검색 기간	2021.1.~2022.4.
검색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경제일간지(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 지역일간지(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 방송사(KBS, MBC, OBS, SBS, YTN) • 전문지(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검색어	1. 캠핑장&문제 2. 야영장&문제
목적	야영장 관련한 문제, 사회적 이슈를 파악
검색 결과	중복 기사 제외 67개

② 언론 기사 분석 결과

- 야영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 67건에서 언급된 문제를 야기한 주체 기준으로 분류해 본 결과, 야영객으로 인한 이슈가 월등히 많음. 야영객의 ‘쓰레기 투기(30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다음으로 ‘불법주차 및 불법텐트 설치(25건)’, ‘소음, 고성방가(17건)’가 언급됨. 일반 차량을 이용한 차박과 캠핑카를 이용한 야영 문화 증가에 따른 불법 행위를 지적한 기사가 전체 67건의 분석 대상 가운데 24건을 차지함
- 야영장업 사업자 측의 문제로는 공유지 등에서의 불법 야영장 조성·운영(5건), 비합리적 요금(3건), 예약과 관련한 문제(3건)를 언급함
- 행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지적한 야영객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만한 법·제도가 미비(7회)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표 6〉 언론 기사 분석 결과

단위: 건

구 분	문 제	건 수
야영객	쓰레기 투기	30
	불법 주차, 장기주차, 불법 야영(텐트 설치, 취사)	25
	소음, 고성방가	17
	지역소비 부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미흡	6
야영장 사업자	불법 야영장 조성·운영	5
	비합리적 요금	3
	예약 관련 문제(중복예약, 일방적 취소, 예약 취소 수수료 등)	3
행정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불법 야영 행위 등 단속 근거(법·제도) 미비	7
	야영 인프라 구축 미흡	3

주: 총 67건의 언론기사 가운데 해당 주요 이슈를 포함한 기사 건수를 집계함

4) 인터넷 커뮤니티 후기 분석

① 커뮤니티 후기 분석 개요

- 야영장 이용자 관점에서 제기되는 야영장 관련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조사하고자 인터넷 커뮤니티 조사를 실시함.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불만’을 키워드로 게시 글을 검색하여 조사 목적에 부합한 사례 총 428건을 수집·분석함

②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후기 분석 결과

- 불만 사항으로 언급된 내용은 크게 야영장 사업자의 운영·관리, 야영장의 시설·환경, 야영객의 비매너 행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세부적으로는 야영장 예약·환불 및 사이트 배정, 요금, 사업자 불친절 및 갑질 행위, 야영객 안내·관리, 야영장의 시설 관리, 야영장 시설·환경, 야영객들의 비매너 행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표 7〉 인터넷 커뮤니티 불만 사항 조사 결과

단위: 건

구 분		불만 내용	건수	
야영장 사업자의 야영장 운영·관리	예약·환불 및 사이트 배정	예약 자체가 힘들다	4	43
		기본적인 시스템(예약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	2	
		불명확한 이유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예약을 할 수 없다	3	
		환불 등 관련한 규정이 제대로 없거나 환불 불가, 환불 시 무조건 수수료를 받는다	4	
		장기간(2박 이상)을 우선으로 예약을 받는다	21	
		사이트를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2	
		비정비 구역을 텐트 사이트로 제공한다	5	
		오버부킹으로 인하여 사이트를 제대로 배정받지 못했다	2	
	요금	캠핑장 요금이 비싸다	49	107
		무턱대고 요금을 올리고 있다	16	
		연박 할인이 없다	3	
		추가 옵션 요금이 많다	13	
		카라반이나 텐트트레일러일 경우 추가 요금을 받는다	2	
		사이트에 인원 규정이 있어, 사이트를 2개 잡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24	
	이용시간	입·퇴실 시간에 맞추면 야영장 체재시간이 짧다	15	15
	사업자 불친절, 갑질 행위	사업자 마음대로 고객을 가려 받는다	3	29
		사업자가 불만을 고의로 삭제한다(정보를 통제한다)	9	
		사업자 마음대로 한다	3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5	
		사업자가 불친절하다	9	
	야영객 안내·관리	야영장 매너타임 및 야영객 관리가 부실하다	13	24
		국립공원 야영장, 지자체 야영장의 매너타임 등 야영객 관리가 부족하다	7	
		안내가 부족하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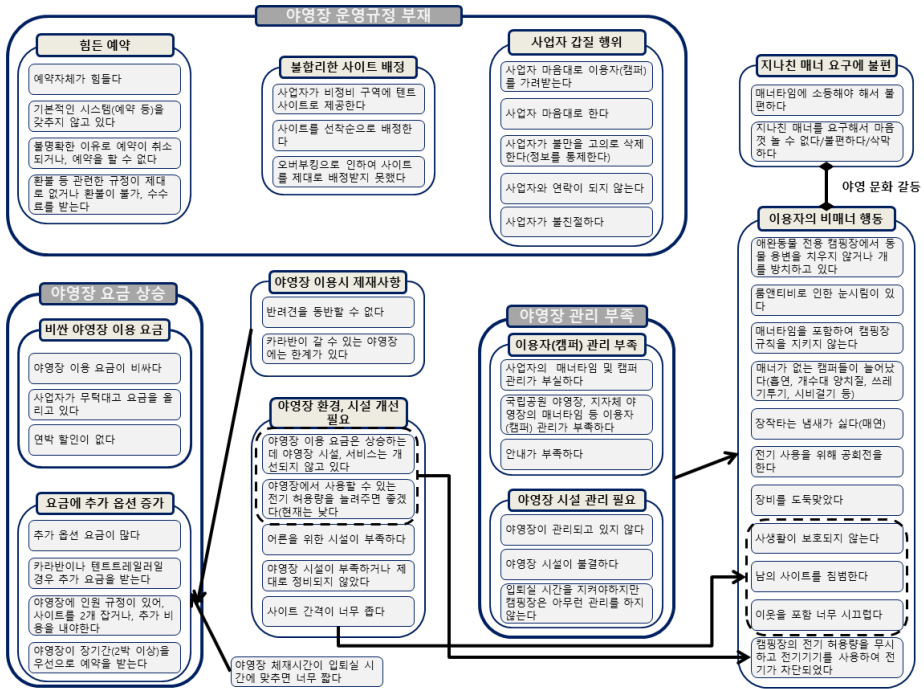
구 분		불만 내용	건수	
	시설 관리	야영객들의 입·퇴실 시간에 대한 관리가 부족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	3	27
		야영장 시설이 불결하다	13	
		야영장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	14	
야영장 시설·환경	요금 대비 시설 및 서비스	야영 이용 요금은 상승하는데 야영장 시설,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8	81
	전기 허용량	야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허용량이 낮다	7	
	사이트 간격	사이트 간격이 너무 좁다	24	
	시설, 정비	야영장 시설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11	
		어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5	
		카라반을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힘들다. 카라반 이용이 가능한 야영장이 제한적이다	4	
	이용 제약	반려견 동반 입장이 불가하다	2	
야영객 비매너 행동	규칙 위반	매너타임을 포함하여 캠핑장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8	184
		캠핑장의 전기 허용량을 무시하고 전기기기를 사용하여 전기가 차단되었다	5	
	공회전	전기 사용을 위해 공회전을 한다	6	
	소음	너무 시끄럽다	127	
	매연	장작 타는 냄새가 싫다(매연)	2	
	사이트 침범	남의 사이트를 침범한다	17	
	비매너	매너가 없는 캠퍼들이 늘어났다(흡연, 개수대 양치질, 쓰레기 투기, 시비걸기 등)	13	
	도난	장비를 도둑 맞았다	3	
	기타	애완동물 전용 캠핑장에서 동물 용변을 치우지 않거나 개를 방치하고 있다	3	
야영객 인식 차이	매너타임 불만	지나친 매너를 요구해서 마음껏 놀 수 없다/불편하다/삭막하다	42	55
		매너타임에 소등해야 해서 불편하다	13	

주: 이용 후기 428건에서 불만 사항을 집계해 분석함

- 야영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후기에서 나타난 불만 사항을 KJ법을 활용해 도식화함. 예약과 환불 어려움, 야영장 사업자들의 불합리한 사이트 배정, 갑질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 사항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상황에서 야영장 운영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발생하는 문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인원 규정 등 야영 이용 형태에 대한 제약이 늘고 이용 요금이 급등하는 반면, 시설이나 서비스 등은 이전과 변함이 없어 불만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됨

- 야영장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나 관리에 대한 불만은 야영장 이용자들의 행동에 대한 불만과도 관련이 있음.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야영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야영 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3] 야영장 이용자 불만 사항 관련성 분석(KJ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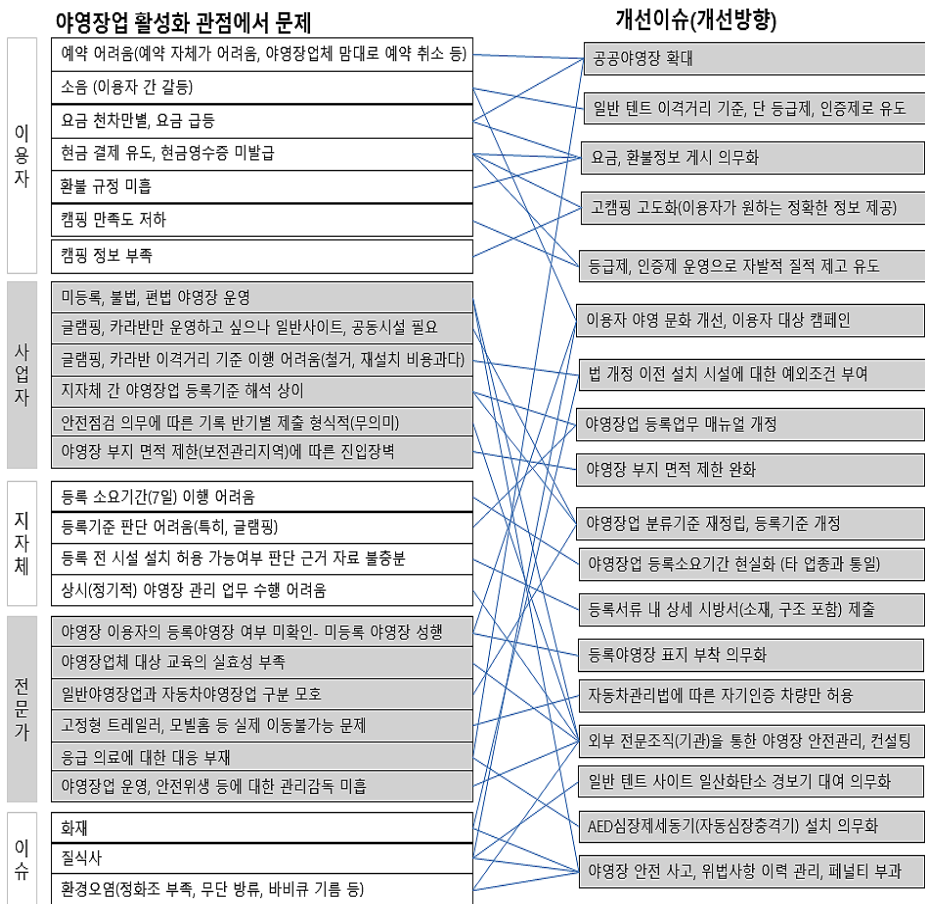
5)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 이슈 및 과제 선정

① 야영장업 활성화 관점에서 문제 종합 및 법·제도 개선 이슈 도출

- 야영장업 법·제도 현황, 야영장업 수요와 공급 현황, 관리·운영 실태 등과 야영장업 이용자,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함
- 총 18개의 개선 이슈(① 공공야영장 확대, ② 일반 텐트 사이트 간 이격 거리 기준, 다만 등급제 및 인증제 등의 제도로 유도, ③ 요금, 환불 정보 게시 의무화, ④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 제공(고캠핑 사이트 개선), ⑤ 등급제, 인증제 운

영, ⑥ 이용자 야영 문화 개선, 이용자 대상 캠페인, ⑦ 글램핑, 카라반 이격 거리 관련 법 개정 이전 설치 시설에 대한 예외 조건 부여, ⑧ 야영장업 등록업무 매뉴얼 개정, ⑨ 야영장업 부지 면적 제한 완화, ⑩ 야영장업 분류체계 재정립 및 등록 기준 개정, ⑪ 야영장업 등록업무 수행 시, 등록 소요기간 현실화, ⑫ 야영장업 등록서류 내 상세 시방서(소재, 구조 포함) 제출, ⑬ 고정용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차량만 허용, ⑭ 등록 야영장 표지 부착 의무화, ⑮ 외부 안전 전문조직을 통한 야영장 안전 관리와 컨설팅, ⑯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차량만 허용, ⑰ AED심장제세동기 설치 의무화, ⑱ 야영장의 안전사고, 위법사항 이력 관리)를 도출함

[그림 4] 야영장업 활성화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 이슈



② 법·제도 개선 과제 선정

- (주요 과제 선정) 전문가, 야영장업 사업자, 이용자 등 주요 관계자 토론을 통해 야영장업 활성화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이슈를 정리함. 총 18개의 개선 이슈가 도출되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 야영장 사업자, 이용자 등 주요 관계자 10인이 시급성,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7점 척도로 평가함.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자 토론을 통해 법·제도 개선 관점에서 제안할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함
- (개선 이슈 평가 결과) 야영장업 분류기준 재정립과 이에 따른 등록기준 개정은 시급성과 중요성이 7.0점으로 평가되었고, 실현가능성은 6.6점으로 평가됨. 야영장업 등록업무 매뉴얼 개정은 시급성이 6.6점, 중요성이 6.5점, 실현가능성이 6.4점으로 평가됨. 이 외에도 외부 전문조직(기관)을 이용한 야영장 안전관리 및 컨설팅이 시급성과 중요성, 실현가능성 평균 6.3점으로 평가됨

〈표 8〉 법·제도 개선 이슈 평가 결과

단위: 점

구 분	시급성	중요성	실현가능성	평균
1. 공공야영장 확대	5.2	6.1	5.8	5.7
2. 일반 텐트 이격 거리 기준, 단 등급제, 인증제로 유도	5.0	5.2	5.3	4.2
3. 요금, 환불정도 게시 의무화	5.1	4.9	5.6	5.2
4. 고캠핑 고도화(이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 제공)	4.4	4.6	5.4	4.8
5. 등급제, 인증제 운영	5.0	5.1	5.1	5.1
6. 이용자 야영 문화 개선, 이용자 대상 캠페인	5.2	5.8	5.2	5.4
7. 법 개정 이전 설치 시설에 대한 예외조건 부여	2.1	2.1	1.8	2.0
8. 야영장업 등록업무 매뉴얼 개정	6.6	6.5	6.4	6.5
9. 야영장 부지 면적 제한 완화	5.4	5.6	5.5	5.5
10. 야영장업 분류기준 재정립, 등록기준 개정	7.0	7.0	6.6	6.9
11. 야영장업 등록소요기간 현실화 (타 업종과 통일)	5.7	5.1	5.8	5.5
12. 등록서류 내 상세 시방서(소재, 구조 포함) 제출	5.9	5.7	5.9	5.8
13. 등록 야영장 표지 부착 의무화	5.6	5.6	6.2	5.8
14.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차량만 허용	5.6	5.6	6.2	5.8
15. 외부 전문조직(기관)을 통한 야영장 안전관리, 컨설팅	6.4	6.4	6.0	6.3
16. 일반 사이트 이용자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의무화	6.2	6.5	6.0	6.2
17. AED심장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4.2	4.4	3.9	4.2
18. 야영장 안전사고, 위법사항 이력 관리, 패널티 부과	5.0	5.6	4.9	5.2

주: 전문가 등 주요 관계자 10인이 7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임

- (주요 개선 과제 도출) 5점 이상으로 평가된 개선 이슈 가운데, 법·제도적 접근이 가능한 10개 과제(① 공공야영장 확대, ② 요금, 환불정보 게시 의무화, ③ 등급제, 인증제 운영, ④ 야영장업 등록업무 매뉴얼 개정, ⑤ 야영장 부지 면적 제한 완화, ⑥ 야영장업 분류기준 재정립 및 등록기준 개정, ⑦ 야영장업 등록소요기간 현실화, ⑧ 등록서류 내 상세 시방서(소재, 구조 포함) 제출, ⑨ 외부 전문조직(기관)을 통한 야영장 안전관리 및 컨설팅, ⑩ 일반 사이트 이용자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의무화)를 개선 과제로 도출함
 - 고캠핑 사이트와 이용자 대상 캠페인에 대한 개선 이슈는 현재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개선 방향을 정책제언으로 포함함
 - 야영용 트레일러와 관련한 개선 이슈는 야영장업 분류체계와 등록기준 재정비 과정에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개선 과제에서 제외함
 - 야영장 안전사고, 위법사항 이력 관리, 페널티 부과 이슈는 외부 전문조직을 통한 야영장 안전관리 및 컨설팅과 연계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함

나. 유사 법·제도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개요

- (분석 목적)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법·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사례 분석에서는 법·제도 사례에 한정하여 살펴봄
- (분석 대상 및 내용) 첫째,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급제 및 인증제 관련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 둘째, 안전관리 관련 민간위탁 사례를 살펴봄. 셋째, 요금 및 환불 정보 게시 의무화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봄
 - 등급제 및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고 선진 야영 환경 조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기능에 주안점을 두어 참고 사례를 조사함
 - 가격 및 사업체 등록 정보 게시 의무 등은 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로 형평성 관점에서 야영장업과 유사한 업종 사례를 살펴봄

〈표 9〉 사례 분석 대상 및 내용

구분	대상 사례	분석 내용
등급제 및 인증제	일본 야영장 등급제 및 인증제 프랑스 야영장 등급제 우리나라 국립공원 야영장 등급제 우리나라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우리나라 호텔 등급제 우리나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등급제 및 인증제 구성 체계 평가 항목 주요 특징
안전관리 민간위탁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관리 우리나라 화재, 소방시설 안전관리 우리나라 전기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념 및 목적 민간위탁 규정
가격 및 사업체 등록 정보 게시	우리나라 농어촌민박사업 우리나라 숙박업 우리나라 관광숙박업(호텔업) 프랑스 야영장	정보 게시 의무 규정

2) 사례 분석 시사점

-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관리 체계, 민간의 참여 동기 유발 필요)
 - 일본의 야영장 등급제는 민간 협회 중심으로 회원 사업체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프랑스의 야영장 등급제는 정부에서 등급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주고 민간협회 등의 조직에서 등급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프랑스에서는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참여 동기를 제공함
 -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사업은 등급결정 결과를 웰촌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이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적임. 등급제도 운영의 취지가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이 홍보 효과가 되어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개선 의지를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함
- (시설 외에 야영장의 입지적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 기준 고려)
 - 일본과 프랑스의 야영장 등급 평가기준이 단순 시설 수준 외에도 접근성, 자연 및 주변 환경, 운영 관리와 직원 교육 등을 비롯해 장애인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까지 기준으로 다루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평가 기준 설정 시, 우리나라 야영장 현황과 정책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등급제 및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이나 취지,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우리나라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는 올해 등급 평가체계와 평가기준 개편을 예정하고 있음. 평가 부문 축소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안전과 위생관리 평가를 강화함.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시설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소비자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함. 이러한 등급제 평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야영장업 현황에 부합한 제도 설계 중요)

- 야영장은 호텔 등과 달라 정형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제한이 있음. 즉, 국민들의 야영 행태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야영장 사업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영장 특성과 현황에 부합한 제도 설계가 필요함
-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경우, 인증사업체의 폐업이나 위법한 운영 등으로 구설에 오른 사례가 있음. 등급이나 인증을 부여받는 대상은 적법한 운영과 일정 이상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이 뒤따라야 함

■ (야영장업 안전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성 활용 검토)

-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음. 우리나라는 승강기,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전기 등의 안전관리 등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안전관리업이 별도로 있는 등 민간 참여가 활발함
- 야영장업 관리·감독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 및 위생 관리 부문의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간위탁이 유효한 접근 방안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의 도입은 결국 야영장 이용자, 즉 국민들의 안전한 야영장 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 함

■ (가격 및 사업체 등록 정보 게시)

- 가격이나 사업체 등록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이 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함
- 「공중위생법」 상 숙박업 역시 숙박업신고증과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가 있으며,

프랑스 야영장에 대해서도 가격과 이용자가 이용할 시설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 요컨대 미등록 사업체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및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용자가 비합리적인 가격 지불로 만족도 및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게시 의무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5.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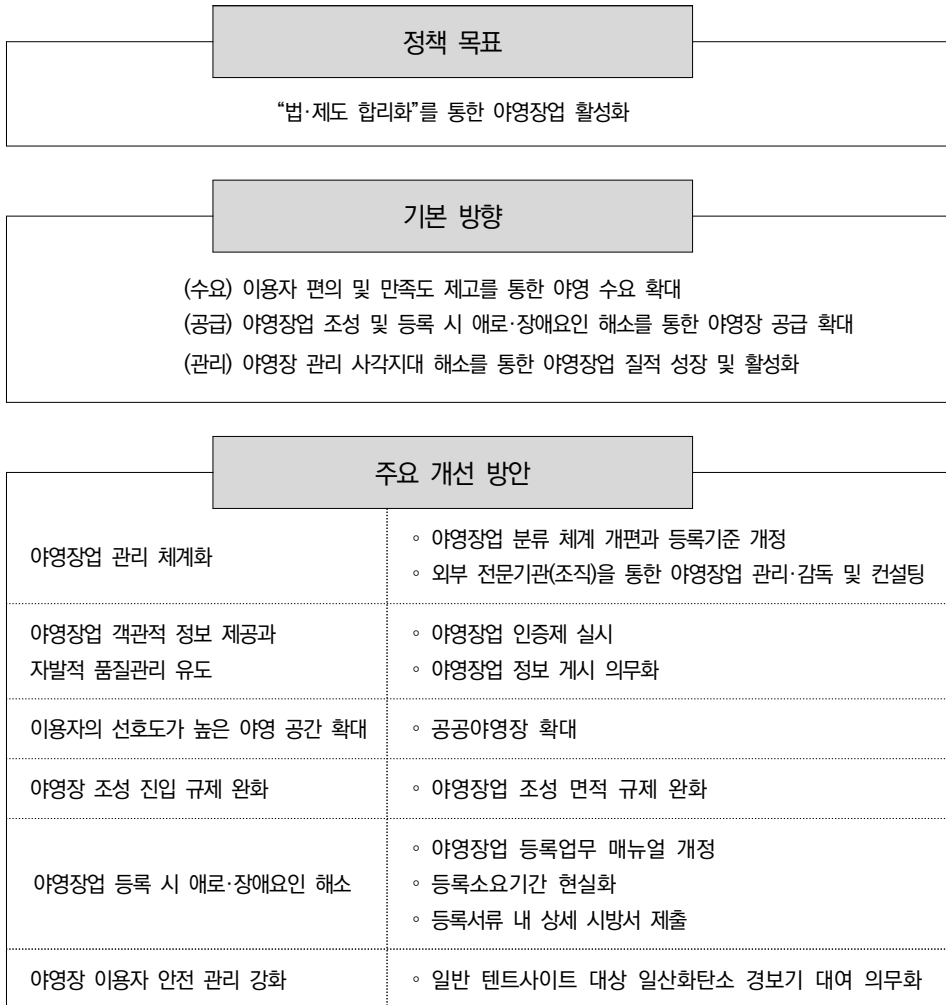
가. 기본 방향

1) 제도 개선 관점

- 본 연구에서 야영장업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는 야영장업을 둘러싼 현황 진단과 여건 변화 등을 토대로 야영장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 ‘야영장업 활성화’는 야영장 이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것을 의미함. 수요 측면에서는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야영장에 대한 이용 수요를 확대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이용자 만족 및 안전, 자연환경 보전 등의 기본 원칙 아래, 야영장업 등록 및 운영 시 제약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야영장업계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불필요하고 시대적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 자연환경 보전 등과 관련한 필수불가결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규제 관점이 아니라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관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야영장 이용자(국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향함. 공공의 역할을 고려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도록 함

2) 제도 개선 방향

[그림 5] 제도 개선 방향



-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과 안전·위생기준 마련 등으로 야영장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위생과 관련한 법·제도를 강화해 오고 있으나, 야영 수요와 공급의 급속한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임
- 따라서 단기 처방적 접근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다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행을 위한 준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법·제도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법·제도를 합리화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야영장업을 활성화함.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함. 첫째,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야영 수요를 확대함. 둘째, 야영장업 조성 및 등록 시 애로·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야영장 공급을 확대함. 셋째, 야영장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야영장업의 질적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함

나. 제도 개선 방안

1) 야영장업 관리 체계화

① 야영장업 분류 체계 개편 및 등록기준 개정

- (필요성)
 - 현행 야영장업 세부 분류(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등록기준이 환경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음
 - 야영장업의 기본시설로서 이용자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시설 없이 글램핑이나 야영용 트레일러만 설치해 운영 중인 업체가 증가함. 뿐만 아니라 글램핑과 트레일러에 대한 명확한 등록기준이 없어 등록 및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야영장 사업자들의 불만이 지속됨
 - 글램핑과 트레일러 시설을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색 숙박시설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영장업의 입지 요건이나 사업자 의무 사항들이 숙박업에 비해 수월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됨
- (개선 방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다양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야영장 이용 비용과 형태 등이 상당히 달라짐. 그로 인해 점점 더 현행법과 야영장 현장 간의 법·제도적 간극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야영장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용자가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야영텍(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기본시설로 설정하고, 숙박 형태에 가까운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은 야영 체험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현행과 같이 구분하되, 야영 체험시설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야영을 하는 공간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이용자가 텐트나 캠핑용자동차 등을 이용해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야영을 하는 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모빌홈 등)을 조성 및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함
 - 이를 기준으로 야영 사이트(토지)만 제공하는 야영장을 (가칭)일반야영장업, 그리고 야영 사이트(토지) 외에 편의시설 가운데 숙박이 가능한 야영 체험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모빌홈 등)을 1종 이상 포함하는 야영장을 (가칭)종합야영장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부합한 등록기준을 설정함
 - 현재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은 앞서 제안한 (가칭)일반야영장업 하나로 통합하고, 보통 자동차를 이용해 야영장으로 이동하는 등 변화한 야영 시장에 부합한 등록기준을 설정함
- (기대효과) 야영장업 분류 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등록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현재 법·제도적인 불명확성과 현장과의 괴리 등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음. 이용자의 편의나 만족도에 부합한 등록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등과 같은 신종 야영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책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음. 이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야영장업 사업자와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② 외부 전문조직을 통한 야영장업 관리·감독 및 컨설팅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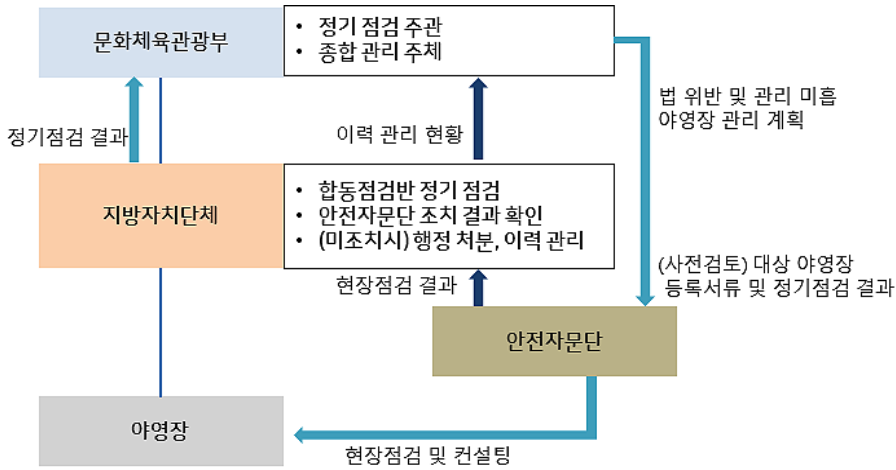
- 야영장업 등록제 이후 안전·위생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야영장업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업 관리 실태를 조사할 때 마다 대다수의 야영장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 무단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 설치, 야영장 변경등록 미준수 등 야영장 등록·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화재 안전 기준 미준수,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축소 가입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이 나타남

- 현행 관리·감독 체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자와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필요성을 낮게 평가함
- 야영장업 안전·위생 관리 점검주체 가운데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야영장업 관리 점검주체의 적합성을 보통 이하(2.92점)로 인식함. 특히 점검주체, 점검시기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각각 2.47점과 2.61점으로 낮게 평가함
- 야영장업 사업자는 점검시기의 적합성을 보통 이하(2.98점)로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성에 있어서도 특히 점검시기에 대해 낮게 평가함
- 실제 야영장업 사업자와 관리요원들은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낮게 평가함

■ (개선 방안)

- 야영장업체 대상 안전 교육을 비롯해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부족,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불법·편법 운영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부 전문조직을 통한 야영장업 관리·감독 및 컨설팅을 추진함.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후속관리이자, 사업자 대상 안전 교육의 보완을 목적으로 함
- 토목, 건축, 소방, 가스, 전기, 위생, 운영·관리 등으로 구분해 각 분야의 자격이나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로 가칭) 안전자문단을 구성함. 전문성을 갖춘 인력 풀을 구성하고, 안전 점검 매뉴얼을 토대로 공통적인 점검과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전자문단의 현장 점검과 컨설팅은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에서 법 위반 및 안전·위생 기준 미흡 정도가 심한 야영장을 우선 대상으로 함. 안전자문단이 야영장업 등록 서류와 정기점검 결과를 검토한 이후, 사업자와 방문일정을 협의해 현장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컨설팅함
- 안전자문단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미조치 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함. 행정 처분에 대한 이력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종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

[그림 6] 가칭) 야영장업 안전자문단 운영 체계(안)



주: 연구자 작성

- (기대효과) 야영장업 안전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현장 점검과 컨설팅으로 현행 야영장업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음. 또한 안전자문단의 전문성 있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야영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야영장업의 품질을 제고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2) 객관적 정보 제공과 자발적 품질 관리 유도

① 야영장업 인증제 실시

- (필요성)
 - 최근 야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야영장 공급이 늘어나면서 야영장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야영장 예약이나 환불, 요금 관련한 이용자 불만 사항이 커지고, 안전·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즉, 이용자의 편의 및 만족도뿐만 아니라 안전·위생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함
 -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이 야영장업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라면, 인증 기준은 법에서 규정한 표준을 지키되 그 이상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목표점으로 볼 수 있음

- 야영장 이용자의 경우 등급제 및 인증제 적용에 대해서는 76.5%가 필요(매우필요 포함)하다고 응답하였고, 특성화 야영장에 대한 인증 역시 73.5%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개선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야영장업 발전 수준과 관리·운영 현황, 이용자 편의·만족도 현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증제를 우선 실시하고자 함. 야영장의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영세한 야영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차등적 등급제의 도입보다는 야영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함

- 국민들의 야영 행태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야영장 사업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영장의 특성에 부합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평가 체계를 구축함

- 일정 기준 이상의 위생·안전 및 품질 특성을 갖춘 야영장이 정당한 절차로 관리·운영되고 있음을 인증함으로써, 야영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야영장업을 발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야영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둠

- 평가 단계는 i) 서류평가, ii) 현장평가로 구성함

- 이용자의 야영장 선택 기준이나 선호도가 각기 다를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증 기준을 설계함. 특히 단순히 편의시설이 많은 야영장이 더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함

-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스펙트럼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방향 및 품질 제고에 주안점을 둠. 예를 들어, ① 친환경 및 탄소중립, ② 안전 특화(야영장 관리자가 안전요원 혹은 응급처치사 자격증 소지, AED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③ 무장애(Barrier-Free), ④ 체험프로그램 다양성, ⑤ 반려동물 친화(반려동물 동반 가능 등), ⑥ 어린이 친화, ⑦ 외국인 친화 등 다양한 특성화 분야를 구분할 수 있음. 그리고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 법령 준수는 기본으로 함

- 친환경, 안전 특화, 무장애 등 야영장의 시설이나 특성 중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분야에 따라 우수 야영장을 인증하고 검색포털이나 고캠핑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함

〈표 10〉 야영장업 인증제 평가지표(안)

구분		평가지표	비고
기본 항목	1. 시설 관리	1) 등록 야영장-실제운영야영장 준수 상태	위법 시 인증 불가
		2) 건축물 및 이용시설의 적법성 (건축법 위반 건축물 운영 여부 확인)	위법 시 인증 불가
		3) 이격거리 확보	
	2. 안전 관리	1) 소화기 설치 및 관리 상태	
		2)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3) 야영장 시설배치도(비상대피도) 부착 여부	
		4) 폐쇄회로TV(CCTV) 설치 여부	
		5) 야영장 안전수칙 게시 여부	
		6)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7) 안전상비의약품 보유	
		8) 매월 안전점검 실시 여부	
		9) 안전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여부	
		10) 차량 서행 속도 안내판 설치 여부	
	3. 운영 관리	1) 야영장업 등록증 게시 여부	
		2)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여부	
		3) 환불규정 운영 고지 여부	
		4) 지불수단 편의성(카드결제기 등 보유여부)	
		5) 영업시간 내 관리자 배치 여부	
		6) 온라인정보 업데이트 및 준수 여부	
	4. 위생 관리	1) 위생서비스 제공 (방역물품 제공 여부)	
		2) 영업장 정기적 소독 여부	
		3) 화장실/샤워실 품질 상태	
		4) 화장실/샤워실 환기 및 배수 상태	
		5) 분리수거대 청결관리 상태	
	5. 실내 관리 *글램핑 또는 카라반 시설 설치 운영사업자 해당	1) 객실 청결 상태	
		2) 침구류 청결 상태	
		3) 객실 내 화재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상태	
		4) 객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5) 객실 환기 상태	
	6. 글램핑 구조 관리 *글램핑 운영 사업자 해당	1) 소재 확인(방염 처리된 천막 등)	
		2) 비상 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	
		3) 글램핑장 관련 시설의 적법성(건축법 등)	위법 시 인증 불가
	7. ESG경영 관련 활동 *가점항목	1) ESG 경영관련 활동 증빙 확인 시 가점 부여	활동 개수에 따른 차등점수
특성화	A. 친환경 및 탄소중립	1) 친환경 및 탄소중립 시설(전기차 충전소 등)	활동 개수에 따른

구분		평가지표	비고
항목		2) 친환경 및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차등점수
	B. 안전 특화	1) 응급 의료 대응 시설(자동심장충격기 등)	
		2) 관리자의 안전요원, 응급처치사 자격 여부	
	C. 무장애	1)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여부	활동 개수에 따른 차등점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업소 인증 여부	
	D. 체험프로그램	1) 여가 레크리에이션 시설	활동 개수에 따른 차등점수
		2) 여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E. 반려동물 친화	1) 반려동물 이용 시설	활동 개수에 따른 차등점수
		2)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한국관광품질인증·여타업종 평가지표 참조 작성

■ (기대효과)

- 야영장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야영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야영장 선택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음. 특히 불법 미등록 야영장, 변경 미신고 야영장, 비합리적 요금 및 예약 관련 문제, 안전 및 위생 관리 문제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야영장 정보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야영장 사업자로 하여금 객관적 기준을 통한 자체점검과 인증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음. 또한, 현재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부 불명확한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평가기준(안)을 제시하여 사업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음. 인증 받은 야영장의 경우 타 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야영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정부 차원에서는 인증제를 통한 야영장업 관리 및 활성화 정책 추진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 현재 다수의 야영장 실태 점검 결과 빈번하게 발견되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 미이행, 변경 등록 미준수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인증제를 마련하여 적법한 허가 이행 및 관련 법 준수를 촉진할 수 있음.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한 특성과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방향에 부합한 야영장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② 야영장업 정보 게시 의무화

■ (필요성)

- 미등록 야영장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안전·위생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음. 그럼에도 미등록 야영장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고, 이용자가 등록 야영장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음
- 야영장 이용 요금이나 환불 관련 정보 역시, 이용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최근 야영 수요 증가에 의해 이용 요금 역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정보를 통해 적정 가격 형성을 도울 필요가 있음
- 한편 가족단위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야영장 내 수영장이나 트램펄린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러한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등록 야영장의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혹은 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 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정보 게시 의무는 없어 이용자들이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개선 방안)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제7호 ‘그 밖의 준수사항’을 추가(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야영장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등록 야영장 표시, 요금 및 환불 정보 게시,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정보 게시를 추가함
- 등록 야영장 여부와 요금, 손해배상 관련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건전한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이용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등록 야영장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병행하여야 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기]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개정(안)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이하 생략) ...

...

7. 그 밖의 준수사항 (신설)

가. 야영장업 사업자는 야영장 관리실(동) 입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야영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야영장업 사업자는 야영장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야영 이용 요금표 및 환불 기준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요금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른다.

다. 야영장업 사업자는 야영장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책임보험 혹은 공제 가입을 나타내는 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등록 야영장 표시, 요금 및 환불 정보,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정보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음. 그리고 등록 야영장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미등록 야영장이 이용자들의 선택에서 제외되어 자연스럽게 야영장업계에서 근절되기를 기대함

3)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야영 공간 확대: 공공야영장 확대

■ (필요성)

- 공공야영장은 비용이 저렴하고 시설이나 환경이 양호하여 주말 예약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높으나, 우리나라의 공공야영장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함.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낮은 편이고, 민간 야영장의 경우에도 수도권 등 주요 도시와 근접한 거리에 입지한 야영장은 인기가 높아 예약이 어려움
-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야영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1순위를 질문한 결과, 공공야영장 확대가 26.5%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용자들도 공공야영장 부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

■ (개선 방안)

- 수도권 유흥지 등 국·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야영장 조성을 추진하고, 각 부처와 협력하여 소관부처의 야영장 조성을 확대함. 부처 소관의 공공야영장 조성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함. 또한 공기업 등이 공공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공공야영장 조성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음
- 경영이 원활하지 않아 휴업 중인 공공야영장을 정비하고 다시 운영하게끔 하여 공공야영장 공급을 확대함. 또한 기존 운영 중인 공공야영장의 규모를 확장하여 공급을 확대함
- 공공야영장 신규 및 확장 조성 시, 오토캠핑 사이트(야영 공간) 설치 비율을 높이고 차박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와 덤프스테이션을 조성하도록 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박 수요에 대응하도록 함. 또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야영장으로서 이용 편의성과 친환경 야영장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기대효과) 공공야영장은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함. 즉, 공공야영장의 확대는 국민여가 복지 차원의 접근임. 또한 최근 높은 야영 수요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야영장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공공야영장을 조성해 공급 부족 상황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 야영장업의 표준을 상향시킬 수 있음

4) 야영장업 조성 진입 규제 완화

- (필요성) 다른 관광사업과의 형평성과 「관광진흥법」이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규임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의 진입 규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관광진흥법」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영장업 개발 면적과 관련한 기준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이 야영을 할 수 있는 1개 사이트의 최소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야영장 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최대 기준, 그리고 전체 야영장 부지 면적

- 최대 기준이 있음. 또한 야영장업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 가운데, 보전녹지
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업을 등록할 경우 전체 부지면적의 제한을 둬
- 이러한 기준에 맞춰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30개 내외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야영장만 조성이 가능함.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
하며, 수익성이 있게 야영장을 조성·운영하려면 이보다는 사이트 개수가 커야 한
다는 게 야영장업 사업자 측의 문제 제기임. 즉, 민간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야
영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약하는 진입 규제로 볼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야영장 개발부지 면적은 야영장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개발행위허
가 규모를 보전녹지지역은 5천㎡ 미만, 그리고 관리지역은 3만㎡ 미만으로 규
정하고 있음. 즉, 야영장업 입지가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동 법에 따르면
3만㎡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1만㎡까지만 야영장 개발이 가능함

■ (개선 방안)

- 현재 조례에 의거해 야영장업이 입지 가능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난개발 예방과 자연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전체 부지면적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건축물의 조성 면적을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까지로 두고 있고, 이용자들에게 야영공간
(사이트)을 제공하는 것이 중심인 야영장업의 특성상 다른 개발행위에 비해 자
연훼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부지면적 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야영장 시설을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
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대한 내용을
「관광진흥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야영장업의 공통기준에 건축물
의 바닥면적 합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p>4. 관광객 이용시설업</p> <p>다. 야영장업</p> <p>(1) 공통기준</p> <p>(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p> <p>(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p> <p>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p> <p>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p>	<p>4. 관광객 이용시설업</p> <p>다. 야영장업</p> <p>(1) 공통기준</p> <p>(아)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p> <p>(자) (아)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p> <p>—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p> <p>—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p>

- (기대효과) 증가하는 야영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야영장 공급이 가능해 질 수 있음. 야영장 사업자 측면에서 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야영장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음. 전체 부지 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개발의 기초는 그대로 살려 자연친화적인 야영장 조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5) 야영장업 등록 시 애로·장애요인 해소

① 야영장업 등록업무매뉴얼 개정

-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야영장업 등록 업무 시 판단이 어렵다는 점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등록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다양해지는 야영장업 행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음
- (개선 방안)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동일한 판단을 하고, 해당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우선임
 - 현재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예시로 들어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함. 이때 사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등록업무 수행 시 놓치기 쉬운 점들을 짚어줌
 - 현행 업무 매뉴얼은 야영장을 신규로 조성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정보를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실제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야영 공간(사이트)을 마련하여 야영장업 등록을 하는 경우나, 과거에 야영장을 운영하던 곳을 인수해 리모델링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음. 2015년 야영장업 등록 제도가 마련되고, 「건축법」 등 타 법령의 야영장업 관련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타 용도의 시설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짐. 이러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함
- (기대효과)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야영장업 등록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음. 또한 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음. 업무 담당자에 따라 등록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감소시켜, 행정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② 등록 소요 기간 현실화

- (필요성) 야영장업 등록 신청 시 처리 기한이 7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야영장업은 개발 행위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와 하수 처리, 건축 등 타 부서 협의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 이후 7일 이내에 등록업무를 완료하기는 현실적으

로 어려움.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자 심층인터뷰 시, 실제 2-3주가량 소요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 야영장업과 같이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일종인 종합휴양업은 등록 처리기한이 12일이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모두 14일임

- (개선 방안) 현재 야영장업 등록 처리기한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인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내에 명시되어 있음. 서식으로 제공하는 양식 내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비교적 변경이 수월함.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점, 다른 관광객이용시설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4일(안)로 변경함
- (기대효과) 행정 업무의 처리는 사전에 공표한 기한 내에 완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이 지연될 경우 사업자의 영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도 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되, 실제 이행하기 어려운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만약의 경우 발생 가능한 민원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음

③ 등록서류 내 상세 시방서 제출

- (필요성)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은 현재 야영장 내 편익시설로 분류되며, 설계도상 공란으로 표현됨. 그러나 최근 건축물에 준하는 글램핑과 트레일러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위한 현장 확인 과정에서 등록 가능 여부를 놓고 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짐. 따라서 사전에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조성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야영장업 등록신청 시, 시설 평면도와 배치도를 제출할 때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시설의 소재와 구조, 급배수 시설에 대한 상세 시방서를 포함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인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내 신청인 제출서류에 시설 평면도와 배치도 부분에 야영장업의 경우 상세 시방서 포함(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 설치에 한하여)이라고 명시함
 - 사업자가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상세 시방서와 배치도를 제출해 사전에 적절성 여부를 검토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개정(안)

신청인 제출서류 /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신설)

가. 야영장업: 상세 시방서 포함(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설치에 한하여, 소재 및 구조, 급배수시설 등 포함)

- (기대효과)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설치 형태에 대하여 관련 행정 부서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시설물 설치를 예방할 수 있음. 또한 야영장업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사업자 간의 갈등, 사업자의 재산상 손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음

6) 야영장 이용자 안전 관리 강화

■ (필요성)

-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가운데 하나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임. 이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가 설치하는 야영 시설인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이용자가 직접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가 어려움
- 더욱이 야영 수요가 높아지면서 처음 야영을 시작하거나 야영 경력이 길지 않은 이용자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야영장업 사업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개선 방안)

- 현재 야영장 사업자가 설치하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내부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위생기준 내 1. 화재 예방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안전사고의 일환이므로,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추가할 수 있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개정(안)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이하 생략) ...

...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설)

라. 사업자는 야영장 기본시설 이용객에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해 주어야 한다.

- (기대효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해 줌으로써, 야영 시 숯불이나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사업자가 경보기를 대여해 주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해 상기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음

6. 결론 및 정책 제언

가. 결론

- 코로나19로 인해 야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야영 수요와 공급의 양적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2015년 2월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같은 해 3월 강화도 야영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야영장의 안전·위생과 관련한 세부 대책을 계속하여 마련해 왔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야영장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야영장 관리 실태 조사 결과 상당수 야영장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더욱이 최근 들어 새로운 야영 시설인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가 늘어나면서 현행법과 현장의 괴리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법·제도를 합리화하여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야영장업을 활성화하

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

- ‘야영장업 활성화’는 야영장 이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것을 의미함
-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야영장 이용 수요를 확대하고, 안전, 자연환경 보전 등의 기본 원칙 아래, 야영장업 등록 및 운영 시 제약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야영장업계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 국민의 편의 등과 관련한 법·제도는 새롭게 제안함. 또한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을 봉합하기 위한 땀 질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함. 다만 야영장 이용자, 사업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각 주체의 요구와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
- 첫째, 야영장업 관리를 체계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영장업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등록기준을 정비함. 또한 외부 전문조직을 통한 야영장업 관리·감독 및 컨설팅을 실시함. 둘째, 야영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자발적인 야영장업 품질관리를 유도하고자, 특성화 야영장 인증제와 야영장업 정보 게시 의무화를 추진함. 이는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도 맥이 닿아 있음. 셋째, 이용자들의 향유 기회를 높이고, 민간야영장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공야영장을 확대함
- 넷째, 다양한 규모의 야영장 공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야영장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함.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야영장 사업자가 등록 시 겪고 있는 애로 및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i) 야영장업 등록업무 매뉴얼 개정, ii) 등록 소요 기간 현실화, iii) 등록서류 내 상세 시방서 제출을 시행함. 여섯째,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반 텐트사이트 이용자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의무화를 추진함

나. 정책 제언

① 야영장업 관리 체계화 중요

- 현재 야영장업은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이미 다수의 야영장이 조성·운영되는 상황에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가 신설되고, 각종 법규가 마련되면서 야영장업 관리 기틀을 마련해 왔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그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땀질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임. 야영장업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그에 부합한 등록기준뿐 아니라 안전·위생기준 등 전반적으로 개편이 필요함
- 또한 야영장업 법 위반 등 이력 관리를 통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3년간 제외 조치, 영업정지 상태에서 영업 행위 적발 및 위법 사항 3번 누적 시 야영장업 등록 해지 등 세부 적발 내용과 경과에 따라 차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자 가운데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일종으로서 야영장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현재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임

② 야영장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 정책 목표 설정 필요

- 이상의 근본적인 체계 개편에 앞서 야영장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최근 많이 조성되고 있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등의 야영 시설에 대한 관점임. 당초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새로운 야영 경험을 제공하고자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가 설치되었지만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만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음. 그리고 글램핑 소재 완화, 공동시설 설치 부담 완화 등을 주장하는 사업자의 목소리와 함께 숙박업자와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음. 민간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되, 야영장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야영장업 정책의 중심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③ 효과성 높은 정책 지원 사업 확대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과 안전한 야영 문화 확산 캠페인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때 법으로 규정한 등록기준이나 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실히 준수하는 사업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지원의 효과를 배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사업자의 필요 사항을 사전에 청취하여 더욱 체감도 높은 지원 사업 방식과 내용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야영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야영장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세분화되고 있으므로 시설 개선뿐 아니라 세무, 경영, 활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함
- 무엇보다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야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영장 이용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이용자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함. 또한 야영장 이용자가 등록 야영장을 확인하고, 등록 야영장만 이용할 경우 미등록 야영장은 자연히 근절될 수 있음. 이처럼 이용자의 선택을 통해 바람직한 야영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으므로, 야영장 이용자 대상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여야 함

④ 고캠핑 사이트 개선

- 우리나라는 민간야영장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80%)임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부재함. 이에 객관적인 야영장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고캠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야영장 이용자의 이용률 및 인지도가 낮음
 -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약 25%가량이 고캠핑에서 야영 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야영장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에서도 응답자의 50%가 고캠핑 사이트를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함
 - 고캠핑 사이트를 알고 있는 100명의 응답자 가운데, 8.0%만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함. 미사용 이유로 고캠핑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야영장 선택 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어렵고, 부정확한 정보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음

- 고캠핑 사이트의 개설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사이트로 개선이 필요함. 현재 고캠핑 사이트는 국민들에게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야영장업 사업자 대상 정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온라인 안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우선 야영 이용자들이 정확한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관광공사가 야영장을 직접 방문 취재하여 사진과 이용자, 사업자 인터뷰 등을 실는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임

⑤ 후속 연구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안)은 각 안마다 충분한 논의와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함. 야영장 이용자(국민), 사업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특히 야영장업 분류 체계 개편과 등록기준 개정 등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관광진흥법」의 야영장업 관련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이 필요함
- 특성화 야영장 인증을 위해서도 인증 평가 지표와 배점, 평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함
- 한편 전국의 야영장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물론 등록 야영장만 2천여 개가 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하나, 야영장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데이터 확보가 중요함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7
3. 연구 수행체계	8
제2장 야영장업 법·제도 현황 분석	11
제1절 야영장업 관련 법령 현황	13
1. 야영장업 정의 및 종류	13
2. 야영장업 관련 법령	17
3. 관광진흥법 내 야영장업 법령 개정 연혁	24
4. 야영장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31
제2절 야영장업 제도 및 지원 사업 현황	35
1. 야영장업 품질 관리 제도	35
2. 야영장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36
제3절 분석 종합 및 시사점	41
1. 분석 종합	41
2. 시사점	44
제3장 야영장업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 분석	47
제1절 야영장업 수요 및 공급 현황	49
1. 야영장 수요 현황	49
2. 야영장 공급 현황	55

제2절 야영장업 관리·운영 실태	63
1. 야영장 관리 실태	63
2. 야영장 안전사고 및 화재, 분쟁 실태	68
제3절 분석 종합 및 시사점	72
1. 분석 종합	72
2. 시사점	76
제4장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 이슈 및 사례 분석	79
제1절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 이슈	81
1. 법·제도 개선 이슈 도출 체계	81
2. 심층인터뷰 조사	82
3. 언론 기사 및 인터넷 커뮤니티 조사	88
4.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 이슈 및 과제 선정	94
제2절 유사 법·제도 사례 분석	105
1. 사례 분석 개요	105
2. 등급제 및 인증제	106
3.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	139
4. 가격 및 사업체 등록 정보 게시	144
5. 사례 분석 시사점	147
제5장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49
제1절 기본 방향	151
1. 제도 개선 관점	151
2. 제도 개선 방향	153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154
1. 야영장업 관리 체계화	154
2. 객관적 정보 제공과 자발적 품질 관리 유도	162
3.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야영 공간 확대: 공공야영장 확대	171
4. 야영장업 조성 진입 규제 완화	173
5. 야영장업 등록 시 애로·장애요인 해소	179
6. 야영장 이용자 안전 관리 강화	182

제6장 결론 및 제언	185
-------------------	-----

제1절 결론	187
--------	-----

제2절 정책 제언	189
-----------	-----

참고문헌 /193	
-----------	--

ABSTRACT / 197	
----------------	--

부록 / 199	
----------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203
-------------	-----

제2절 야영장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204
---------------------	-----

제3절 야영장업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208
----------------------	-----

제4절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212
-------------------------	-----

표 목차

〈표 1-1〉 주요 연구 방법 개요	8
〈표 2-1〉 야영장별 시설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14
〈표 2-2〉 야영장 시설의 종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15
〈표 2-3〉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시설 예시	15
〈표 2-4〉 타 부처 야영장 관련 법률	16
〈표 2-5〉 야영장 입지 가능 용도지역	18
〈표 2-6〉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20
〈표 2-7〉 야영장업 등록취소 사유(「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23
〈표 2-8〉 야영장업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3)	24
〈표 2-9〉 2019년 강화된 안전·위생 기준	28
〈표 2-10〉 야영장업 관련 주요 개정 연혁	30
〈표 2-11〉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내용	32
〈표 2-12〉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34
〈표 2-13〉 야영장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39
〈표 3-1〉 연도별 야영 인구수	50
〈표 3-2〉 이용자 캠핑 경력	51
〈표 3-3〉 야영 시 선호하는 시설 유형	52
〈표 3-4〉 야영 정보 습득 경로	53
〈표 3-5〉 야영 정보 습득 인터넷 사이트	53
〈표 3-6〉 야영장 선택기준별 중요도	54
〈표 3-7〉 2019~2020 권역별 등록 야영장 수	57
〈표 3-8〉 2020 권역별·규모별 등록 야영장 현황	57
〈표 3-9〉 사이트 유형별 현황	58
〈표 3-10〉 사이트별 운영 업체 현황	59
〈표 3-11〉 2019~2020년 응답 표본 야영장 매출액	60
〈표 3-12〉 권역별·규모별 응답 표본 야영장 매출액	61
〈표 3-13〉 권역별·고용형태별 응답 표본 야영장 종사자 수	61

〈표 3-14〉 응답 표본 야영장 편의시설 보유 현황	62
〈표 3-15〉 전국 50개 등록 야영장 실태 점검 결과	67
〈표 3-1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 내용 현황	69
〈표 3-17〉 100개 야영장의 약관 조사 결과	71
〈표 3-18〉 야영장 관리·운영 실태 조사 결과	75
〈표 4-1〉 심층인터뷰 개요 및 내용	83
〈표 4-2〉 언론 기사 검색 개요	88
〈표 4-3〉 언론 기사 분석 결과	90
〈표 4-4〉 인터넷 커뮤니티 불만 사항 조사 결과	91
〈표 4-5〉 법·제도 개선 이슈 평가 결과	103
〈표 4-6〉 사례 분석 대상 및 내용	105
〈표 4-7〉 캠프 협회의 캠핑장 인정 사업 기준	106
〈표 4-8〉 일본 오토캠핑 협회 등급 설명	108
〈표 4-9〉 일본 오토캠핑장 평가 기준	109
〈표 4-10〉 프랑스 야영장 등급 평가 항목(고객서비스)	113
〈표 4-11〉 프랑스 야영장 등급 평가 항목(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114
〈표 4-12〉 프랑스 야영장 등급 현황(2021)	115
〈표 4-13〉 국립공원 야영장 등급별 시설 및 서비스	117
〈표 4-14〉 국립공원 야영장등급제 세부 평가기준	117
〈표 4-15〉 국립공원 야영장 등급 평가 결과	119
〈표 4-16〉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부문	121
〈표 4-17〉 현장심사 필수항목(체험부문)	123
〈표 4-18〉 체험부문 공통항목 및 배점	123
〈표 4-19〉 현장심사 필수항목(교육부문)	124
〈표 4-20〉 교육부문 공통항목 및 배점	125
〈표 4-21〉 현장심사 필수항목(음식부문)	126
〈표 4-22〉 음식부문 공통항목 및 배점	126
〈표 4-23〉 현장심사 필수항목(숙박부문)	128
〈표 4-24〉 숙박부문 공통항목 및 배점	128
〈표 4-25〉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개정 평가표	130
〈표 4-26〉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개정에 따른 등급결정 예시	131
〈표 4-27〉 호텔업 등급결정 기준	134
〈표 4-28〉 호텔업 등급평가 구분 및 등급평가단의 구성	135

〈표 4-29〉 인증대상 및 기준	136
〈표 4-30〉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	137
〈표 4-31〉 인증 대상별 현장평가 통과기준	137
〈표 4-32〉 인증심사 및 평가방법	138
〈표 4-33〉 사업별 필수 사항	138
〈표 5-1〉 야영장업과 (관광)숙박업의 정의	155
〈표 5-2〉 야영장업 안전·위생 관리 체계에 대한 인식	159
〈표 5-3〉 등급제 및 인증제 적용 필요성	164
〈표 5-4〉 야영장업 인증제 평가지표(안)	166
〈표 5-5〉 공공야영장 현황	171
〈표 5-6〉 야영장 이용자들의 개선 필요사항 1순위	172
〈표 5-7〉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야영장 개발 규모 규정	174
〈표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175
〈표 5-9〉 「건축법」 시행령의 야영장 시설	176
〈표 5-10〉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77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9
[그림 2-1]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	14
[그림 3-1] 야영장 동반자 유형	51
[그림 3-2] 등록 야영장 운영 업체 수	55
[그림 3-3] 사이트 유형 구분	58
[그림 4-1] 제도 개선 이슈와 과제 도출 체계	81
[그림 4-2] 야영장 이용자 불만 사항 관련성 분석(KJ법)	94
[그림 4-3] 야영장업 활성화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 이슈	101
[그림 4-4] 우량·인정 캠핑장 리스트	107
[그림 4-5] 홈페이지 내 별 등급 정보 제공 예시	110
[그림 4-6] 프랑스 야영장 등급 평가 체계	112
[그림 4-7] 농촌체험마을 등급결정 현황 이미지	120
[그림 4-8] 농촌관광사업 등급심사 추진체계	121
[그림 4-9]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 현황	141
[그림 4-10] 프랑스 야영장 정보 게시 사례	146
[그림 5-1] 제도 개선 방향	152
[그림 5-2] 현행 야영장업 관리 방식의 필요성	158
[그림 5-3] 야영장업체 대상 안전 교육에 대한 업계 의견	159
[그림 5-4] 가칭) 야영장업 안전자문단 운영 체계(안)	161
[그림 5-5]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등록기준(예시)	178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야영장 관련 수요와 공급의 급증, 양적 성장 지속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다양한 야외활동에 대한 참여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야영(캠핑) 수요는 2010년 전후로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도시나 인기 관광지보다 한적한 여행지, 야외 공간에서 소규모로 즐기는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영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다수의 야영장이 신규로 조성 및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캠핑인구는 689만 명(한국관광공사, 2021)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9년 538만 명 대비 약 28% 증가한 수치이다.¹⁾ 또한 캠핑산업 규모는 2019년 3조 1천억 원에서 2020년 5조 8천억 원(한국관광공사, 2021)으로 약 90% 증가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국의 야영장 숫자는 야영장업 등록 야영장 기준으로 2019년 2,233개에서 2020년 2,363개로 약 6%(130개소)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야영장업 등록 야영장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고캠핑 사이트에는 2022년 4월 기준 2,977개의 야영장이 등록되어 있다.²⁾

나. 야영장의 질적 관리 필요성 부각

정부는 2014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4.10.28. 일부개정, 시행 2015.1.29.)을 통해 일반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으로 추가 신설하여 일반야영장업 등록제(야영장업 관광사업자 등록 기준 제시)를 시행하였다.³⁾ 또한 2015년 「관광진

1) 2020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2021) 결과에서 숙박과 당일 이용자를 합산한 수치이다. 숙박 캠핑인구를 기준으로 2019년 399만 명에서 2020년 534만 명으로 약 34% 증가하였다.

2) 검색일: 2022년 4월 28일, <https://www.gocamping.or.kr/>

흥법」을 개정(2015.2.3.일부개정, 시행 2015.8.4.)해 야영장업 정의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근거를 마련하여 야영장을 관광객 이용시설로서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야영장 등록 활성화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영장 화재 및 안전사고,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야영장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상당수 야영장이 각종 인허가와 안전·위생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리가 미흡함을 나타내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 이는 야영장업계 전체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어 우려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최근 전국적으로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갖춘 야영장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 위생, 품질 등 질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 법·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새로운 야영 시설로서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야영장업 관련 법에는 이러한 신종 시설에 대한 명확한 조성 및 관리 기준이 부재해 야영장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 현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다.

한편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동법 제19조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야영장에 대해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국립공원 야영장을 제외하고 전체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0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야영장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야영장업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영장업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를 포함해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1988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1988.12.31.일부개정, 시행 1988.12.31.)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 내 자동차야영장업을 신설하고 등록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등록기준이 까다로워 2012년 기준 21개소의 야영장이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이는 전체 야영장 대비 2% 수준에 불과하였다(김윤영, 2013).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야영장업의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야영장업 실태와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야영장 이용자와 사업자, 지자체 담당자,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주요 제도 개선 이슈를 도출하며, 제도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은 야영장업 활성화와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데 방향성을 두어 규제적 성격으로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야영장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야영장업 활성화이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대상적 범위

본 연구는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내 야영장업(자동차야영장업, 일반야영장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나.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야영장업을 본격적으로 제도에 편입해 관리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다만 현재 기준 최신 자료 기준으로 실태 분석 등을 수행하여 캠핑인구, 등록 야영장 현황 등은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국 일원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야영 사이트를 조성해 야영장업을 등록·운영하는 공간 모두를 포함한다.

다.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로서 내용적 범위는 야영장업과 관련한 법·제도 현황, 관리·운영 실태를 살피고 개선 과제를 도출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야영장업 법·제도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야영장업 제도 관련 개선 이슈를 도출하고,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이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언론 기사 분석, 커뮤니티 후기 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심층인터뷰(야영장 이용자, 야영장업 사업자,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전문가), 설문조사(야영장 이용자, 야영장업 사업자,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해 다차원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연구 틀을 설정하고,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등을 비롯해 야영장업과 관련한 법제도의 변화와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관점에서 야영장업의 현재를 파악하였다. 또한 관광산업조사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등의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야영장업과 관련한 수요와 공급 현황을 진단하였다. 야영장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와 야영장 관련 안전 사고 및 분쟁 사례 등을 분석해 야영장업 관리 실태를 살펴보았다.

야영장 이용자, 야영장업 사업자,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등 18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야영장업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이슈를 도출하였다. 특히 현장조사, 야영장 관련 언론 기사, 인터넷 커뮤니티 후기 등을 분석해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관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도출하였다. 언론기사는 2021년1월부터 2022년4월까지 각종 언론매체 기사 가운데 야영장(캠핑장)과 문제를 키워드로 검색해 추출한 67건의 기사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커뮤니티 후기는 국내 최대 야영 관련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불만 사항을 포함한 428건의 후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와 인터넷 조사를 통해 앞서 도출한 제도적 개선점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고, 현재 우리의 야영장업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 방안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황 진단과 분석, 사례 연구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리하고, 야영장업 사업자와 이용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담당자 등의 토론회와 의견 수렴,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주요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야영장 이용자 200명, 야영장업 사업자 51명,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표 1-1〉 주요 연구 방법 개요

구분	개요	주요 목적 및 내용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야영장(시설관리공단 운영): 일반야영장업,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보유 - 공공야영장(민간 위탁 운영): 일반야영장업, 기본시설(야영 사이트)만 운영 - 국립공원 야영장(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 일반야영장업 - 민간야영장: 일반야영장업, 펜션 + 글램핑 운영 ◦ 기간: 2022년3월~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조성 및 운영 현장 조사 ◦ 공공/민간 및 운영 주체, 시설 보유 형태 등을 구분하여 조사 대상 선정
심층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인터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1: 야영장 이용자 3명 - G2: 야영장업 사업자 5명 - G3: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4명 - G4: 전문가 6명 ◦ 기간: 2022년 3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개선점, 애로사항, 한계 등 조사 ◦ 그룹별 특성에 따라 반구조화된 설문지 설계
언론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매체: 각종 일간지, 방송사, 전문지 ◦ 검색어: 캠핑장&문제, 야영장&문제 ◦ 검색기간: 2021년1월~2022년4월 ◦ 분석대상: 중복 기사 제외 6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관련한 문제, 사회적 이슈 등 파악
인터넷 커뮤니티 후기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매체: 2007년 개설해 95만여 명 회원 수 보유 인터넷 커뮤니티 ◦ 검색어: 불만 ◦ 검색기간: 2021년1월~2022년4월 ◦ 분석대상: 428건 게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관점에서 제기되는 야영장 관련 문제점 파악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대상(유효표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1: 야영장 이용자 200명 - G2: 야영장업 사업자 51명 - G3: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38명 ◦ 기간: 2022년 7월~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개선 방향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주: 연구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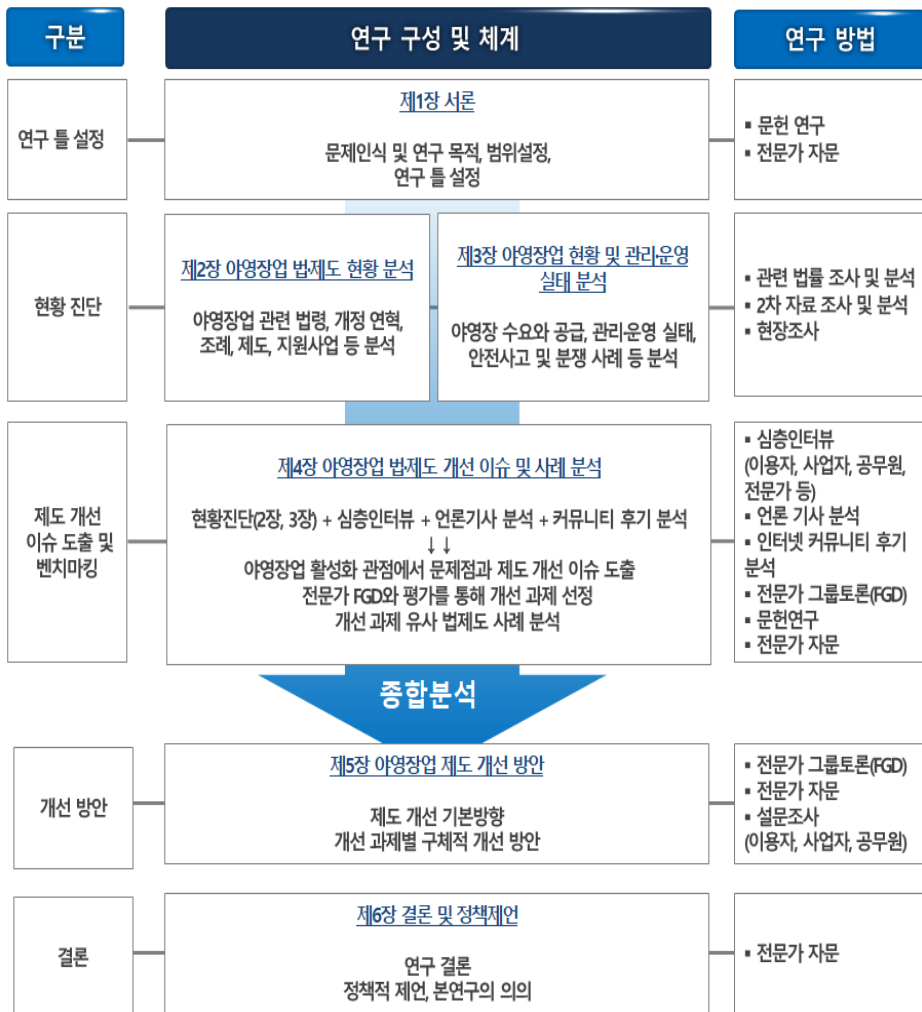
3. 연구 수행체계

본 연구는 수요와 공급 양적 측면에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야영장업의 질적 성장과 안정적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로서 크게 여섯 개 장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수행 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인식 단계로서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야영장업 관련 법·제도 현황과

개정 연혁 등을 분석함으로써 법·제도 관점에서 야영장업의 객관적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야영 수요와 공급, 야영장업 운영·관리 등 현장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넷째, 앞서 파악한 야영장업 관련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토대로 실제 야영장업 등록부터 운영, 안전관리까지 각 이해관계자의 목소리 등을 수렴해 법·제도적 관점의 개선 이슈 및 개선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개선 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벤치마킹하였다. 다섯째 야영장업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2장

야영장업 법·제도 현황 분석

제1절 야영장업 관련 법령 현황

1. 야영장업 정의 및 종류

1.1. 야영장업 정의

야영장업의 근거 법은 「관광진흥법」이며, 동 법령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등록·관리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때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야영장업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야영장업을 (i) 일반야영장업과 (ii) 자동차야영장업의 2종류로 구분(제2조제1항제3호다목)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아래 <표 2-1>와 같은 시설기준을 적용(별표1)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i) 일반야영장업은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주차공간이 따로 분리된 곳을 말한다. (ii) 자동차야영장업은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주차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주차한 자동차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는 야영장에서 조성하는 편의 시설 중 하나로서 야영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야영 장소(사이트)의 한 형태일 뿐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즉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는 야영장에서 제공하는 시설의 종류이지 업종이 아니다.

〈표 2-1〉 야영장별 시설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구분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
야영지 규모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이상 확보할 것	차량 1대당 50㎡이상의 야영공간(차량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시설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줄 것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 줄 것
진입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 확보할 것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비상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 줄 것 • 야영장 규모를 고려해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할 것 •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확보할 것 • 비상시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세부업종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야영장은 상수도나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입지에 따라 간이 화장실 설치도 가능 • 자동차야영장은 상수도나 전기, 취사시설 등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며, 화장실도 공중화장실만 설치할 수 있음 • 최근 야영장 부지 내에 야영장비 설치만 가능한 캠핑장, 오토캠핑장, 글램핑, 카라반 등의 시설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곳이 많은데 이와 같이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이 혼재된 시설이 마련된 경우 등록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자동차야영장 등록기준을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음 	

주: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토대로 연구자 분석 및 정리

[그림 2-1]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주: 본 연구에서 현장조사 시 연구자 직접 촬영

1.3. 야영장 시설의 종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및 별표1에 야영장 시설을 기본시설, 편의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안전·전기·가스시설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표 2-2〉 야영장 시설의 종류(「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시설의 종류
1. 기본시설	야영텍(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일반야영장 및 자동차야영장 등
2. 편의시설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관리실·방문자안내소·매점·바베큐장·문화예술체험장·야외쉼터·야외공연장 및 주차장 등
3. 위생시설	취사장·오물처리장·화장실·개수대·배수시설·오수정화시설 및 샤워장 등
4. 체육시설	실외에 설치되는 철봉·평행봉·그네·줄구름·배드민턴장·어린이놀이대·놀이형시설·수영장 및 운동장 등
5. 안전·전기·가스시설	소방시설·전기시설·가스시설·잔물처리시설·재해방지시설·조명시설·폐쇄회로텔레비전 시설(CCTV)·긴급방송시설 및 대피소 등

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가운데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열거하고 있는 건축물 종류 가운데 제12호 수련시설, 제29호 야영장 시설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본 규정에서 열거한 시설 외에도 유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권자가 그 이용 형태 및 구조·기능,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 허가해 주어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1b).

요컨대 야영장 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과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따라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충족함과 동시에 300㎡ 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표 2-3〉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시설 예시

구분	내 용
...	
12. 수련시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 타 법령별 야영장 구분

「관광진흥법」 이외에 타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유형의 야영장 조성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야영장은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하려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는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한다.

〈표 2-4〉 타 부처 야영장 관련 법률

구분	소관부처	근거법령	비고
청소년 야영장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고,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수련시설에 해당하며, 이는 다시 생활권 수련시설과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등) 및 유스호스텔로 구분 청소년야영장 시설 기준 명시
숲속 야영장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9조제3, 별표3-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 조성면적,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종류 및 기준 명시
자연 공원 야영장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공원 내 설치하는 공원시설 중 하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자연공원법 제19조제1항)에서 관할
관광 농원 야영장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농원 휴양 및 숙박시설로서의 야영장 관광농원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해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유원지 야영장	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원지 내 휴양시설로서의 야영장 유원지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의미 연간 4개월 이내 영업 시, 야영장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야영장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해수욕장 야영장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시설 연간 4개월 이내 영업 시, 야영장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

2. 야영장업 관련 법령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야영장 조성은 「관광진흥법」뿐 아니라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타 소관 법률에 근거할 수 있다. 다만 야영장 조성이라는 개발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허용 가능한 개발 행위에 따라 야영장 조성이 가능한 토지인지 확인하고 개발행위 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환경허가 등 사전 인허가 절차를 거쳐 허가 기준에 맞게 개발 후 준공검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완료한 이후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뒤 야영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야영장 입지·조성부터 야영장업 등록, 운영·관리, 위반 사항 제재까지 단계별로 관련 법령 현황을 살펴본다.

2.1. 야영장 입지·조성

야영장업은 용도지역에 따라 조성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업종이므로 해당 부지에 야영장 시설이 입지 가능한지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해 야영장 시설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위임해 놓은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도지역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는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으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또는 별표27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건축법」에 용도별로 건축물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야영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야영장 시설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수련시설로 분류하여 적용하였다. 야영장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허용 가능한 용도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 적용한다.

〈표 2-5〉 야영장 입지 가능 용도지역

용도지역			입지 가능 여부	조례 확인 필요 여부
도시지역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	×
		2종전용주거지역	×	×
		1종일반주거지역	△	○
		2종일반주거지역	△	○
		3종일반주거지역	△	○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
		일반상업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농지법, 산지법, 초지법	△	○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별법에서 개별행위 제한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b), 「2022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2.2. 야영장업 등록

청소년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야영장은 관광객에게 야영 시설을 제공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내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야영장업과 일반야영장업으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자동차야영이 가능한 사이트와 일반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분리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하되, 자동차야영이 가능한 사이트는 야영 사이트 규모 50㎡ 이상, 1차선 이상의 차로 등 자동차야영장업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① 등록 신청

야영장업 등록 및 관리 업무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으로 구분된다. 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i) 사업계획서, (ii)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iii)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iv)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에는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각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조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야영장 조성 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1b).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에는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에 의한 설비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야영장업의 등록사항 가운데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부지 면적의 변경,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를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② 등록 처리

등록 신청을 받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서류심사, 현장 확인, 등록 순의 절차를 수행하며, 등록신청서 내에 명시되어 있는 처리 기한은 7일 이내로 되어 있다. 서류 심사 시, (i) 야영장의 입지 및 안전한 곳에 위치 여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등록청 내 내부회의, 의견조회 등 활용), (ii)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고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iii)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상에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설비 구비 여부, (v)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21b). 또한 현장 확인 시, 야영장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에 건축, 환경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입지 위험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1b).

2.3. 야영장업 관리·운영

야영장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화재 예방, 전기 안전, 가스 안전, 긴급 대피, 사고 예방, 위생 관리 등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하지만 관리 실태 조사 결과, 상당수 야영장 사업자는 등록 시 등록기준에 맞추어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고, 추후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 및 위생 관리에 소홀하고 안전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관리 실태 조사 결과는 제3장에서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표 2-6〉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구분	내용
1. 화재 예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용품[야영장 내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서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으로 한정한다)의 총 사용량이 600와트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화기(火氣)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야영시설(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ii)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iii)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천막의 출입구는 비상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야영장 내 숯 및 잔불 처리 시설을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전기 사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설비는 전기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은 용품을 사용해야 한다.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에 위치한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굽힐 수 있는 전선관(가요(可撓)전선관)을 이용하여 적정 깊이에 매설하거나, 적정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의 파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 사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스시설 및 가스용품은 가스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가스용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품을, 가스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가스배관은 부식방지 처리를 하며,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을 처리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 가목2)다)의 기준에 따라 보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대피 관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장 내에서 들을 수 있는 긴급방송시설을 갖추거나 앰프의 최대출력이 10와트 이상이면서 가청거리가 250미터 이상인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 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게시판의 내용을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상황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야영장과 인접한 곳에 산사태, 홍수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 중 야영용 천막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접한 야영용 천막 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락이나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사실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시설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야영장 내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고 있는 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한다.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중대사고(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시간당 2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6. 위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고,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연 1회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야영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등 체육시설,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을 연구자 재구성

2.4. 법령 위반 사업자 제재

「관광진흥법」 제35조(등록취소 등)에 따르면 관할 기관 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아래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표 2-7〉 야영장업 등록취소 사유(「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1개월	취소
2)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 정지 1개월	사업 정지 2개월	사업 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동법 제7조 제2항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3.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2 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4.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5.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동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6.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동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 (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주: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야영장업과 관련한 것을 추출해 연구자 재구성

나. 과징금 부과 사유

사업의 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 그 사업의 정지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관광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야영장업에 대해서는 <표 2-8>과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표 2-8> 야영장업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	과징금액
1.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만원 80만원 120만원
2.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20만원
3.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4.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0만원

주: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야영장업과 관련한 것을 추출해 연구자 재구성

3. 관광진흥법 내 야영장업 법령 개정 연혁

야영장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여 야영장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성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1988년 12월 자동자야영장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일환으로 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5년 1월 시

행)하여, 일반야영장업을 신설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을 나누어 등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5년 2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2015년 8월 시행)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자에게는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즉, 야영장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것은 2015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일부 등록기준은 완화하였지만,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기준은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강화해 나갔다.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1988.12.31. 일부개정, 1988.12.31. 시행)

1988년 12월 31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관광사업 가운데 하나인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자동차야영장업을 신설하였다. 이는 당시 경제발전으로 자가용을 소유한 가정이 늘면서 자동차를 이용한 가족 단위 여행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가 야영, 취사 및 주차 등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1992.1.18.일부개정, 1992.1.18. 시행)

1992년에는 자동차야영장업 관련한 시설기준과 규제기준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규제가 과도한 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등록기준 가운데 입지 기준을 삭제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 가운데 ‘자동차의 급유에 필요한 시설,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시설 등’을 ‘공동취사시설 등’으로, ‘다목적 잔디광장, 정구장,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오락시설을 2종 이상 갖출 것’을 ‘2종 이상의 운동·오락시설을 갖출 것’으로 하는 등 과도한 사항을 완화하였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014.10.28. 일부개정, 2015.1.29. 시행)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가 증가하면서 야영장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사업자로는 자동차야영장업만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야영장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야영장과 더불어 일반야영장도 관광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입지·규모 등 등록기준을 규정하였다. 반면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종전의 등록기준 중 차량 1대당 80㎡ 이상의 야영공간 규모를 갖추도록 하던 것에서 50㎡ 이상만 갖추도록 완화하는 한편, 비상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소화기, 대피소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 기준을 신설하였다.

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15.2.3. 일부개정, 2015.8.4. 시행)

야영 수요 증가에 따라 전국적으로 야영장이 난립하면서, 야영장에서의 화재와 난로 폭발, 질식사 등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야영장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자에게는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감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야영장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객관적 정보를 근거로 야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야영장업자가 신청할 경우 야영장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15.3.6. 일부개정, 2015.3.6.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야영장업도 새로이 관광사업으로 등록하게 되자 이에 발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야영장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야영장업의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별 일람표를 추가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바. 「관광진흥법」 시행령 (2015.3.17. 일부개정, 2015.3.17. 시행)

야영장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야영장의 부지 면적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사. 「관광진흥법」 시행령 (2015.8.4. 일부개정, 2015.8.4. 시행)

「관광진흥법」의 개정(2015.2.3. 일부개정, 2015.8.4. 시행)으로 야영장업자가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한 야영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해 별표 2 제2호너목을 신설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이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안전·위생기준을 1차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15일, 그리고 3차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1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만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장실 시설 등 편의시설을 직접 갖추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완화(별표 1 제4호다목(3))하여 야영장업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15.8.4. 일부개정, 2015.8.4. 시행)

「관광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를 신설하고, 별표7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였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에 야영장 내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위생 기준을 포함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또한 야영장 사업자는 연 1회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자. 「관광진흥법」 시행령 (2016.3.22. 일부개정, 2016.3.23. 시행)

야영장 시설은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는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인 되도록 하며,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 미만,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을 보완하여 야영장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별표 1 제4호다목(1)).

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2018.6.5. 일부개정, 2018.6.14. 시행)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야영장업을 포함(제41조의9 신설)하였다.

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019.3.4. 일부개정, 2019.3.4. 시행)

대다수의 야영장이 산악지역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위치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야영장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야영장 이용자는 그 피해에 따른 배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자 야영장업자로 하여금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더불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등록신청을 받은 야영장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과 지하수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검사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야영장업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수질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또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야영장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고,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영용 시설 간에 3m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 외에도 야영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안전교육을 관리요원까지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하였다. 다만 온라인교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접근성과 교육 시간에 대한 야영장업자 측의 부담을 다소 완화해 주었다.

〈표 2-9〉 2019년 강화된 안전·위생 기준

구분	개정 내용	비고
1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제출하고(제2조제4항제3호의4),	2019.3.4. 시행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별표7)제6호	2020.1.1. 시행

구분		개정 내용	비고
2	야영장업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신설 (제18조제6항)	⑥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야영장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책임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 에 가입해야 한다.	2019.7.1. 시행
3	야영용 트레일러의 형태 명확화 (별표1)	2) 야영용 트레일러(동력이 있는 자동차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2019.3.4. 시행
4	야외 소화기 비치 시 보관함에 수납 (별표7)제1호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내부가 잘 보이는 보관함에 넣어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 하여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5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별표7)제1호	라.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야영용 시설에는 각 시설별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6	글램핑의 천막 등은 방염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 (별표7)제1호	마.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의 시설을 말한다)의 천막 등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7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사이 거리 기준 신설 (별표7)제1호	바.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제1호라목1) 및 2)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사목에서 같다)과 야영용 시설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거리 를 두어야 한다.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8	글램핑·야영용 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및 펠릿난로 사용 금지 (별표7)제1호	사.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 안에서는 화목 난로와 펠릿 난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	2019.3.4. 시행 기 등록사업자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
9	야영장 안전교육 강화 (별표7)제5호	타. 사업자와 관리요원 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한다)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20.1.1. 시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3.4.),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기준 강화된다(보도자료)

타. 「관광진흥법」 시행령 (2020.4.28. 일부개정, 2020.4.28. 시행)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인 야영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면적제한 등을 완화하여 폐교재산의 야영장 활용을 촉진하고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파. 「관광진흥법」 (2021.4.13. 일부개정, 2021.10.14. 시행)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야영장업에 대한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제19조제5항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136호)

야영장업 사업자가 제공하는 침구류 등에 대해 위생기준을 신설(별표7 제6호바목)하여 침구의 포와 수건은 이용자가 바뀌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도록 하고 수시로 햇볕에 건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표 2-10〉 야영장업 관련 주요 개정 연혁

개정일	구분	주요 개정 내용
1988.12.3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자동차야영장업 신설(제2조제3호라목)
1992.01.1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면적기준 삭제(별표1)
2014.10.28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일반야영장업 신설(제2조제1항제3호다목)
2015.02.03	「관광진흥법」 개정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 추가(제3조제1항제3호다목)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제20조의2) 야영장업 미등록 시 벌칙조항(제83조제2항) 신설 야영장업 등급제 근거(제19조) 마련
2015.08.04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별표 2 제2호너목) 야영장업 등록기준 완화(별표 1 제4호다목(3))
2016.03.22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야영장업의 등록기준 보완(별표 1 제4호다목(1))
2018.06.05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야영장업 포함(제41조의9)
2019.03.04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제2조제4항제3호의4)(별표7 제6호) (ii) 야영용 트레일러의 형태 명확화(별표1) (iii) 야외 소화기 비치 시 보관함에 수납(별표7 제1호) (iv)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별표7 제1호)

개정일	구분	주요 개정 내용
		(v) 글램핑의 천막 등은 방염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제품 사용(별표7 제1호) (vi)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사이 거리 기준 신설(별표7 제1호) (vii)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내 화목난로 등 사용 금지(별표7 제1호)
2020.04.28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폐교재산을 활용해 야영장업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제한 등 완화
2021.04.13	「관광진흥법」 개정	감염병 확산 시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 연기(제19조제5항)
2022.05.0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침구류 및 수건 세탁 의무화(별표7 제6호바목)

주: 연구자 정리

4. 야영장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관리·운영을 위해 광역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역도 가운데 경기도가 2015년에 가장 먼저 야영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이 제정하였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평군이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밖에 공공에서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다수의 조례가 있다. 위탁 운영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원도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와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4.1.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에서 제정한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한 내용을 기초로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남도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4개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라 도내 야영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야영대회 개최, 우수야영장 평가 및 지정, 야영 교육,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야영장 정보 제공, 캠핑 산업 발전 노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수 캠핑장을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야영장 이용자들에게 경기도의 우수한 캠핑장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야영장업 사업자들은 스스로 야영장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야영 활동에 공정 개념을 더한 ‘경기도형 공정캠핑 문화조성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였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의지와 관심에 따라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로 가평군이 유일하다. 가평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야영장이 입지해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평군의 조례에는 광역도 조례와 달리 지원 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점이 특징적이다. 조례에 따라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사업, 야영장의 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과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안전점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매년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함을 조례로 규정하였다.

〈표 2-11〉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내용

구분	조례명	주요 내용
광역	경기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10.13. 시행)	<p>제4조(야영장 육성 및 지원 계획 마련)</p> <p>제5조(캠핑대회 개최 등) ① 도지사는 캠핑 문화 확산, 안전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캠핑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6조(우수야영장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야영장 위생·안전기준」,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p> <p>제7조(야영 교육 등) ① 도지사는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캠핑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도민 또는 캠핑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캠핑 학교 또는 캠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p> <p>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8조(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운영자와 적극 협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 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수련활동을 위한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 단체학생이 야영장 시설사용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① 도지사는 도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캠핑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p>

구분	조례명	주요 내용
		제10조(캠핑산업 발전 노력 등) ② 도지사는 매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2020.6.29. 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6조(우수야영장 평가·지정) 제7조(야영 교육)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
	강원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2021.3.12. 시행)	제4조(야영장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야영대회 개최) 제6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제7조(야영 교육 등)
	충청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2021.4.30. 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야영대회 개최 등) 제7조(우수야영장 평가 지정) 제8조(야영 교육) 제9조(야영장 정보 제공 등)
기초	가평군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2021.5.12. 시행)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야영장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우수 야영장 지정업체 홍보 마케팅 및 컨설팅 사업 2. 야영장의 안전과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야영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우수 야영장 지정 등) 제6조(야영 교육) 제7조(야영장 정보 제공) 제8조(야영장 안전점검) 군수는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2.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이 밖에 공공에서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다수의 조례가 있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에는 시설 이용료, 시설 이용료의 감면, 시설 이용료 게시, 시설의 이용제한,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관리위탁 등,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적이다.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이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반적이다. 지자체 내에 야영장 시설의 관리·운영이 가능한 공기업이 있는 경우는 해당 공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와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표 2-12〉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

구분	조례명	주요 내용
기초	고성군 야영장 관리·운영 조례(2021.5.18. 시행)	제1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① 야영장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야영장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필요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관리위탁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경주시 해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 2021.11.16.]	제4조(관리·운영)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공동체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야영장업 제도 및 지원 사업 현황

1. 야영장업 품질 관리 제도

가. 야영장업 등급제

야영장 이용자에게 야영장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등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야영장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야영장 및 서비스 수준의 유지·관리를 효율화하고자 2015년 「관광진흥법」의 일부개정으로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아직 등급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등급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야영장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제에 야영장업자가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도 고려할 요소이다.

「관광진흥법」제19조 (관광숙박업 등의 등급)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관광숙박시설·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숙박업자 및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등급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4. 3. 11., 2015. 2. 3.〉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3. 11., 2015. 2. 3.〉
-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신설 2014. 3. 11.〉
- ...
- ⑥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급의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신청 시기·절차, 등급결정 결과 공표, 등급결정의 연기 및 유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4. 3. 11., 2015. 2. 3., 2021. 4. 13.〉

2014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독일과 일본,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립공원 내 야영장을 기반시설과 안전, 위생, 입지환경 등 4개 영역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국립공원 내 야영장에만 한정된 것으로 야영장업 등급제와는 무관하다. 다만 국립공원 내 야영장 등급제에 대해서는 제4장 사례에서 등급 구분과 평가 기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야영장업 품질인증제

2018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야영장업을 포함(제41조의10 신설)하여 등급제와 더불어 품질인증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품질인증은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일반음식점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야영장업의 품질인증을 위해서는 세부 인증기준 등을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해야만 비로소 문체부 장관이 인증기준(제41조의11)에 따라 평가한 후 인증서를 발급(제41조의12)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야영장업자의 수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41조의10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

2. 야영장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야영장 관련 정책은 2005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첫 시작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방갈로, 통나무집, 캠핑카, 야영장 등을 갖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하였다. 자연친화적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족단위 국민여가 활용 공간을 마련하

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2개년 동안 1개소 당 국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이양)사업으로 편성되어 각 시도 단
위에서 추진하고 있다.

나.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2015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마련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확충을 위하여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전기·가스시설과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 방송시설, 대피소, 안전·안내 게시물, 비상용발전기,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 처리시설 등의 안전시설과 급수·배수 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 시설 등의 위생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지원된다.

공공야영장은 개소당 최대 국비 4천만 원(국비 40%, 지방비 60% 매칭), 민간야영장은 개소당 최대 국비 2천만 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을 지원한다. 2015년 79개소를 지원하였고, 2016년 162개소, 2017년 115개소, 2018년 123개소, 2019년 상반기 134개소 등을 지원하였다. 2022년에는 국비 총 10.98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야영장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서 야영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획 프로그램에 대해 지원하며, 프로그램 당 국비 최대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된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숲속 음악회, 지역음악가 버스킹, 마술, 영화 상영, 공예품 만들기, 시인과 함께 하는 어린이 독서캠프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역 명사와 함께 하는 마을 여행 등의 지역 여행 프로그램, 카약이나 트레킹 등 레저스포츠 체험, 농촌 활동 체험, 서바이벌 게임을 비롯해 캠핑 요리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범주의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하다.

2016년 10개, 2017년 11개, 2018년 15개, 2019년 상반기 12개를 지원하였다.

2022년에는 국비 총 4.5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라.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2019년 사업자가 제공하는 글램핑 시설과 야영용 트레일러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에 의무화되고, 글램핑 시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야영장 가운데 글램핑 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를 운영하는 야영장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지원금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매하거나 화재 예방을 위하여 글램핑 시설의 방염 천막을 교체하고,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m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공공야영장은 개소당 국비 최대 3천만 원(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은 개소당 국비 최대 1.5천만 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을 지원한다.

2019년 상반기 8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2022년부터는 개인이 설치하는 텐트 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구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야영장이 지원 대상이며, 기본시설로 야영 텍 및 사이트를 운영 중인 모든 야영장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개인 텐트 이용자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분실 혹은 고장을 감안하여 야영장 사이트 수의 2~3배 수량을 구입할 수 있으며, 경보기 대여 운영 방법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운영하도록 한다. 공공야영장과 민간야영장 모두 개소 당 국비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은 공공야영장이 국비 40%, 지방비 60%, 민간야영장이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를 적용한다. 2022년 총 0.88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마. 캠핑카 관련 야영장 인프라 구축

캠핑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야영장 내 캠핑카 편의시설은 매우 제한적으로 설

치되어 있는 상황이다.⁴⁾ 이에 따라 공공야영장 내 캠핑카의 오폐수 처리시설인 '덤프스테이션(dump station)'을 구축하고자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캠핑카 수요 증가에 따른 야영장 이용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공공야영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체당 국비 최대 6천만 원(국비 40%, 지방비 60%)을 지원한다. 캠핑카 편의시설(전기, 급수, 오폐수 배출 등) 설치비 외에도 캠핑카 이용에 따른 진입로, 시설 내 도로 폭 및 사이트 면적 확대 등 캠핑카 이용에 따른 수용태세 개선비용을 포함해 지원하고, 시설별 야영 환경 여건에 따라 덤프스테이션 설치 유형을 다양화하여 추진할 수 있다. 2022년 국비 총 10.8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바. 친환경 안전캠핑 캠페인, 안전 교육, 홈페이지 운영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한국관광공사는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친환경 안전캠핑 캠페인, 안전 교육, 고캠핑 홈페이지 운영, 미등록 야영장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2020년 13억 원, 2021년 11.5억 원, 2022년 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있다.

〈표 2-13〉 야영장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

구분	추진사업	추진내용
2005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자연친화적이고 저렴한 가족단위 국민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추진 • 지원내용: 방갈로, 통나무집, 캠핑카, 야영장 등 조성 • 2016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방이양)
2015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2015년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이 마련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 지원내용: (안전시설) 전기·가스시설과 경보기, 재해방지사설, 조영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대피소, 안전·안내 게시물, 비상용발전기,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등 • (위생시설)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화장실 및 취사 시설 등 • 지원규모(국비): 공공야영장 최대 4천만 원, 민간야영장 최대 2천만 원
2016년~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2016년부터 체험·교육형의 가족단위 매력 있는 야영장 운영을 확산하고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 지원내용: 문화예술, 지역여행, 체험, 오락·가족 프로그램 등 지원 • 지원규모(국비): 시군구 지자체, 최대 1억 원
2019년~	야영시설 화재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2019년 야영장 편익시설인 글램핑, 트레일러 등에 대한 안전·위생

4) 2021년 11월 기준, 전국 등록 야영장 대상 조사 결과 총 17개소(전체의 0.6%)에만 캠핑카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구분	추진사업	추진내용
	확보 지원	<p>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화재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매, 글램핑 시설 방염 천막 교체, 글램핑 또는 트레일러의 이격거리(3m 이상) 확보를 위한 이전 설치 등 지원 • 지원규모(국비): 공공야영장 최대 3천만 원, 민간야영장 최대 1.5천만 원 <p>• 목적: 2022년부터 일반 텐트사이트 이용자 대상 질식사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해 일반 텐트 이용자에게 대여해 줄 수 있도록 경보기 구입 비용 지원 • 지원규모(국비): 공공야영장 최대 2백만 원, 민간야영장 최대 2백만 원
2022년~	야영장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캠핑카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야영장 내 캠핑카 편의시설(dump station)을 구축 • 지원내용: 캠핑카 편의시설(전기, 급수, 오폐수 배출 등) 설치, 캠핑카 이용에 따른 진입로, 시설 내 도로 폭 및 사이트 면적 확대 등 캠핑카 이용에 따른 수용태세 개선 포함 • 지원규모(국비): 공공야영장 최대 6천만 원

주: 연구자 정리

제3절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 분석 종합

가. 야영장업 입지·조성 및 시설의 종류

청소년야영장(여성가족부), 숲속야영장(산림청), 국립공원 야영장(환경부), 유원지 야영장(국토부), 관광농원 야영장(농림부) 등 다양한 부처 소관의 야영장이 있고, 야영장을 조성하려면 야영장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사전인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청소년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야영장은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야영장업의 근거 법은 「관광진흥법」이며, 동법령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 종류로 등록·관리된다. 즉, 야영장 조성 시에는 야영장업 등록을 위한 시설 기준 등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야영장업을 (i) 일반야영장업과 (ii) 자동차야영장업의 2종류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아래 각 세부 업종에 따라 시설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야영장업은 야영 면적 최소 규모가 더 클 뿐 아니라 전기시설, 취사시설을 갖추고 1차선 이상의 진입로를 확보해야 하는 등 일반야영장업에 비해 시설기준이 더 까다롭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는 야영장에서 조성하는 편의 시설 중 하나로서 야영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야영 장소(사이트)의 한 형태일 뿐 업종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나. 야영장업 등록 및 관리

야영장업 등록 및 관리 업무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며, 신규등록과 변경등록으로 구분된다. 야영장업 등록 신청 시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류, 부동산의 소유권 혹은 사용권 증명 서류, 야영장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설비 표기)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등록 신청을 접수하면,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등록
순의 절차를 거쳐, 등록까지 7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서류 심사 시,
관련 인허가 등 입지와 등록기준, 안전·위생기준에 의한 설비 구비 등 제출 서류의 적법
성을 확인한다. 야영장업자는 야영장업 등록 시와 시설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업 관리·운영, 사업자의 의무

야영장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화재 예방, 전기 안전, 가스
안전, 긴급 대피, 사고 예방, 위생 관리 등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야영
장 내 사고 및 손해보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위생 기준).

라. 법령 위반 사항 제재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
지 않거나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등록 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최대
4차까지 행정처분을 거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사업 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야영장업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별로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의 안전·위생기준 등 관리 의무 위반사항에 대
해서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마. 야영장업 법·제도 변화

야영장업과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여 야영장업을 효
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성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1988년 12월 자동차야
영장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일환으로 규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0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5년 1월 시행)하여, 야영장업을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추가하고 세부 업종으로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을 나누어 등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5년 2월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2015년 8월 시행)하여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야영장업자에게는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즉, 야영장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것은 2015년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일부 등록기준은 완화하였지만,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기준은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강화해 나갔다.

바.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관련 조례

일부 광역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다. 경기도, 전라남도, 강원도, 충청남도가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를 근거로 야영장에 대한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야영대회 개최, 우수 야영장 평가 및 지정, 야영 교육, 야영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 야영장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한편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로 가평군이 유일하다.

한편 공공에서 조성한 야영장에 대한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다수의 조례가 있다. 야영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 위탁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공기업, 혹은 법인과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 고성군과 경주시 조례에는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등에 야영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야영장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지역공동체에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 야영장업 품질 관리 제도

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자 2015년 「관광진흥법」의 일부개정으로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8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에 야영장업을 포함하여 야영장업에 대한 품질인증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등급제와 품질인증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각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야영장업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등급이나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야영장업자가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도 고려할 요소이다.

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지원 사업 현황

야영장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은 2005년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첫 시작이다. 자연친화적이고 저렴한 가족단위 여가 활동 증진을 위하여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후 2015년 야영장업 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고, 이후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 등이 강화됨에 따라 그에 맞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 야영장과 연계한 관광 매력성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단위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9년부터 야영장 내 시설의 화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추가하였고, 2022년부터는 일반 텐트사이트 이용자들의 질식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캠핑카 수요에 따른 야영장 이용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캠핑카 편의시설 구축 사업을 2022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요컨대 법·제도 환경과 수요 변화에 맞춰 정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시사점

가. 현행법과 현장 간 큰 괴리

타 부처 소관 법령에 의거해 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으나 청소년야영장을 제외한 모든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야영장업의 세부 업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 두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최근 늘고 있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는 세부 업종이 아니라 야영장의 편의 시설로 구분되어 별도의 등록기준이 부재하다. 실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야영 공간을 제공하는 기본시설 없이 글램핑과 트레일러만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어 현행법과 현장 간의 괴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야영장업 등록과 관리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야영장업 등록과 관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며, 등록기준 등에 대한 해석과 등록 처리, 사후관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야영장업 담당자 업무이다. 야영장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반기별 안전점검 결과 보고, 안전교육 이수, 책임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관할기관에 보고 등의 의무를 띠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자마다 등록기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관할 야영장 개소 수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사업자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이해 등록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야영장업 등록 혹은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가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제3장의 관리 실태 조사 결과와 연동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야영장업 관련 법령 개정 추세를 반영한 제도 개선 방향 수립 필요

2015년부터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야영장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시작되었고, 이후 일부 등록기준을 완화해 법적 테두리 속에서 야영장업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과 관련한 기준은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법령 개정 추세를 반영해 본 연구의 제도 개선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관심과 의지에 따라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며,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가능하다. 다만 전 국민이 야영장업의 잠재적 이용 대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목표 설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라. 야영장 품질 관리 제도 운영 여건 검토 필요

야영장 품질 관리 제도인 등급제와 인증제는 국민들에게 야영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운영 필요성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운영 근거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야영장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급 혹은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야영장업이 등급제 혹은 인증제를 운영하기에 적절한 여건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마. 야영장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사업 설계 필요

한편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야영장 이용자들의 수요, 트렌드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 지원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야영 문화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3장

야영장업 현황과 관리·운영 실태 분석

제1절 야영장업 수요 및 공급 현황

본 절에서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야영장업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야영에 대한 관심과 의향, 야영장 이용자의 만족도와 정보 습득 경로, 야영장 이용 실태 등을 분석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등록 야영장 수, 권역별 규모, 시설 현황과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한다. 한편 야영으로 용어를 통일하되, 선행연구 및 조사결과 등에서 캠핑이라고 사용한 것은 원 자료에 따라 캠핑이라고 기술한다.

1. 야영장 수요 현황

1.1. 야영 수요

가. 주요 국민 여가활동으로 부상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야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였다. 2021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지난 1년간 휴가기간 중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을 조사한 결과,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48.7%)이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는 ‘자동차 드라이브’(28.1%), ‘쇼핑/외식’(26.7%)에 이어 ‘국내 캠핑’(21.9%)으로 나타났다.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도 ‘국내 캠핑’(18.6%)이 휴가기간에 네 번째로 많이 한 여가활동이었으며, 2021년 조사 결과에서 전년 대비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거나, 실시 후 늘어난 여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했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는 1순위를 기준으로 ‘영화 관람(7.7%)’과 ‘국내 캠핑(7.7%)’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1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서는 1순위를 기준으로 ‘국내 캠핑’(9.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야영에 대한 수요는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경우 야영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 향후에도 야영 수요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나. 야영 인구

2020년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의 2020년 캠핑 이용률은 16.0%로 나타났으며, 숙박 캠핑인구는 534만 명으로 추산하였다. 이는 2019년 399만 명 대비 약 135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약 33.9% 증가하였다. 최근 야영장에서 숙박하지 않고 당일 피크닉 개념으로 야영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당일 캠핑 인구수는 155만 명으로 2019년(139만 명) 대비 약 16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요컨대 숙박 캠핑인구와 당일 캠핑인구를 합하면, 2020년 전체 캠핑인구는 약 689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19년(538만 명) 대비 28.3% 증가한 수치이다.

〈표 3-1〉 연도별 야영 인구수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숙박	3,104,589	3,010,627	4,033,275	3,985,234	5,340,047
당일	-	-	1,442,316	1,390,126	1,554,542
숙박+당일	-	-	5,475,592	5,375,360	6,894,589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1.2. 야영 이용자 실태

가. 야영장 이용 현황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영 이용자의 2020년 연간 평균 캠핑 횟수는 5.1회이며, 이는 2019년 3.8회에 비해 약 34%(1.3회) 증가한 수치이다. 1회 평균 캠핑 숙박 일수는 1.6일로 2019년과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야영 이용자의 평균 캠핑 경력은 4.2년으로 2019년에 비해 0.2년 감소하였다. 또한 야영 이용자의 캠핑 경력은 2년 미만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3년(28.4%), 6~10년(12.9%), 4~5년(12.6%), 11년 이상(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캠핑 경력이 11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이 증가(4.7%p)하였다. 요컨대 캠핑 입문자들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오랜 경력자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이용자 캠핑 경력

단위: 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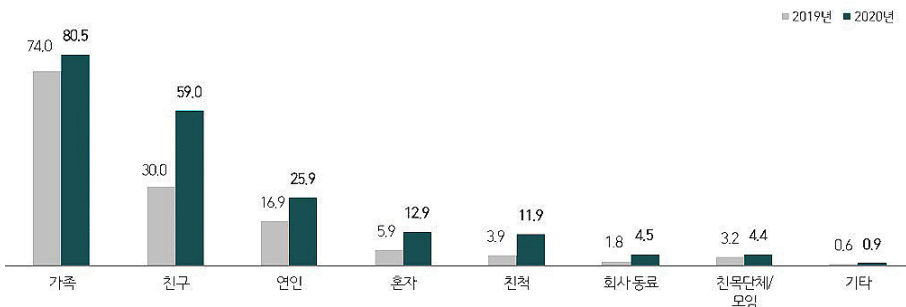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A)	2020년(B)	증감(B-A)
평균(년)		5.7	4.4	4.2	-0.2
구성비 (%)	2년 미만	16.1	32.6	33.9	1.3
	2~3년	30.7	27.7	28.4	0.7
	4~5년	23.1	13.7	12.6	-1.1
	6~10년	21.0	18.5	12.9	-5.6
	11년 이상	9.0	7.5	12.2	4.7
	계	100.0	100.0	100.0	-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나. 야영장 이용 행태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야영장 이용 시 동반자는 ‘가족’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친구(59.0%)’, ‘연인(25.9%)’, ‘혼자(12.9%)’, ‘친척(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2021).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친구’ 응답 비율이 29%p, ‘연인’ 응답 비율이 9%p, ‘친척’ 응답 비율이 8%p, ‘혼자’ 응답 비율이 7%p 증가하였다.

[그림 3-1] 야영장 동반자 유형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또한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을 포함한 야영 인원은 평균 3.2명으로 나타났다. 2018년 평균 3.9명, 2019년 3.3명으로 평균 야영 인원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5명 이상의 야영장 이용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0년 야영장 이용 시, 선호하는 숙박 형태로는 ‘일반텐트’가 6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15.9%)’, ‘글램핑(9.4%)’, ‘특별한 선호 형태 없음(8.3%)’, ‘기타(0.8%)’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2021). 2019년과 비교하면 ‘일반텐트’ 응답 비율이 8.8%p 감소한 반면,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는 5.2%p 증가하였다. 점차 일반텐트 외에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 글램핑 등을 선호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야영 시 선호하는 시설 유형

단위: %, %p

구분	2018년	2019년(A)	2020년(B)	증감(B-A)
일반텐트	77.8	74.4	65.6	-8.8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	8.0	10.7	15.9	5.2
글램핑	4.6	6.4	9.4	3.0
특별한 선호형태 없음	5.4	7.2	8.3	1.1
기타	4.1	1.3	0.8	-0.5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야영장에서의 주요 활동(중복응답)은 ‘바비큐’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모닥불 놀이(62.6%)’, ‘휴식(52.5%)’, ‘요리(41.9%)’, ‘걷기/하이킹(3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한국관광공사, 2021).

다. 야영 정보 습득 경로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캠핑 정보 습득 경로(중복응답)는 ‘인터넷’이 80.2%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친구/동료(67.4%)’, ‘가족/친지(31.7%)’, ‘기사 및 방송프로그램(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친구/동료’ 응답이 34.2%p, ‘가족/친지’ 응답이 16.3%p 증가하였고, 반면 ‘인터넷’ 응답은 3.1%p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 경향은 캠핑 이용자의 증가로 정보를 습득할 주변 인물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양한 야영장이 새롭게 조성·운영되는 데 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기에 친구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야영 경험자에게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4〉 야영 정보 습득 경로

단위: %, %p

구분	2018년	2019년(A)	2020년(B)	증감(B-A)
인터넷	76.7	83.3	80.2	-3.1
친구/동료	27.6	33.2	67.4	34.2
가족/친지	13.6	15.4	31.7	16.3
기사 및 방송 프로그램	5.3	8.9	16.0	7.1
기타	2.0	2.8	4.7	1.9

주: 중복응답으로 응답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야영 정보 습득 인터넷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SNS(73.4%)’, ‘한국관광공사 고캠핑(25.5%)’, ‘개별 캠핑장 홈페이지(1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서 야영장업 등록 야영장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용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야영 정보 습득 인터넷 사이트

단위: %, %p

구분	2018년	2019년(A)	2020년(B)	증감(B-A)
포털 사이트	78.8	77.7	80.0	2.3
SNS	32.6	50.8	73.4	22.6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11.2	12.4	25.5	13.1
개별 캠핑장 홈페이지	18.3	21.7	19.9	-1.8
기타	2.5	1.3	1.3	-

주: 중복응답으로 응답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라. 야영장 선택 기준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야영장 선택 시 ‘편의시설 청결관리(4.46점)’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캠핑장 안전관리(4.26점)’, ‘캠핑장 접근성(4.22점)’, ‘캠핑장 이용료(4.13점)’, ‘캠핑장 이용수칙(4.09점)’, ‘캠핑장 직원 친절성(4.04점)’, ‘캠핑장 사이트 크기(4.02점)’, ‘캠핑장 예약 안내 및 절차(3.89점)’, ‘주변 관광자원(3.7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캠핑장 접근성과 이용료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선택기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3-6〉 야영장 선택기준별 중요도

단위: 점, %

구분	2019년(A)	2020년(B)	증감률
편의시설 청결관리	4.41	4.46	1.13
캠핑장 안전 관리	4.27	4.26	-0.23
캠핑장 접근성	3.98	4.22	6.03
캠핑장 이용료	3.89	4.13	6.17
캠핑장 이용수칙	4.01	4.09	2.00
캠핑장 직원 친절성	4.07	4.04	-0.74
캠핑장 사이트 크기	3.92	4.02	2.55
캠핑장 예약 안내 및 절차	3.68	3.89	5.71
캠핑장 주변 관광자원	3.55	3.73	5.07
놀이, 레저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3.24	3.44	6.17
장애인 편의시설	2.75	2.93	6.55

주 1. 선택기준별 중요도는 5점 척도로 응답함

2. 증감률은 $(B-A)/A \times 100$ 으로 계산함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마. 야영장 이용 만족도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이용자들의 최근 캠핑 경험의 평균 만족도는 3.97점으로 2019년(4.01점)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 가운데 만족(만족+매우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77.1%로 2019년 82.7%에 비해 감소하였고, 불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3%로 2019년 1.3%와 비교할 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요컨대 캠핑 이용자의 만족도는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야영장 이용자의 불만족이 증가하고 만족도가 저하되는 부분은 향후 수요 확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이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는 불만족의 이유를 설문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캠핑 경력자들의 증가로 야영 활동에 대한 요구 내용과 수준이 다변화되고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야영장이 따르지 못 한다거나, 우후죽순으로 야영장들이 조성·운영되는 데 비해 야영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이용 시 기대치에 못 미쳐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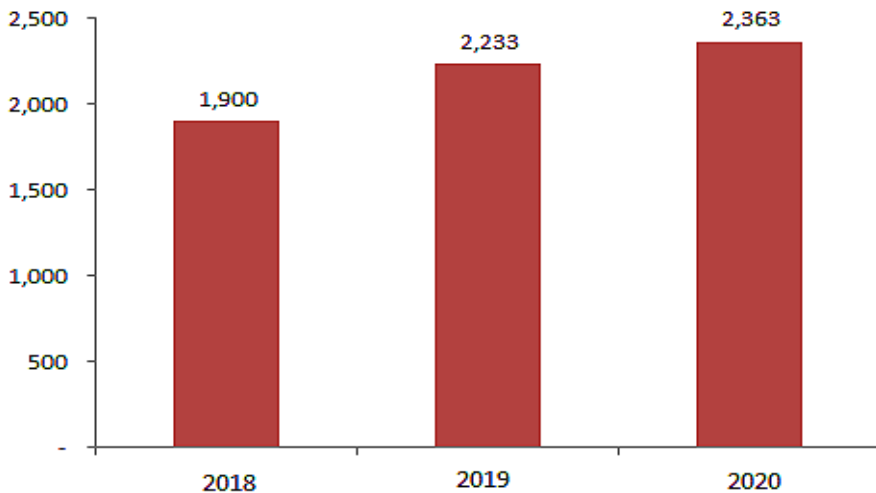
2. 야영장 공급 현황

2.1. 야영장업 등록 현황

가. 야영장업 등록 업체 수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야영장업 등록 업체 수는 총 2,363개로 2019년 2,233개에 비해 130개소 증가하였다. 2020년 한국관광공사 공식 홈페이지 ‘고캠핑(GO CAMPING)’에 등록된 모든 업체는 총 2,851개이나, 조사 대상기간(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행한 2,363개를 등록 업체 수로 집계하였다. 또한 2020년 기준 관광산업조사에는 야영장업 2,504개를 조사 모집단으로 집계하였다. 한편 2022년 4월 현재 ‘고캠핑(GO CAMPING)’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수는 2,977개로서, 야영장업 등록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등록 야영장 운영 업체 수



주: 등록 야영장 가운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 수로서, 2019년과 2020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치를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나. 야영장업 미등록 업체 수

2019년 6월 기준, 한국관광공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수는 총

320개로 집계되었다(한국관광공사, 2019). 경기도에 121개소로 가장 많으며, 강원도 52개소, 경북도 43개소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등록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 이후 신규로 조성하여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인 곳들도 있으리라 추측된다. 현재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에서 38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야영장 수를 설문조사한 결과, 15명은 0개로 답하였고 31개라고 응답한 지방자치단체가 1곳 있었으며, 13개, 14개, 15개, 18개라고 응답한 경우도 각각 1곳씩 존재하였다. 또한 야영장업 사업자 대상 심층인터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미등록 야영장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용자 가운데에서도 본인이 즐겨 다니는 야영장이 미등록 상태인 것 같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 요컨대 현재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인 야영장이 상당수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공공 및 민간 야영장 현황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야영장 수 2,363개 가운데 공공이 조성한 야영장은 490개(20.7%)이고, 민간이 조성한 야영장은 1,873개(79.3%)로 나타났다. 전체 사이트 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체 사이트 79,112개 가운데 공공이 조성한 사이트는 22,119개(28.0%)이며, 민간이 조성한 사이트는 56,993개(72.0%)로 나타났다. 야영장 수 기준으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로서, 야영장의 운영은 민간부분이 주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공공에서 조성한 야영장의 상당수는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라. 권역별·규모별 등록 야영장 현황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6개 권역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권에 전체 등록 야영장의 27.5%, 20.7%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대경권의 등록 야영장 업체 수는 10.2% 증가하였고, 강원권과 수도권은 각각 7.0%, 6.5%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호남권을 제외한 5개 권역의 등록 야영장 수가 증가하였다.

〈표 3-7〉 2019~2020 권역별 등록 야영장 수

단위: 개, %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모집단수	비율	모집단수	비율	모집단수	증감률
수도권	611	27.4	651	27.5	40	6.5
충청권	355	15.9	377	16.0	22	6.2
호남권	286	12.8	281	11.9	▽5	-1.7
대경권	264	11.8	291	12.3	27	10.2
동남권	261	11.7	275	11.6	14	5.4
강원권	456	20.4	488	20.7	32	7.0
합계	2,233	100.0	2,363	100.0	130	5.8

주 1. 제주권은 호남권에 포함하여 집계함

2. 모집단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의 대상을 의미함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한편 사이트 면 수 기준으로 49개 이하를 소규모, 50개 이상을 중·대규모로 구분하면, 수도권에 소규모의 26.8%가 입지해 있으며 중·대규모의 30.9%가 입지해 있다.⁵⁾ 야영장 선택 시, 접근성도 중요 고려사항 중 하나이므로 전국에서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수도권에 가장 많은 야영장이 입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공급 관점에서 볼 때, 야영장의 공급 수준은 권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도 경기도 가평군에 198개, 강원도 홍천군에 79개, 경북 경주시에 58개의 야영장이 등록해 있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크다.⁶⁾

〈표 3-8〉 2020 권역별·규모별 등록 야영장 현황

단위: 개, %

구분	소규모		중·대규모	
	모집단수	비율	모집단수	비율
수도권	511	26.8	140	30.9
충청권	307	16.1	70	15.5
호남권	236	12.4	45	9.9
대경권	246	12.9	45	9.9
동남권	220	11.5	55	12.1
강원권	390	20.4	98	21.6
합계	1,910	100.0	453	100.0

주 1. 제주권은 호남권에 포함하여 집계함

2. 모집단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의 대상을 의미함

자료: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한국관광공사, 2021)를 활용하여 재구성

5) 등록 야영장이 보유한 사이트의 개수는 1개(허그안 힐링캠핑)부터 522개(자라섬 캠핑장)까지 다양하다(한국관광공사, 2021).

6) 2022년 4월 말 기준,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야영장 수를 집계하였다.

마. 사이트 유형별 현황

야영장에서 숙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크게 일반(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와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 사이트는 야영장 내 정해진 공간에 이용자가 직접 텐트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형태로 자동차를 텐트 옆에 주차하는 공간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으로 구분된다.⁷⁾ 한편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와 글램핑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시설의 종류에 따르면 편의시설에 해당한다.

[그림 3-3] 사이트 유형 구분



일반 사이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주: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 시, 연구자 직접 촬영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야영장의 총 사이트 79,112개 가운데 일반 사이트는 70,415개로 전체의 89.0%를 차지하며, 글램핑 사이트는 5,598개로 전체의 7.1%를 차지하였다. 나머지는 카라반 사이트로 3,099개이며 전체의 3.9%를 차지한다.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체 사이트는 2,171개 증가하였고, 일반 사이트와 글램핑 사이트는 각각 1,943개(2.8%)와 170개(3.1%) 증가하였다.

〈표 3-9〉 사이트 유형별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모집단수	비율	모집단수	비율	모집단수	증감률
일반 사이트	68,472	89.0	70,415	89.0	1,943	2.8

7)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구분은 야영용 천막 설치에 대한 공간만 갖 추었느냐, 차량을 세우고 그 옆에 야영 장비를 설치할 공간이 있느냐로 나뉘어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일반 야영장에서도 차량을 세우고 그 옆에 텐트를 칠 수 있게 공간을 조성·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모집단수	비율	모집단수	비율	모집단수	증감률
글램핑 사이트	5,428	7.1	5,598	7.1	170	3.1
카라반 사이트	3,041	4.0	3,099	3.9	58	1.9
합계	76,941	100.0	79,112	100.0	2,171	2.8

주: 모집단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의 대상을 의미함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한편 문화체육관광부(2021b)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고캠핑에 등록된 2,860개 야영장 가운데, 430개(15.0%)가 글램핑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322개(11.3%)가 트레일러(카라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램핑과 트레일러(카라반)를 모두 운영하는 업체 수는 88개로 조사되었다. 일반 사이트만 운영하는 업체는 2,197개로 전체의 7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사이트별 운영 업체 현황

단위: 개

구분	합계	공공	민간
전체 등록 야영장	2,860	500	2,360
일반 사이트만 운영 업체	2,197	389	1,808
글램핑 시설 업체	430	48	382
글램핑 동수	4,982	515	4,467
업체당 글램핑 동수	11.6	10.7	11.7
트레일러 시설 업체	322	67	255
트레일러 동수	2,938	758	2,180
업체당 트레일러 수	7.9	11.3	8.5
글램핑 & 트레일러 운영 업체	88	10	78
글램핑 or 트레일러 운영 업체	576	95	481

주: 고캠핑 2021.11.17.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1b), 「2022 지자체 야영장업 업무매뉴얼」

2.2. 야영장업 운영 현황⁸⁾

가. 평균 매출액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표본 야영장의 전체 매출액은 평균 142.0백만 원이고, 사이트 매출액은 평균 109.6백만 원, 부대업장 매출액은 평균 32.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⁹⁾ 요컨대 야영장업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사이트 매출이 77.2%, 그리고 부대업장 매출액이 22.8%의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2019년과 비교하면 2020년의 경우, 전체 매출액 평균은 1.1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사이트 매출액 평균은 20.0백만 원 감소하였다. 반면 부대업장 매출액은 평균 19.0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야영장업의 사이트를 통한 매출은 20.0% 감소하였고, 부대업장의 매출은 141.4%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에 따라 2019년 전체 매출액에서 사이트 매출액이 90% 정도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이, 2020년에는 전체의 약 78%로 비중이 감소하였다.

〈표 3-11〉 2019~2020년 응답 표본 야영장 매출액

단위: 백만 원, %, %p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	비율	평균 매출액	비율	평균 매출액	증감률
사이트	129.7	90.6	109.6	77.2	▽20.0	-15.4
부대업장	13.4	9.4	32.4	22.8	19.0	141.4
전체	143.1	100.0	142.0	100.0	▽1.1	-0.7

주: 전국에서 200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2020년 기준 권역별·규모별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권역 및 규모에 따라 평균 매출액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야영장의 매출액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역 야영장의 전체 매출액은 255.4백만 원인데 비해, 강원권역 야영장의 경우 60.8백만 원에 불과하다. 중·대규모 야영장도 권역별 차이가 크다. 충청권역 야영장의 전체 매출액은 283.2백만 원인데 비해, 강원권역 야영장은 55.7백만 원이다. 사이트와 부대업장

8)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며, 본 조사에서 다른 매출액과 종사자 수 등의 현황 데이터는 전국에서 200개 표본을 추출해 분석한 결과이다.

9) 사이트 매출액은 텐트, 글램핑, 카라반 등의 숙박 매출을 조사하였으며, 부대업장 매출액은 매점, 부대시설 등의 매출을 조사하였다.

의 매출도 권역별·규모별로 다양한 수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는 표본 조사에 의한 값으로 일반화하는 데 유의해야 하나, 각 권역별·규모별 야영장마다 운영 형태나 방식, 그리고 영업률 등이 상이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3-12〉 권역별·규모별 응답 표본 야영장 매출액

단위: 백만 원

구분	소규모 평균 매출액			중·대규모 평균 매출액		
	사이트	부대업장	전체	사이트	부대업장	전체
수도권	122.0	48.5	170.5	196.7	45.8	242.5
충청권	113.8	12.7	126.5	232.5	50.7	283.2
호남권	87.1	27.1	114.2	29.0	51.0	80.0
대경권	71.4	8.3	79.7	165.8	36.4	202.1
동남권	172.5	82.9	255.4	131.4	17.9	149.3
강원권	51.1	9.6	60.8	46.8	8.9	55.7
합계	104.1	33.2	137.4	131.1	29.0	160.1

주: 전국에서 200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나. 종사자 수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표본 야영장의 전체 종사자는 3.6명이고 이 가운데 상용직원 수는 2.2명, 일용직원 수는 1.4명이다. 2019년 조사 결과 전체 종사자 수 평균이 3.9명이었던 데 비해 0.3명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고용형태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상용직 종사자 수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13〉 권역별·고용형태별 응답 표본 야영장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상용직	일용직	전체	상용직	일용직	전체
수도권	2.6	1.1	3.8	2.3	1.1	3.5
충청권	1.6	1.0	2.6	2.0	1.3	3.4
호남권	4.2	2.2	6.3	2.7	1.6	4.4
대경권	1.9	1.2	3.1	2.4	2.0	4.5
동남권	4.0	3.0	6.9	2.3	1.9	4.2
강원권	1.5	0.5	2.0	1.7	0.9	2.6
합계	2.5	1.4	3.9	2.2	1.4	3.6

주: 전국에서 200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다. 사이트 가동률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표본 야영장의 연간 판매 가능 사이트 수는 2,647,710개이며 이 가운데 연간 판매 사이트 수는 589,804개로서, 연간 가동률은 22.3%를 차지한다. 2019년 조사에서는 연간 가동률이 22.9%였던 데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야영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야영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주로 금요일부터 주말을 활용하거나 공휴일 등의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야영장 보유 시설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표본 야영장은 편의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을 대부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경우는 10%가 채 되지 않았고, 텍 사이트(29.0%), 식당·카페(23.0%), 피크닉 테이블(22.0%) 등을 갖춘 사례도 30%에 못 미쳤다. 요컨대 야영장마다 제공하는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응답 표본 야영장 편의시설 보유 현황

단위: 개, %

편의시설	보유수	보유율	편의시설	보유수	보유율
관리동	198	99.0	주차장	147	73.5
화장실	196	98.0	공동취사장	77	38.5
샤워실	189	94.5	텍사이트	58	29.0
분리수거장	154	77.0	바비큐시설	106	53.0
전기시설	136	68.0	피크닉테이블	44	22.0
식수대	138	69.0	의무실	88	44.0
매점	143	71.5	식당·카페	46	23.0
WIFI	99	49.5	장애인편의시설	19	9.5

주: 전국에서 200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분석한 결과임.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보고서」

제2절 야영장업 관리·운영 실태

본 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실시한 야영장 관리 실태 조사·감찰 결과와 한국소비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 등의 사고 현황 결과, 안전사고 및 소비자 분쟁 실태를 토대로 야영장 관리·운영 실태를 살펴본다. 야영장 관리 실태 조사·감찰 결과는 1) 2022년 5월 경기도내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와 글램핑 시설을 갖춘 중·대형 야영장 79개소의 위생·안전 실태 점검, 2)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산광역시 소재 등록 야영장 15개소 조사, 3) 2020년 5월부터 한 달간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의 운영 실태 점검, 4) 2019년 6월부터 7월까지 전남도 5개 시·군 22개소 표본 조사, 5)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소재 20개소 대상 결과를 활용한다.

1. 야영장 관리 실태

1.1. 야영장 관리 현황

현행 관련 법·제도상 야영장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영장업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안전 점검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야영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절기와 동절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야영장 안전 점검이나, 봄·여름 휴가철이

나 장마철 등 안전 관련 우려가 되는 시기에 범정부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에서 야영장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전히 안전사고의 우려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1.2. 야영장 관리 실태 조사 결과

가. 경기도 소재 중·대형 야영장 79곳 대상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22년 5월 9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와 글램핑 시설이 10개 이상인 중·대형 야영장 79곳을 시민감사관 7명과 합동으로 안전·위생 관리 실태를 감사하였다. 그 결과 79개 중·대형 야영장 가운데 78개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였고, 총 456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다.

위반사항 456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화기,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설비 미설치(구비)’가 58개소(73%)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등 위반’이 41개소(52%), ‘사업자 안전교육 미이수’ 36개소(46%), ‘야영시설 간 이격거리 미준수’ 31개소(39%), ‘책임보험 가입 미비’ 9개소(11%) 등 총 175건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었다(경기도청, 2022). 이 외에 ‘위험안내표지 미설치’ 등의 기타 부적합 사항은 281건 나타났다.

화재 예방 관련한 시설 기준 가운데,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와 글램핑 내부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전용 누전차단기, 비상 손전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보기(감지기)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거나, 손전등 분실 또는 작동 불량, 소화기 압력 저하 및 소화분말 경화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58개소(73%)로 나타났다(경기도청, 2022). 또 글램핑 및 트레일러 간 3m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나, 전체 79개소 중 31개소(39%)에서 1건 이상의 이격거리 미확보 사실이 확인되었다. 텍(마루)과 고정된 시설물의 경우 사업자의 비용 투자가 상당히 소요되는 상황인바 사업자들이 즉각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기준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반기마다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점검을 미 실시(또는 간이점검)하거나 점검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지 않은 야영장이 38개소(48%)로 나타났다(경기도청, 2022). 또한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안전교육을 연 1회 이

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 79개소 가운데 36개소(46%)에서 관련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영장 특성상 도심과 떨어져 있어 인력(관리요원)이 자주 교체되는 등 안전 교육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야영장에 설치하는 건축물(관리동, 화장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필요에 의해 임의로 건축물을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례와 영업장과 인접부지 및 설치제한구역(하천부지)에 미신고 시설을 운영 중인 사례 등이 본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점검 과정에서 즉시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은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시정 명령하였고, 야영장업 등록기준과 토지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거쳐 사업장 영업정지(폐쇄 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처분 요구하였다(경기도청, 2022). 또한 지자체 점검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 추진을 요청하였다. 한편 경기도 담당관은 점검 대상이 중·대형 야영장임에도 안전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면 소규모 영세 야영장은 안전·위생 실태가 더욱 열악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소재 등록 야영장 15개 대상

부산광역시 소재 일반야영장 10개, 자동차야영장 5개를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9월까지, 관련 서류 확인과 현장조사를 통해 개별법 인·허가 사전 이행 실태, 등록(변경)업무 처리 및 관리 실태, 위생·안전기준 준수 이행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총 2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였다.

개별법 인·허가 사전이행과 관련하여, 야영장 입지가 가능하지 않은 용도지역 내에 야영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야영장 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동물관련시설 및 단독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 야영장 입지가 가능 용도지역 충족여부와 야영장 시설의 건축물 용도 충족여부 등의 확인이 소홀하였다고 지적되었다.

등록(변경)업무 처리 관련하여, 야영장 전체 면적 대비 건축물 바닥 면적이 10% 미만이어야 하나 이를 초과하였거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작성한 주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소재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 야영장업 등록신청서 처리 소홀이 조사되었다. 또한 등록된 카라반, 글램핑 시설과 다르게 추가 설치되거나 감소된 경우 등 변경 사항의 변경

등록 미이행 실태가 드러났다. 「하천법」 제30조에 따라 하천점용공사허가 및 준공인가증을 받아 야영장을 운영 중에 추가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준공인가된 시설물 외에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안전·위생기준 준수와 관련해서는 규정에 따라 반기별로 군수·구청장에게 안전·위생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야영업 사업자가 설치하여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글램핑, 카라반 등) 사이에 3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나, 이러한 이격거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그리고 각종 안내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안내실 내부)에 설치하였거나, 차량 서행 안내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 각종 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경우 등이 지적되었다.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및 신분상 주의 조치를 취하였고, 일부는 행정상 시정 및 검토를 권고하였다. 한편 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지속 관리해 온 지자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였다.

다. 전국 등록 야영장 50개 대상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전국 50개 등록 야영장(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야영장 가운데 선정)을 대상으로 2020년 5월부터 한 달간 야영장 등록·운영, 안전관리 등을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 및 위반 사례 213건을 적발하였다(문체부, 2020). 보조금사업 집행 관리와 관련한 38건을 제외하면, 175건이 야영장의 등록·운영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다.

등록·운영과 관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를 무단 사용(12건)하거나, 근린생활 시설 등의 건축물 용도를 야영장 시설로 변경하지 않은 사례(27건), 야영장 등록 후 부지나 시설을 추가하는 등 변경 등록 미준수(31건), 야영장 통신판매업 미신고(16건), 야영장 등록 서류 미비 등(11건) 등 100건이 지적되었다. 특히 야영장 변경등록 미준수 사례는 50개소 가운데 31개소로 전체의 62% 야영장에서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자체 안전점검(월 1회) 미실시가 2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야영장 내 미신고 숙박업·음식점 영업(15건),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화재감지

기 설치 등 화재안전기준 미준수(14건),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13건), 미허가 유원시설(모노레일, 바이킹, 뽕틀 등) 설치·운영(13건) 등 75건이 적발되었다. 213건의 적발 사례에 대하여 176건의 시정, 33건의 주의, 4건의 환수 조치를 시행하였고, 적발 사례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표 3-15〉 전국 50개 등록 야영장 실태 점검 결과

단위: 건

구분	적발 사항	적발 건수
등록·운영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농지, 하천, 국유지 등) 무단 사용	12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짚질방, 방갈로 등) 설치	3
	건축물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등→야영장 시설) 미이행	27
	야영장 변경등록(등록 후 부지·시설 추가 설치 등) 미준수	31
	야영장 등록서류(평면도, 배치도 등) 미비 등	11
	야영장 통신판매업(홈페이지 등을 통한 예약) 미신고	16
	소계	100
안전관리	화재안전기준(일산화탄소 경보기, 화재감지기 등 설치) 미준수	14
	야영장 부지 내 미신고 숙박업·음식점 영업	15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13
	미허가 유원시설(모노레일, 바이킹, 뽕틀 등) 설치·운영	13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월 1회) 미 실시	20
	소계	75

자료: 문체부(2020.9.23.), 코로나 새 일상 속 야영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보도자료).

라. 전남 5개 시·군 야영장 22개 대상

전남도는 5개 시·군 22개 등록 야영장을 대상으로 2019년 6월부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관련 인·허가 부적정 등 4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였다.

안전기준 미준수와 관련하여 자체 안전점검(월 1회) 미 실시(3건), 비상 손전등 및 비상용 발전기(배터리) 미비치(10건), 매점 내 폭죽 판매, 구급약품 미구비 등이 지적되었다. 야영장과 인접한 계곡이나 급경사지 등과 같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이나 안전시설 미비 등과 같은 안전관리 소홀도 4건 조사되었다.

한편 야영장업 등록·운영과 관련하여, 개별별 인·허가를 사전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 용도 변경 등의 사례도 발견되었다. 농지나 산지 등을 인·허가 없이 무단 사용(5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1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2건), 불법

용도 변경(2건) 등이다. 전남도는 적발 사례에 대해 해당 시·군에게 원상복구, 고발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마.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운영 캠핑장 20개 대상

한국소비자원은 캠핑장 등록 현황과 카라반 운영 캠핑장 현황을 고려해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20개 캠핑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였다.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과 야영장 사업자 안전점검표 등을 근거로 조사하였는데, 조사대상 캠핑장의 상당수가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20개소 가운데 카라반 내 소화기 미비치(5개소, 25%), 비상 손전등 미비치(8개소, 40%), 야외 소화기 미비치(11개소, 55%), 숲 및 잔불처리 시설 소화기 미비치(14개소, 70%) 등 화재 안전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전기화재 관련하여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8개소, 40%)이 지적되었고, 긴급상황 대응과 관련해 이용자 안전수칙, 대피로, 소화기 위치 등이 표기된 게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9개소, 45%), 방충시설이나 메가폰을 갖추지 않은 사례(9개소, 45%) 등이 조사되었다.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카라반 시설 일부 파손 및 고장(5개소, 25%), 파이프 및 파손된 시설 등 위험 시설 방치(8개소, 40%), 추락·낙상 우려 지역에 방지 시설과 안내 표지 미설치(7개소, 35%)가 지적되었다.

또한 캠핑용 천막 2개소 또는 100㎡마다 1개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카라반은 캠핑용 천막에 해당하지 않고 면적기준(100㎡)이 모호해 카라반이 설치된 캠핑장 20개소 가운데 11개소(55%)의 야외 야영지에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 2019).

한국소비자원은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카라반 운영 캠핑장의 관리·감독 강화, 바비큐 시설의 소화기 비치 의무화, 카라반 운영 캠핑장의 숙박업 지정 또는 위생기준 마련 검토, ‘고캠핑’ 사이트 내 안전시설 정보 추가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2. 야영장 안전사고 및 화재, 분쟁 실태

야영 인구 증가와 함께 야영장에서의 경미한 안전사고부터 심각한 화재와 인명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19). 야영장에서의 주요 활동 중 하나

가 바비큐이다 보니 이와 관련한 화재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화재,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례 등이 주로 발생하였다. 또한 예약 취소 및 환불과 관련하여 야영장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다.

가. 야영장 안전사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접수된 야영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172건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평균 44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한국소비자원, 2019). 피해자의 연령 확인이 가능한 163건 가운데, 10대 미만 88건(5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0대 21건(12.9%), 10대 17건(10.4%), 40대 17건(10.4%) 등으로 나타났다. 위해 내용 확인이 가능한 171건 중 ‘물리적 충격’이 79건(46.2%)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발연·과열·가스’ 41건(24.0%) 등의 순이다(한국소비자원, 2019). 접수된 위해 사례를 살펴보면, 야영장 계단의 튀어나온 못에 걸려 넘어져 이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카라반 내 위생상태 불량으로 피부에 두드러기가 발생하였거나, 카라반 내 시설물 하자로 침대가 무너져 상해를 입은 등 야영장 내 안전·위생 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다수 포함되었다.

〈표 3-16〉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위해 내용 현황

단위: 건, %

위해원인	세부 원인	건수	계
물리적 충격	미끄러짐, 넘어짐	26	79 (46.2)
	부딪힘	21	
	추락	19	
	눌림, 끼임	7	
	기타 물리적 충격	6	
화재·발연·과열·가스	화재·발연·발화 관련	18	41 (24.0)
	고온물질	18	
	가스 관련 기타	5	
피부 관련	피부 접촉에 의한 위험 및 위해	4	4(2.3)
	기타	47(27.5)	
	계	171(100.0)	

주: 기타에는 제품 관련, 식품 및 이물질, 전기 및 화학물질 관련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료: 한국소비자원(2019), 캠핑장 안전실태조사-카라반 보유 시설 중심으로-

나. 야영장 화재

전북소방본부 분석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전북도 내 캠핑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5건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13건, 2019년 17건, 2020년 25건 등 매년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장정훈, 2021). 바비큐 시설 인근에 인화성 물질이 있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겨울철 텐트나 카라반, 글램핑 등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사례가 있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숯불 등 불씨 관리 소홀 26건, 담배꽂초 16건, 기계적 요인 13건, 과열·과부하 7건, 기타 부주의 32건 순이다(소방청, 2022). 사용자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75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난 2021년 1월 서울의 한 캠핑장에서 가스버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으며, 4월에도 경기도 양주의 모 캠핑장에서 불씨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로 1명이 부상을 입었다(소방청, 2022).

다. 야영장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야영장업 관련 상담은 총 1,669건이며, 2020년에는 673건이 접수되어 2018년(220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 가운데 84%는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불만이었고, 그중에서도 '위약금 과다 청구'가 31%로 가장 많았다(고아름, 2022). 야영은 야외 활동이다 보니, 폭우나 태풍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호우주의보 발생 시에도 야영장 사업자가 환불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 위험을 감수하고도 야영을 강행한다는 이용자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사고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7개 예약 중개 플랫폼(땡큐캠핑, 마이리얼트립, 야놀자, 여기어때, 캠프링크, 캠핑지도, 캠핑톡)의 100개 캠핑장 약관을 조사했더니, 이처럼 계약 취소 관련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아름, 202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숙박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용 시기(성수기·비수기·주중·주말)와 취소 시점을 함께 고려해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기

준을 세워야 하나, 조사 대상 100개 캠핑장 모두 성수기나 비수기 등 이용 시기에 따른 구분 없이 취소 시점만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청구하였다(고아름, 2022). 또한 ‘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용 10일 전까지 취소하거나 계약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캠핑장 19곳은 이보다 불리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사업자의 문제로 이용이 불가한 상황에 따른 환불 규정을 마련한 곳은 조사 대상 전체 100개소 가운데 단 1곳에 불과하였다. 태풍 등으로 인한 환불 규정을 마련한 곳은 17개소였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적용 시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 항공, 숙박, 외식 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아름, 2022). 하지만 100개 야영장 가운데,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곳은 18개에 불과하였다. 100개소 중 단 1곳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으며, 나머지 17개 야영장은 증빙 서류를 갖춰 협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등 협의의 결과에 따라 분쟁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표 3-17〉 100개 야영장의 약관 조사 결과

구 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100개 야영장의 약관 조사 결과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시기(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 및 취소 시점에 따라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① 이용 시기는 고려하지 않고 취소 시점만 구분하여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부과: 100개 (100%) ② 성수기 주말 기준: 분쟁해결기준 대비 불리한 약관 19개 (19%)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관련 기준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숙박지로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	① 관련 기준 없음: 58개 (58%) ② 환불 가능: 17개 (17%) ③ 현장 판단 하에 취소 등: 16개 (16%) ④ 환불 불가: 9개 (9%)
감염병으로 인한 계약 해제 약관	1급 감염병으로 계약 내용 변경 및 해제 요청 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상당히 어려운 경우를 구분하여 계약금 환급 또는 위약금 감경	① 관련 기준 없음: 82개 (82%) ② 야영장 협의 필요: 17개 (17%) ③ 환불 가능: 1개 (1%)

주 1. 조사대상: 야영장 예약 중개 플랫폼 7개 내 100개 야영장

2. 조사기간: 2021년 10월 21일~2021년 11월 5일

3. 조사기관: 한국소비자원

출처: 고아름(2022)

제3절 분석 종합 및 시사점

1. 분석 종합¹⁰⁾

가. 야영 수요와 공급 현황

① 야영 수요와 공급 증가

야영 수요와 공급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야영 인구가 2019년(538만 명)에 비해 2020년(689만 명) 약 28% 증가한 반면, 등록 야영장 숫자는 같은 기간 6%(2,233개에서 2,363개) 증가하는 등 야영 인구 증가 추세에 등록 야영장 수가 못 따르고 있다.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여가시간이 늘어날 경우 야영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 향후에도 해당 수요는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② 미등록 야영장 여전히 존재

2015년부터 야영장업 등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제도 시행 이전부터 야영장을 운영하던 업체들을 법·제도 내 편입하고자 입지 완화 등을 추진하였음에도 여전히 미등록 야영장이 성행하고 있다.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개소수를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2019년 360개소로 집계된 바 있으며, 본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문조사에서 31개의 미등록 야영장이 관할 지역 내 운영 중이라고 응답한 사례와 현장조사, 심층인터뷰 등에서 파악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미등록 야영장이 상당수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③ 야영장 공급량의 지역별 편차

10) 분석 종합에서 다루고 있는 야영장 수요와 공급 관련 수치 데이터는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의 자료를 기초로 한다. 제1절 본문에는 각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였으나, 여기에서는 가독성을 고려하여 생략하였다.

공급 관점에서 볼 때, 야영장의 공급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 전체의 27.5%(651개), 강원권에 20.7%(488개) 등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과 강원권에 입지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도 경기도 가평군에 198개, 강원도 홍천군에 79개, 경북 경주시에 58개, 충북 옥천군에 5개의 야영장이 등록해 있는 등 지역별 차이가 크다¹¹⁾.

④ 민간 중심의 야영장 공급, 소규모 야영장 비중 80%

한편, 공공이 조성한 야영장은 490개(20.7%)이고 민간이 조성한 야영장은 1,873개(79.3%)를 차지한다. 야영장 수 기준으로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이며, 더욱이 공공에서 조성한 야영장의 상당수는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야영장의 운영은 민간부문이 주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체 야영장 가운데 사이트 개수가 50개 미만인 소규모 야영장이 전체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대다수의 야영장은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야영 형태 선호도

일반텐트 외에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 글램핑 등을 선호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하였다. 2020년 기준 야영장 내 선호하는 숙박 형태로 ‘일반텐트’가 65.6%로 가장 높고, ‘캠핑카, 카라반 및 트레일러(15.9%)’, ‘글램핑(9.4%)’ 순이었지만, 2018년 기준 조사 결과에서 일반텐트가 77.8%였던 걸 감안하면, 일반텐트 외의 야영 행태에 대한 선호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1년 11월 고캠핑에 등록된 야영장 기준으로는 전체 2,860개 야영장 가운데, 430개(15.0%)가 글램핑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322개(11.3%)가 트레일러(카라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램핑과 트레일러(카라반)를 모두 운영하는 업체 수는 88개로 조사되었다. 일반 사이트만 운영하는 업체는 2,197개로 전체의 7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야영장업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사이트에서 2022년 4월 검색한 결과이다(검색일: 2022년4월28일, <http://www.gocamping.or.kr/>).

다. 야영장업 운영

표본 조사에 의한 자료라 일반화하는 데 유의해야 하나, 야영장마다 보유 시설과 규모, 그리고 운영 형태나 방식 등이 상이함에 따라 매출액이나 종사자 수, 사이트 가동률 등은 차이가 있다. 한편 2020년 기준, 연간 사이트 가동률은 22.3%로 전년(22.9%)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야영에 대한 수요와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야영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여가 활동의 일환으로 주로 금요일부터 주말을 활용하거나 공휴일 등의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야영장 이용자의 정보 채널

2020년 기준, 야영장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야영장 정보를 얻는 경우가 80.2%로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고, 이어 친구·동료(67.4%)와 가족·친지(31.7%) 등에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인터넷을 응답한 비중은 3.1%p 감소한 반면, 친구·동료와 가족·친지에게 정보를 습득하는 경우는 각각 34.2%p, 16.3%p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 경향은 야영장 이용자의 증가로 정보를 습득할 주변 인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양한 야영장이 새롭게 조성·운영되는 데 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기에 친구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야영 경험자에게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야영 정보 습득 인터넷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가 8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관광공사 고캠핑'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5.5%로 나타났다. 고캠핑 사이트에서 야영장업 등록 야영장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이용이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 야영 이용자 만족도

야영(캠핑) 이용자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0년 이용자들의 최근 캠핑 경험의 평균 만족도는 3.97점으로 2019년(4.01점)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한편 이용자 가운데 만족(만족+매우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77.1%로 2019년 82.7%에 비해 감소하였고, 불만족(불만족+매우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2.3%로 2019년 1.3%와 비교할 때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불만족의 이유를 설문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캠핑 경력자들의 증가로 야영 활동에 대한 요구 내용과 수준이 다변화되고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야영장이 따르지 못한다거나, 우후죽순으로 야영장들이 조성·운영되는 데 비해 야영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실제 이용 시 기대치에 못 미쳐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처음 야영을 경험하는 인구가 늘면서, 오랜 기간 야영을 해 온 경력자 층과 야영장 이용 문화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바. 야영장업 관리·운영 실태

① 대다수 야영장에서 관리·운영 위반사항 적발

야영장의 안전·위생 관리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며,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반기별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관리·감독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정기 점검, 행정안전부 주관 국가안전대진단 등 휴가철·장마철 등에 야영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부 단위에서 안전 실태 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개별법의 인·허가 미이행을 비롯해 안전·위생 기준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표 3-18〉 야영장 관리·운영 실태 조사 결과

연도	대상	조사 결과
2022년	◦ 경기도 소재 79개 중·대형 야영장	◦ 78개가 안전기준에 미달 ◦ 총 456건의 위반사항 지적
2021년	◦ 부산 소재 15개 등록 야영장	◦ 총 20건의 위반사항 확인
2020년	◦ 전국 50개 등록 야영장(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 총 213건의 위반사항 적발 - 보조금 관리 38건 - 야영장 등록 운영 100건 - 안전관리 75건
2019년	◦ 전남 5개 시·군 22개 등록 야영장	◦ 총 43건의 위반사항 적발
2019년	◦ 경기·강원 소재 카라반 운영 캠핑장 20개	◦ 총 95건의 위반사항 및 지적사항 확인

② 야영장 안전사고 및 화재 사건 발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16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접수된 야영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172건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평균 44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한국소비자원, 2019).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재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③ 야영장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

이 밖에도 야영장업 사업자와 이용자 간 예약 취소 및 환불과 관련한 분쟁 발생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예약금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야영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사고와 위험을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기준 마련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야영장은 관련 기준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시사점

가. 이용자 수요에 부합한 야영장 공급 필요

야영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등록 야영장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등록 야영장이 수도권에 입지하여 있는 등 야영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민간 야영장에 비해 저렴하고 입지가 좋아 인기가 높은 공공 야영장은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이용 예약을 하기 대단히 어렵다. 한편 이용자들이 직접 텐트를 설치하는 형태에 대한 선호 비중이 지속 감소하는 반면, 캠핑카 및 카라반, 글램핑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요컨대 야영장 이용 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미등록 야영장 현황 파악 및 등록 활성화 필요

야영장업 등록제도를 시행한 것은 야영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으로써, 이용자들

이 안전하게 야영장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등록 야영장이 운영 중에 있어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미등록 원인을 밝히고 등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 야영장에 대한 활용도 높은 정보 제공 필요

다양한 야영장이 새롭게 조성·운영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등록 야영장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제공 채널로서 한국관광공사가 ‘고캠핑’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실제 이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 야영장 이용자 만족도 제고 필요

야영장 이용자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한편, 이용자의 불만족이 증가하고 만족도가 저하되는 부분은 향후 수요 확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이다. 야영장 이용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불만족 요소를 해결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 야영장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위생 기준 강화 필요

야영장의 안전·위생을 위해 등록제도와 안전·위생기준 마련 등으로 야영장 관리를 위한 기초는 마련되었으나, 야영장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야영장에서 위반 사례가 지적된 것을 고려할 때, 야영장 점검 체계가 미흡하고 안전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야영장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법·제도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위생 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나 글램핑 내부에서 제공하는 화장실, 에어컨, 싱크대 등에 대해서는 위생 관련 기준이 미비한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바. 야영장 이용자 안전의식 제고 필요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사업자뿐 아니라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야영장업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의 천막 등은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방염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야영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텐트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용자가 화기와 텐트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둘 수 있도록 하고, 화재에 대비해 적정 개수의 소화기를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불을 피우고, 타다 남은 불씨는 물이나 모래, 흙 등을 이용해 완전히 꺼야 한다.

이렇듯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야영장업 사업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숙지와 행동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이용자가 안전하게 야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충분한 환경(시설과 서비스)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이 스스로 안전한 야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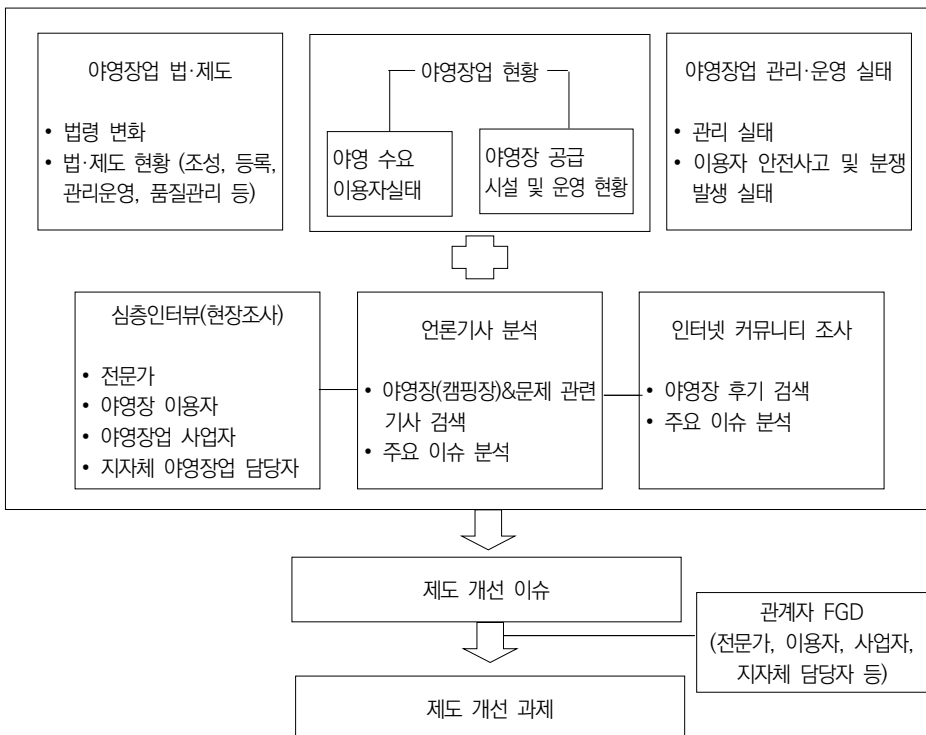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 이슈
및 사례 분석

제1절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 이슈

본 절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수행한 야영장업 법·제도 현황과 야영장업 현황, 관리·운영 실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심층인터뷰와 언론·인터넷 커뮤니티 조사·분석 등을 더하여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 이슈와 과제를 도출한다.

1. 법·제도 개선 이슈 도출 체계

[그림 4-1] 제도 개선 이슈와 과제 도출 체계



야영장업 제도 개선 이슈 및 과제는 야영장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현황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도출한다. 제2장에서 분석한 법·제도 현황과 제3장에서 분석한 야영장업 수요와 공급 현황 및 야영장업 관리·운영 실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야영장 이용자 및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자의 의견 수렴과 심층인터뷰, 언론 및 인터넷 커뮤니티 조사 결과를 결합해 제도 개선 이슈를 도출한다. 그리고 개선 이슈 도출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를 중심으로 개선 필요성과 효과성, 시급성 등을 집단 토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제도 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2. 심층인터뷰 조사

2.1. 심층인터뷰 개요

야영장 이용자, 야영장업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현장에서 느꼈던 제도적 개선점, 애로사항, 한계 등을 도출하였다. 대상 그룹별로 3~6명씩 총 18명의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각 그룹에 맞는 설문지를 설계해 인터뷰에 활용하였다.

야영장 이용자에게는 개인적 특성 외에 야영장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야영장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야영장 사업자에게는 운영 중인 야영장의 현황을 비롯해 안전·위생 관리 현황, 야영장업 운영과 관련해 현행 법·제도적 규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야영장업 담당자에게는 야영장업 등록과 관리·감독 시 애로사항, 현행 법·제도와 실제 야영장업과의 괴리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한편 심층인터뷰 과정에서 공공 운영, 민간 운영, 일반 사이트, 카라반, 글램핑 등의 야영장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표 4-1〉 심층인터뷰 개요 및 내용

구 분	내 용
심층인터뷰 기간	2022년 3월~6월
심층인터뷰 목적	야영장업 제도 개선 이슈 도출
심층인터뷰 대상 및 주요 내용	
야영장 이용자(3인)	야영장 이용 특성(동반자, 선택기준, 정보습득경로, 주요 활동 등) 야영장 이용 시 만족, 불만족 요소 등록 야영장 인지 여부, 등급제 등 도입 필요성
야영장업 사업자(5인)	야영장 운영 기간 및 운영 현황 야영장업 등록, 관리·운영 시 제도적 애로사항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 등 도입 필요성
지자체 야영장업 담당자(4인)	야영장업 등록 현황 야영장업 등록, 관리·감독 업무 시 애로사항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 등 도입 필요성
야영장업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6인)	야영장업 현황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이슈

2.2. 심층인터뷰 결과

가. 야영장 이용자

① 예약 및 요금, 환불 문제

야영장 이용자 관점에서는 야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야영장 이용 요금이 급등한 것과 이용을 원하는 시기에 예약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꼽았다. 야영장 이용 요금 및 지불 방법과 관련한 기준이 부재하여 야영장별 요금이 천차만 별이고, 현금 계산 위주로 이루어지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관행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하였다.

야영장이 경기도, 강원도 등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특히 야영장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야영장 이용에 제약이 많다고도 하였다. 야영 인구 증가에 비해 등록 야영장 수 증가가 더딘 상황이라 이러한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공공 야영장에 비해 민간 야영장이 4배 정도 많은 상황으로 민간 야영장의 요금 책정이나 예약 방법, 운영 방식 등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② 야영장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야영장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부족한 점도 불편 사항으로 꼽았다. 이

용자 A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캠핑’ 사이트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사이트 내 정보가 불확실하고 불충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대신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후기를 참고하거나, 민간 예약 앱 등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③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

야영 경험 가운데 가장 만족스러웠던 야영장은 시설을 이용자 편의에 맞춰 조성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을 꼽았다. 사이트 간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고, 사이트 규모가 작고,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시설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은 불만족스러웠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실이나 샤워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더러운 경우를 불만족 경험의 주요 사례로 꼽았다.

야영객 사이에서 평소 만족도가 높기로 소문난 국립공원 야영장 이용자에게 해당 야영장에 대해 만족하는 요소를 질문한 결과, 각각의 사이트 면적이 넓고 사이트 사이에 수목이 조성되어 있어 이용자의 사생활이 지켜지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공공야영장이라 가격이 저렴한 점이 장점이라고 응답하였다.

야영장업 등급제나 품질인증제 등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야영장 선택 시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등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해 주거나 경보기를 지참하라고 안내하는 야영장이 일부 있다고 한다.

나. 야영장업 사업자

① 조성 및 야영장업 등록 시 애로사항

야영장 조성 시, 일정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조성 면적 규모 제한 등이 있어 사실상 야영장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예컨대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야영장 전체 면적이 1만㎡ 미만이며,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이어야 한다고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 허가 관련한 조항에 용도지역별 개발 면적 제한을 보전녹지지역은 5천㎡ 미만, 관리지역은 3만㎡ 미만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5천㎡ 미만의 규모만 가능하고, 보전관리 지역은 당초 3만㎡까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관광진흥법」에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면적 규모를 1만㎡로 제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야영장업 사업자 입장에서는 관광 트렌드 변화와 수요자 욕구에 부합한 시설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싶으나, 야영장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등록권자인 지방자치단체마다 해석이 달라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하였다. 예컨대 야영장 관리동을 카페처럼 조성해 휴게음식점업 허가를 받아 복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나, 야영장 부지 내에는 야영장업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편의시설인 글램핑 내부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 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서도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한다. 현행 법령에는 글램핑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관광진흥법」 이외 적용받는 법령들의 시설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해석이 불명확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지적하였다. 예컨대 오수처리시설 설치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여 적용이 어렵다고 토로하였다.

② 야영장업 운영 시 애로사항

야영장 내 안전사고의 상당수가 이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등은 야영장 사업자에게만 부여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용자들에게 안전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여도 잘 지키지 않을뿐더러, 텐트나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등 실내에서 이용자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등록제나 품질인증제 등에 대해서 사업자 A는 공공 야영장이나 대규모 법인 시설이 우수한 결과를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반면, 사업자 B는 평가 기준이 무조건 시설 기준이 아니고 야영장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된다면 홍보·마케팅 측면에서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③ 미등록·불법·편법 야영장 운영

등록 야영장 사업자들은 미등록이나 불법, 편법으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례가 제대

로 적발·관리되지 않아 법·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 야영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 하였다. 야영장이 입지하기 어려운, 경관이 좋은 곳에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좋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발과 행정조치가 쉽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 야영장업 지자체 담당자

① 야영장업 등록 업무

야영장업 등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은 야영장 내 조성하는 시설이 다양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해석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영장업의 편익시설에 해당하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는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건축물에 준하는 형태로 시설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판단 및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컨대 글램핑이나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시설은 이격거리가 3m로 되어 있으나, 어디를 기준으로 3m인지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야영장업 등록 신청 시 처리 기한이 7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서류심사부터 현장 확인, 등록까지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다. 대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실제 2-3주가 소요된다고 하였다.

② 야영장업 관리 업무

지자체마다 등록 야영장 숫자가 다르고, 신규 등록 수요가 상이함에 따라 야영장업 담당자의 업무량에 차이가 있다. 야영장업 담당자의 경우, 야영장업 관련 업무 외에도 수행해야 하는 업무 영역이 있다 보니 야영장 조성과 운영이 활발한 곳은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한다.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은 입지나 시설 등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표본을 선정해 점검하는 등 전수 조사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반기별로 야영장업자에게 안전 점검표를 제출받아야 하나, 실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였다.

③ 안전점검 의무 형식적 이행

야영장 사업자가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야영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항에도 ‘이상 없음’으로 표기되어 제출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업자 대상 심층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라. 야영장업 관련 협회,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① 미등록 야영장 성행, 야영장 이용자의 등록 야영장 여부 미확인

여전히 산속이나 계곡 근처 등에서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불법야영장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더욱이 이용자들이 야영장 선택 시 등록 야영장 여부를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다 보니, 자연 입지가 우수한 미등록 야영장이 오히려 더 인기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미등록 야영장 운영으로 적발되어 벌금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벌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앞서 등록 야영장 사업자들도 미등록 야영장 운영의 문제를 지적한바, 이용자들이 미등록 야영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야영장이 자발적으로 법·제도적 테두리 내에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야영장업체 대상 교육의 실효성 부족

2015년 야영장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야영장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2019년 안전교육 대상을 관리요원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오지에 입지한 야영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교육을 가능하게 하였고,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면 온라인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의 실효성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야영장 안전·위생 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면, 그런 기준이 있는지 몰랐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해당 사항들은 다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해도, 그런 내용을 들은 적 없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고려해볼 만한 대목이다.

3. 언론 기사 및 인터넷 커뮤니티 조사

3.1. 언론 기사 분석

가. 분석 개요

언론 기사에서 야영장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조사하였다. 언론 기사는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 사이트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국 일간지와 경제일간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전문지에 실린 기사 가운데 ‘야영장(캠핑장)’과 ‘문제’를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중복 기사를 제외하고 총 67개의 기사가 추출되었고, 해당 기사 원문의 내용에서 야영장 관련한 문제, 사회적 이슈 등을 분석하였다.

〈표 4-2〉 언론 기사 검색 개요

구 분	내 용
검색 사이트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
검색 기간	2021.1.~2022.4.
검색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경제일간지(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 지역일간지(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 방송사(KBS, MBC, OBS, SBS, YTN) • 전문지(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검색어	1. 캠핑장&문제 2. 야영장&문제
목적	야영장 관련한 문제, 사회적 이슈를 파악
검색 결과	중복 기사 제외 67개

나. 언론 기사 분석 결과

야영장과 관련한 언론 기사 67건에서 언급된 문제를 야기한 주체 기준으로 분류해 본 결과, 야영객으로 인한 이슈가 월등히 많았다. 야영객의 ‘쓰레기 투기(30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다음으로 ‘불법주차 및 불법텐트 설치(25건)’, ‘소음, 고성방가(17건)’가 언급되었다. 이는 최근 들어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과 같이 경관이 좋은 야외에 텐트

를 치거나 차를 이용해 야영을 즐기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 차량을 이용한 차박과 캠핑카를 이용한 야영 문화 증가에 따른 불법 행위를 지적한 기사가 전체 67건의 분석 대상 가운데 24건을 차지하였다. 차박 문화 확산에 따른 부작용을 살펴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주차장 장기 점유, 전기·수도 같은 공공시설 무단 사용, 공회전, 고성방가, 도로 교통 정체, 교통사고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차박 이용자가 강변을 점령하면서 멸종 위기종 흰목물떼새가 강변 진입을 못하는 등의 생태계 훼손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이 밖에 야영객들의 비매너 및 위·불법 행위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야영객들이 야영장에서 소비하는 식재료들을 거주지 인근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해오고 야영장 내에서만 머물다가 귀가하는 등 야영객의 지역 방문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등을 지적한 기사도 있다.

한편 야영장업 사업자 측의 문제로는 공유지 등에서의 불법 야영장 조성·운영(5건), 비합리적 요금(3건), 예약과 관련한 문제(3건)를 언급하였다. 야영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농지와 산지 등에 불법으로 야영장을 조성하여 야영장업 등록 없이 운영하는 사례가 지적되었다.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등록 기준에 포함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더 문제가 된다. 또한 야영 수요 급증으로 야영장 예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야영장 이용요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하거나 중복 예약으로 캠핑을 못 하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반면 예약 취소 관련하여 환불 규정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나타났다.

행정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앞서 지적한 야영객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할 만한 법·제도가 미비(7회)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유지에서 발생하는 불법 야영의 경우 토지 소유주가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한 제재할 방법이 없고, 해수욕장 주변 등 주차장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도 명확한 근거가 없어 민원이 제기되어도 계도에 그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야영장 조성 시 진입로 문제와 캠핑카 이용을 위한 편의 인프라 부족 등 행정의 야영 인프라 구축 미흡 등을 지적한 기사도 3건 있었다.

〈표 4-3〉 언론 기사 분석 결과

단위: 건

구 분	문 제	건 수
야영객	쓰레기 투기	30
	불법 주차, 장기주차, 불법 야영(텐트 설치, 취사)	25
	소음, 고성방가	17
	지역소비 부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미흡	6
야영장 사업자	불법 야영장 조성·운영	5
	비합리적 요금	3
	예약 관련 문제(중복예약, 일방적 취소, 예약 취소 수수료 등)	3
행정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위·불법 야영 행위 등 단속 근거(법·제도) 미비	7
	야영 인프라 구축 미흡	3

주: 총 67건의 언론기사 가운데 해당 주요 이슈를 포함한 기사 건수를 집계함

3.2. 인터넷 커뮤니티 후기 분석

가. 분석 개요

야영장 이용자 관점에서 제기되는 야영장 관련 문제를 좀 더 폭넓게 조사하고자 인터넷 커뮤니티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7년 네이버에 개설해 2022년 7월 기준 95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야영장 정보와 캠핑 용품 후기 등 야영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커뮤니티 카페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카페 게시판에서 ‘불만’을 키워드로 게시글을 검색하여 조사 목적에 부합한 사례를 정리한 결과 총 428건이 수집되었다.

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후기 분석 결과

① 이용 후기 불만 사항 내용 분석

야영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불만’을 키워드로 야영장 이용 후기 428건을 추출해 불만 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¹²⁾ 불만 사항으로 언급된 내용은 크게 야영장 사업자의 운영·관리, 야영장의 시설·환경, 야영객의 비매너 행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야영장 예약·환불 및 사이트 배정, 요금, 사업자 불친절 및 갑질

12) 이용 후기에서 추출한 불만 사항은 내용별로 집계하면 565건이다.

행위, 야영객 안내·관리, 야영장의 시설 관리, 야영장 시설·환경, 야영객들의 비매너 행동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불만 사항으로 언급된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야영객들의 비매너 행동에 대한 것(184건)으로 이 가운데 ‘소음’이 127건을 차지하였다. 야영객들이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거나, 매너타임(일정 시간 이후 외부 활동과 소음 등을 자제하는 캠핑 문화) 이후에도 시끄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낮 시간 옆 텐트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블루투스 음악 소리 등 다양한 행태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지나친 매너를 요구해서 마음껏 놀 수 없다/불편하다/삭막하다’라는 의견도 42건이나 언급되었다. 이는 야영객들 간 야영 문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영장 사업자의 운영·관리에 대한 불만으로 야영 이용 요금에 관한 것이 총 107건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용 요금이 비싸지고 있는 현상이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합리한 추가 옵션이 증가되어 야영 이용 요금이 상승된 것, 예컨대 야영 사이트별 인원 규정이 있어 사이트를 2개 잡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등의 사례가 24건 지적되었다. 야영장 예약 시, 2박 이상 장기간을 우선으로 예약 받는 등의 불공정 예약 사례(21건)에 대한 불만도 나타났다. 특히 야영장 요금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야영장 시설과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28건) 최근 이에 대한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야영장 시설 관리에 대한 불만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설 관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만으로 ‘야영장 시설이 불결하다’가 13건, ‘야영장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가 14건으로 적지 않게 지적되었다.

야영장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은 난민 캠프라는 표현과 함께 ‘사이트 간격이 너무 좁다’가 24건이었다. 사이트 간격이 좁은 문제는 앞서 야영객들의 소음과 같은 비매너 행동에 대한 불만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야영장 시설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불만(11건)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카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야영장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일반 주차장 이용 시 카라반은 주차가 어렵다는 불만 사항(4건)이 제기되었다.

〈표 4-4〉 인터넷 커뮤니티 불만 사항 조사 결과

단위: 건

구 분		불만 내용	건수	
야영장 사업자의 야영장 운영·관리	예약·환불 및	예약 자체가 힘들다	4	43
		기본적인 시스템(예약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	2	

구 분		불만 내용	건수	
	사이트 배정	불명확한 이유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예약을 할 수 없다	3	
		환불 등 관련한 규정이 제대로 없거나 환불 불가, 환불 시 무조건 수수료를 받는다	4	
		장기간(2박 이상)을 우선으로 예약을 받는다	21	
		사이트를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2	
		비정비 구역을 텐트 사이트로 제공한다	5	
		오버부킹으로 인하여 사이트를 제대로 배정받지 못했다	2	
	요금	캠핑장 요금이 비싸다	49	107
		무턱대고 요금을 올리고 있다	16	
		연박 할인이 없다	3	
		추가 옵션 요금이 많다	13	
		카라반이나 텐트트레일러일 경우 추가 요금을 받는다	2	
		사이트에 인원 규정이 있어, 사이트를 2개 잡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24	
	이용시간	입·퇴실 시간에 맞추면 야영장 체재시간이 짧다	15	15
	사업자 불친절, 갑질 행위	사업자 마음대로 고객을 가려 받는다	3	29
		사업자가 불만을 고의로 삭제한다(정보를 통제한다)	9	
		사업자 마음대로 한다	3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5	
		사업자가 불친절하다	9	
	야영객 안내·관리	야영장 매너타임 및 야영객 관리가 부실하다	13	24
		국립공원 야영장, 지자체 야영장의 매너타임 등 야영객 관리가 부족하다	7	
		안내가 부족하다	1	
		야영객들의 입·퇴실 시간에 대한 관리가 부족해 잘 지켜지지 않는다	3	
	시설 관리	야영장 시설이 불결하다	13	27
		야영장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	14	
야영장 시설·환경	요금 대비 시설 및 서비스	야영 이용 요금은 상승하는데 야영장 시설,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28	81
	전기 허용량	야영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허용량이 낮다	7	
	사이트 간격	사이트 간격이 너무 좁다	24	
	시설, 정비	야영장 시설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11	
		어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	5	
		카라반을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기가 힘들다. 카라반 이용이 가능한 야영장이 제한적이다	4	
	이용 제약	반려견 동반 입장이 불가하다	2	

구 분		불만 내용	건수	
야영객 비매너 행동	규칙 위반	매너타임을 포함하여 캠핑장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8	184
		캠핑장의 전기 허용량을 무시하고 전기기기를 사용하여 전기가 차단되었다	5	
	공회전	전기 사용을 위해 공회전을 한다	6	
	소음	너무 시끄럽다	127	
	매연	장작 타는 냄새가 싫다(매연)	2	
	사이트 침범	남의 사이트를 침범한다	17	
	비매너	매너가 없는 캠퍼들이 늘어났다(흡연, 개수대 양치질, 쓰레기 투기, 시비걸기 등)	13	
	도난	장비를 도둑 맞았다	3	
	기타	애완동물 전용 캠핑장에서 동물 용변을 치우지 않거나 개를 방치하고 있다	3	
야영객 인식 차이	매너타임 불만	지나친 매너를 요구해서 마음껏 놀 수 없다/불편하다/식막하다	42	55
		매너타임에 소등해야 해서 불편하다	13	

주: 이용 후기 428건에서 불만 사항을 집계해 분석함

② 야영장 이용자 불만 사항 관련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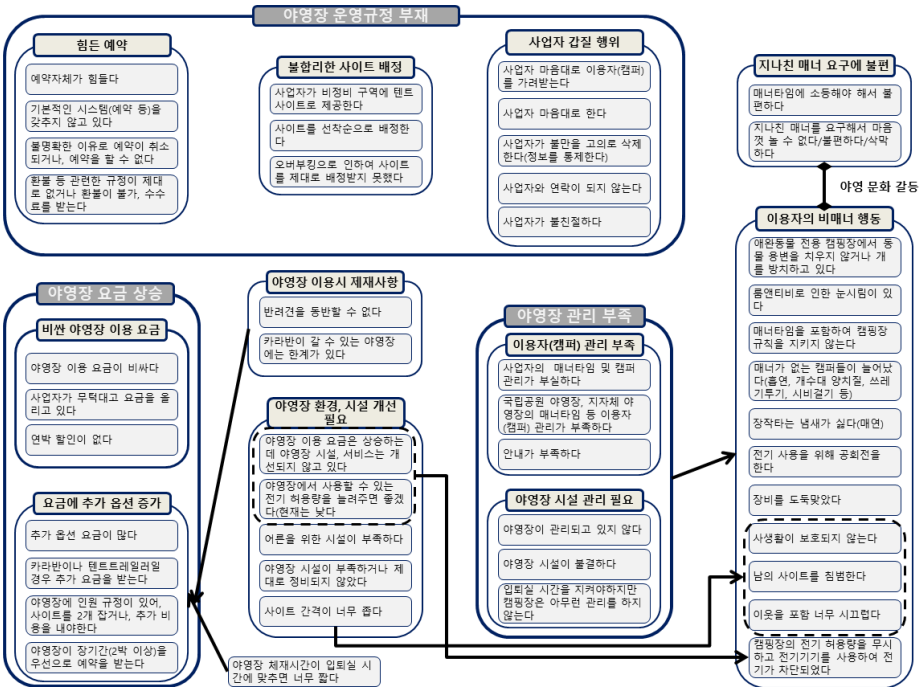
야영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후기에서 나타난 불만 사항을 KJ법을 활용해 도식화하였다. KJ법은 각각의 정보를 보고 서로 관계가 있다고 느끼는 것들을 분류해 정리하는 방법을 말한다¹³⁾. 예약과 환불 어려움, 야영장 사업자들의 불합리한 사이트 배정, 갑질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 사항은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상황에서 야영장 운영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발생하는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야영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원 규정 등 야영 이용 형태에 대한 제약이 늘고 이용 요금이 급등하는 반면, 시설이나 서비스 등은 이전과 변함이 없어 불만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에 대한 관리와 야영장 시설 및 서비스 관리에 관련한 불만도 나타났다.

야영장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나 관리와 관련한 불만은 야영장 이용자들의 행동에 대한 불만과도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야영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야영 이용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야간 시간대에 매너타임을 두어 소등하고 소리 내어 즐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것이

13) KJ법은 문화인류학자인 일본 카와기다 지로가 시행한 방법론으로 학자의 이름 이니셜을 따서 KJ법이라고 명명하였다.

야영 경험이 많은 이용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문화인 반면 신규 이용자들에게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즐기지 못 하게 하는 규제로 인식해 불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영 경험자들이 이러한 신규 야영 이용자들의 비매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림 4-2] 야영장 이용자 불만 사항 관련성 분석(KJ법)



4.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 이슈 및 과제 선정

4.1. 야영장업 활성화 관점에서 문제 종합

야영장업 법·제도 현황, 야영장업 수요와 공급 현황, 관리·운영 실태 등과 야영장 이용자,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문제를 지적한 경우도 상당 부분 있었으나, 더 강도 높게 지적한 주체를 중심으로 해당 문제를 정리하였다.

가. 야영장 이용자

첫째,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공공 야영장 등은 인기가 너무 높아 이용을 원하는 시기에 예약하기가 어렵다. 또한 최근 야영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일부 민간 야영장에서 마음대로 예약을 취소하고 야영장에서 선호하는 이용자 우선으로 예약을 받는 문제가 나타났다. 둘째, 야영장 이용 시 소음 문제가 야영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는 이용자 간 야영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야영 사이트 간 간격이 좁아 사생활 보호가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셋째, 야영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용 요금이 급등하였다. 시설이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이용 요금만 상향된 부분에 대해 이용자들은 불만을 표시하였다. 넷째, 일부 야영장에서는 여전히 현금으로 이용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다는 경우도 상당하였다. 다섯째, 야영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보니 폭우나 태풍 등이 발생할 경우 야영 활동을 하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환불 규정이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나. 야영장업 사업자

첫째, 등록 야영장 사업자들은 미등록, 불법, 편법 운영 야영장에 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였다. 등록 야영장은 법·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각종 기준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는데, 미등록 야영장 등은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발 시에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야영장 수는 2019년 6월 기준, 320개소로 집계(한국관광공사, 2019)되었으나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다.

둘째, 글램핑과 카라반만 설치하여 운영하고 싶어 하는 야영장 사업자의 경우, 현행 야영장업 등록 기준에는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무조건 일반 텐트 이용 사이트와 공동편의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사업자들 간, 그리고 전문가들 간 이견이 존재한다. 야영장업의 본질은 이용자가 텐트를 이용해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일반 사이트 없이 글램핑과 카라반만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셋째, 2019년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글램핑과 카라반 간 3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해당 시설을 설치한 야영장 사업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격거리 기준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이 과다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졸지에 불법 야영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비 지원이 있긴 했지만, 총 개선비용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넷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야영장업 등록기준 해석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야영장 개념트를 설정해 여러 지역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등록기준 해석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다섯째, 야영장업 사업자에 주어진 매월 1회 이상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반기별 자료 제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의무사항인데, 형식적인 행위에 그쳐 사실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사업자 입장에서는 야영장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의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부지 면적 제한이 있어 다양한 규모의 야영장 조성에 제약이 있다.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1만㎡로 개발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30개 사이트 가량의 소규모 야영장만 조성이 가능해 다양한 사업자의 야영장업 진출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다. 야영장업 담당 지자체 공무원

첫째, 야영장업 등록 업무 수행 시, 서류심사부터 현장 확인, 등록까지 처리 기한이 7일 이내로 되어 있어 기간 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둘째, 야영장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해 판단이 쉽지 않아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글램핑의 경우, 사업자가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야영시설로서 주재료를 천막으로 하여 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설치되어야 한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고만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와 내부 시설 설치 등을 허용해도 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야영장에 설치할 시설의 구조나 소재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공이 완료된 현장에 가서 등록 불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넷째,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의 경우 다른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야영장을 관리·감독하기 어렵다고 ‘업무과다’ 문제를 제기하였다.

라. 야영장업 관련 협회·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첫째, 야영장 이용자가 야영장 선택 시, 등록 야영장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미등록 야영장 운영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단순히 미등록 야영장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더해 수요자가 미등록 야영장을 이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급이 감소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야영장업 사업자와 관리요원 대상 교육의 실효성 부족을 제기하였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교육 효과가 더욱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셋째, 현행 야영장업 분류 체계상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 간 구분이 모호함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제 야영장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운영 형태가 현행 분류 체계 및 등록기준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이동가능성을 전제로 한 고정형 트레일러와 모빌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탓에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시설들을 설치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어 만약의 화재 발생 시 위험성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다섯째, 대부분의 야영장이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아 응급 의료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운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여섯째, 친환경 트렌드와 탄소중립 이행 등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마. 사회적 이슈

이 밖에 야영장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부분은 화재, 질식사, 환경오염 등에 대한 내용이다.

4.2. 법·제도 개선 이슈 도출

① 공공야영장 확대

야영장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가 원하는 시기에 야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야영장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공공 부문에서 야영장을 조성해 공급 부족 상황을 완화하는 한편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 민간 부문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미래 지향적인 인프라 역시 공공야영장에 선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② 일반 텐트 사이트 간 이격거리 기준, 다만 등급제 및 인증제 등의 제도로 유도

현재 야영장 내 글램핑과 카라반 등의 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은 있으나, 일반 텐트 사이트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야영장 내 소음 문제나 화재 등의 위험을 고려할 때, 이격거리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글램핑과 카라반 등의 이격거리 기준을 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설치한 민간 업체들의 반발과 여전히 미이행 중인 업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일반 텐트 사이트 간 이격거리 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일반 텐트 사이트 간 이격거리 기준은 등급제 혹은 인증제의 등의 수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요금, 환불 정보 게시 의무화

야영장 이용자와 사업자 간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이 요금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이다. 또한 추가 옵션 등에 따른 이용 요금 상승은 이용자의 주된 불만 사항이다.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용자가 야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므로 표준 약관에 따른 관련 정보 게시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 제공(고캠핑 사이트 개선)

야영장 이용자들이 정확한 야영장 정보를 확인하여 야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⑤ 등급제, 인증제 운영

야영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과 등급제 및 인증제를 통한 야영장업계의 자발적인 품질 제고 노력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제, 혹은 인증제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⑥ 이용자 야영 문화 개선, 이용자 대상 캠페인

야영장 이용자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소음’ 문제는 천으로 이루어진 텐트라는 특성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매너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야영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새롭게 야영을 경험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이용자들의 야영 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등록 야영장이 아닌 곳에서 텐트를 치거나 차량을 주차하고 야영을 하는 것은 불법이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면서 자연훼손이나 환경오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 캠페인을 통해 야영장 이용자로 하여금 등록 야영장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독려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미등록 야영장을 제도권으로 유인하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다. 야영장 화재와 질식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필요하다.

⑦ 글램핑, 카라반 이격거리 관련 법 개정 이전 설치 시설에 대한 예외 조건 부여

글램핑과 카라반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한 이유가 화재 확산으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미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방화수 등 다른 시설 설치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⑧ 야영장업 등록업무 매뉴얼 개정

야영장업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가장 크게 토로하는 어려움이 등록 업무 수행 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간 등록기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한 점은 야영장업 조성 단계에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등록업무 매뉴얼을 최대한 구체화하는 등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다.

⑨ 야영장업 부지 면적 제한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규모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3만㎡ 미만까지 가능하나,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부지면적 제한으로 인하여 1만㎡ 미만의 소규모 야영장만 개발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민간사업자의 진입 규제 완화 차원에서 부지 면적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

⑩ 야영장업 분류체계 재정립 및 등록기준 개정

현행 야영장업이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야영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그 구분이 모호할 뿐 아니라 글램핑이나 카라반 등 신종 야영 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편익시설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하다. 이에 변화하는 야영 트렌드와 야영장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여 야영장업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그에 따른 등록기준을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⑪ 야영장업 등록업무 수행 시, 등록 소요기간 현실화

야영장업은 신규로 시설이 조성되는 업종이라 타 부서 협의와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등록 시까지 7일을 기한으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 소요기간을 타 관광객이용시설업종과 통일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⑫ 야영장업 등록서류 내 상세 시방서(소재, 구조 포함) 제출

야영장업 등록 단계에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문제 제기뿐 아니라 사업자 측에서도 현장 확인 시 등록이 불가하다거나 등록 이후 조성 시설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는 경우 등의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야영장업 등록 서류에 상세 시방서를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⑬ 등록 야영장 표지 부착 의무화

미등록 야영장의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고, 등록 야영장에 대한 구분이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등록 야영장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등록 야영장을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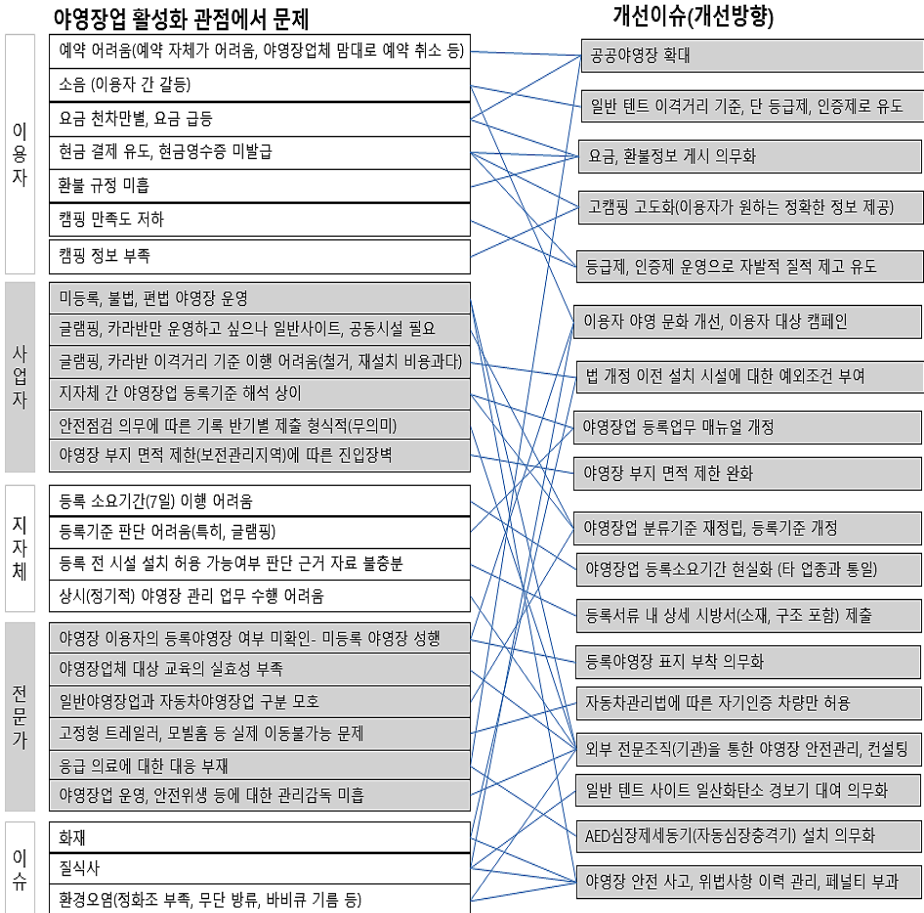
⑭ 고정용 트레일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차량만 허용

현재 일부 야영장에서 카라반 시설로 페버스 등의 개조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가 설치되고 있는데, 실제 화재 등의 위험 발생 시 견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현행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에서 기인하므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차량만 야영장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⑮ 외부 안전 전문조직(기관)을 통한 야영장 안전 관리와 컨설팅

현행 야영장의 안전 관리는 사업자의 의무이며,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안전 교육 역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외부 전문조직(기관)을 이용한 찾아가는 안전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야영장업 활성화 관점에서 문제점과 개선 이슈



⑯ 일반 텐트 사이트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의무화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가운데 하나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이다. 야영 수요가 높아지면서 처음 야영을 시작하거나 야영 경력이 길지 않은 이용자들이 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야영장업 사업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⑰ AED심장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야영장은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에 입지한 경우가 많으므로, 응급 의료에 대한

대응으로서 AED심장제세동기 설치 의무화를 고려할 수 있다.

⑱ 야영장의 안전사고, 위법사항 이력 관리

지속적으로 야영장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위생기준 등을 강화하여 왔으나 여전히 안전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해당 법규를 위반한 야영장이 상당한 상황이다. 안전사고와 위법사항 등에 대한 이력 관리와 페널티를 통해 야영장의 안전·위생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4.3. 법·제도 개선 과제 선정

가. 주요 개선 과제 선정 과정

전문가, 야영장업 사업자, 이용자 등 주요 관계자 토론을 통해 야영장업 활성화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이슈를 정리하였다. 총 18개의 개선 이슈가 도출되었고, 이에 대해 전문가, 야영장 사업자, 이용자 등 주요 관계자 10인이 시급성, 중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자 토론을 통해 법·제도 개선 관점에서 제안할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추렸다.

나. 개선 이슈 평가 결과

화재 안전성을 위해 글램핑과 트레일러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하기 이전에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와 이에 대한 관리 의무가 있는 지자체 공무원 일부가 이러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나, 예외 기준을 부여하는 등의 개선에 대하여 시급성, 중요성, 실현가능성 모두 낮게 판단되었다. 이 밖의 개선 이슈는 평균 4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야영장업 분류기준 재정립과 이에 따른 등록기준 개정은 시급성과 중요성이 7.0점으로 평가되었고, 실현가능성은 6.6점으로 평가되었다. 뒤를 이어 야영장업 등록업무 매뉴얼 개정은 시급성이 6.6점, 중요성이 6.5점, 실현가능성이 6.4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도 외부 전문조직(기관)을 이용한 야영장 안전관리 및 컨설팅과 일반 사이트 이용자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의무화가 평균 6.3점과 6.2점으로 평가되었다.

〈표 4-5〉 법·제도 개선 이슈 평가 결과

단위: 점

구 분	시급성	중요성	실행가능성	평균
1. 공공야영장 확대	5.2	6.1	5.8	5.7
2. 일반 텐트 이격 거리 기준, 단 등급제, 인증제로 유도	5.0	5.2	5.3	4.2
3. 요금, 환불정도 게시 의무화	5.1	4.9	5.6	5.2
4. 고캠핑 고도화(이용자가 원하는 정확한 정보 제공)	4.4	4.6	5.4	4.8
5. 등급제, 인증제 운영	5.0	5.1	5.1	5.1
6. 이용자 야영 문화 개선, 이용자 대상 캠페인	5.2	5.8	5.2	5.4
7. 법 개정 이전 설치 시설에 대한 예외조건 부여	2.1	2.1	1.8	2.0
8. 야영장업 등록업무 매뉴얼 개정	6.6	6.5	6.4	6.5
9. 야영장 부지 면적 제한 완화	5.4	5.6	5.5	5.5
10. 야영장업 분류기준 재정립, 등록기준 개정	7.0	7.0	6.6	6.9
11. 야영장업 등록소요기간 현실화 (타 업종과 통일)	5.7	5.1	5.8	5.5
12. 등록서류 내 상세 시방서(소재, 구조 포함) 제출	5.9	5.7	5.9	5.8
13. 등록 야영장 표지 부착 의무화	5.6	5.6	6.2	5.8
14.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 차량만 허용	5.6	5.6	6.2	5.8
15. 외부 전문조직(기관)을 통한 야영장 안전관리, 컨설팅	6.4	6.4	6.0	6.3
16. 일반 사이트 이용자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의무화	6.2	6.5	6.0	6.2
17. AED심장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4.2	4.4	3.9	4.2
18. 야영장 안전사고, 위법사항 이력 관리, 페널티 부과	5.0	5.6	4.9	5.2

주: 전문가 등 주요 관계자 10인이 7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임

다. 주요 개선 과제 선정

5점 이상으로 평가된 개선 이슈 가운데, 관계자 토론을 통해 법·제도적 접근이 가능한 10개 과제를 개선 과제로 정리하였다. 10개 과제는 ① 공공야영장 확대, ② 요금, 환불 정보 게시 의무화, ③ 등급제, 인증제 운영, ④ 야영장업 등록업무 매뉴얼 개정, ⑤ 야영장 부지 면적 제한 완화, ⑥ 야영장업 분류기준 재정립 및 등록기준 개정, ⑦ 야영장업 등록소요기간 현실화, ⑧ 등록서류 내 상세 시방서(소재, 구조 포함) 제출, ⑨ 외부 전문조직(기관)을 통한 야영장 안전관리 및 컨설팅, ⑩ 일반 사이트 이용자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의무화 등이다.

고캠핑 사이트와 이용자 대상 캠페인에 대한 개선 이슈는 현재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개선 방향을 정책제언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야영용 트레일러와 관련한 개선 이슈는 야영장업 분류체계와 등록기준 재정비 과정에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개선 과제에서 제외하였다. 야영장 안전사고, 위법사항 이력 관리, 페널티 부과 이슈는 외부 전문조직을 통한 야영장 안전관리 및 컨설팅과 연계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절 유사 법·제도 사례 분석

1. 사례 분석 개요

가. 분석 목적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법·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야영장업 법·제도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사례 분석에서는 법·제도 사례에 한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나. 분석 대상 및 내용

첫째,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등급제 및 인증제 관련 국내외 사례를 살펴본다. 둘째, 안전관리 관련 민간위탁 사례를 살펴본다. 셋째, 요금 및 환불 정보 게시 의무화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본다. 등급제 및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고 선진 야영 환경 조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살펴보았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기능에 주안점을 두어 참고 사례를 조사하였다. 가격 및 사업체 등록 정보 게시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 관점에서 야영장업과 유사한 업종 사례를 살펴보았다.

〈표 4-6〉 사례 분석 대상 및 내용

구분	대상 사례	분석 내용
등급제 및 인증제	일본 야영장 등급제 및 인증제 프랑스 야영장 등급제 우리나라 국립공원 야영장 등급제 우리나라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우리나라 호텔 등급제 우리나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등급제 및 인증제 구성 체계 평가 항목 주요 특징

구분	대상 사례	분석 내용
안전관리 민간위탁	우리나라 승강기 안전관리 우리나라 화재, 소방시설 안전관리 우리나라 전기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념 및 목적 민간위탁 규정
가격 및 사업체 등록 정보 게시	우리나라 농어촌민박사업 우리나라 숙박업 우리나라 관광숙박업(호텔업) 프랑스 야영장	정보 게시 의무 규정

2. 등급제 및 인증제

2.1. 일본 등급제 및 인증제

가. 일본 캠프 협회

공익 사단법인 ‘일본 캠프 협회’(이하 캠프 협회)는 1969년부터 2008년까지 ‘우량 인정 캠프장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따라 인정 사업을 실시하였다. 당시 조직 캠프를 실시하던 캠프장 또는 캠핑장을 관리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면, 캠프 협회가 방문하여 기준에 따라 채점을 하였다. 기준은 7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그룹 내에 캠프 협회가 생각하는 조직 캠프에 알맞은 이상적인 캠핑장의 모습을 문장화하여 항목을 설정하였다(표 4-7). 문장화한 항목의 체크박스에 따라 점수가 다르며, 점수 합계에 따라 ‘인정 캠핑장(55점 이상 69점 이하)’, ‘우량 캠핑장(70점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학교 및 단체의 합숙이나 연수 등의 조직 캠프를 실시할 때, 적절한 캠핑장을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캠프 협회에 인정받은 12곳의 주소, 공식 홈페이지, 시설 개요 등을 캠프 협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각 캠핑장의 코멘트도 함께 게재하고 있어 캠핑장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4-7〉 캠프 협회의 캠핑장 인정 사업 기준

그룹 분류	내용	예시 항목
A. 자연환경· 자연자원이 풍부한 입지	도시 환경의 영향이 적고, 자연 환경 속에 캠핑장이 있으며, 자 연 속에서 캠프 생활을 충분히 실감할 수 있는 장소일 것	[자동차와 기계 소리 등 인공적인 소음이 적다] ■ 인공적인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 인공적인 소음이 적다
B 시설 및 설비	쾌적한 캠프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충분한 시설 설비가 갖춰져 있을 것	[샤워 시설이 있다] ■ 온수 샤워 또는 욕조 설비가 있다 □ 주위로부터 가릴 수 있는 샤워 가능한 시설이 있다

그룹 분류	내용	예시 항목
C 운영 관리	안전하고 위생적인 캠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을 것	[시설 도구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이용할 때 지도하고 있다] ■ 이용할 때 필요한 설명(간판·포스터·문서 등)이 준비되어 있고 지도도 하고 있다 □ 필요할 경우 구두로 설명·지도하고 있다
D 관리자	캠프 생활 전반에 걸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가 있을 것	[관리자는 구급처치가 가능하다] ■ 일본적십자사·소방서 등의 구급 자격을 가지고 있다 □ 응급처치에 관한 강습회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
E 야외활동 프로그램	캠프를 즐기기 위해 야외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캠핑장과 캠핑장 주변에서 활동적인 야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3개 이상 활동적인 야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 1개 이상 활동적인 야외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F 긴급 대책	기후의 급변과 캠퍼의 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시 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태풍, 천둥 번개, 지진, 화재 등 긴급 시 대응책이 있으며, 훈련이 되어 있다] ■ 대응책이 준비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피난 훈련을 하고 있다 □ 대응책은 준비되어 있다



* 점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각 6개의 그룹별로 체크 항목이 있으며, 해당하는 것에 체크한다.
- ■는 2점, □는 1점으로 채점하여 그룹별로 점수를 계산한다.
- 그룹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합을 계산한다.
- 기준표를 바탕으로 그룹별로 '충족해야 하는 항목수'와 '충족해야 하는 점수'가 '인정 캠핑장'과 '우량 캠핑장'의 어느 쪽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확인한다.
- 기준표를 바탕으로 '총합계 점수'가 '인정 캠핑장' 또는 '우량 캠핑장' 어느 쪽의 최저 점수를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

자료: 일본캠핑협회가 재제한 「우량·인정 캠핑장 인정 기준」발행·재작성

(<https://camping.sakura.ne.jp/wp/wp-content/uploads/2020/02/superior.pdf>)

[그림 4-4] 우량·인정 캠핑장 리스트

 우량 캠핑장  인정 캠핑장  산림 캠핑장  하천 캠핑장  해안 캠핑장

아이콘	캠핑장명	住所/TEL
	そらぶちキッズキャンプ	北海道滝川市江部乙町丸加高原4264-1 (0125-75-3200)
	サンタヒルズオートキャンプ場	栃木県那須郡那珂川町三輪967 (0287-96-4622)
	おにし青少年野外活動センター	群馬県藤岡市保美瀬山1550 (0274-56-0123)
	国立赤城青少年交流の家	群馬県群馬県勢多郡富士見村赤城山27 (027-289-7224)
	ラポランドくろひめ	長野県長野県上水内郡信濃町野尻1848 (026-255-5723)
	静岡県立朝霧野外活動センター	静岡県富士宮市根原1番地 (0544-52-0321)
	尼崎市立美高自然の家「とちのき村」	兵庫県美方郡香美町小代区新屋1432-35 (0796-97-3600)
	神戸YMCA 余島野外活動センター	香川県小豆郡土庄町字余島 (0879-62-2241)
	YMCA阿南国際海洋センター	徳島県阿南市那波江 (0884-33-1221)
	国立室戸青少年自然の家	高知県室戸市元乙1721 (0887-23-2313)
	国立鎌早青少年自然の家	長崎県鎌早市白木崎町1109-1 (0957-25-9111)
	すざのこつま恋研修センター	群馬県吾妻郡嬬恋村大字千俣2401 (03-3984-2396)

자료: 일본캠핑협회 홈페이지(<https://camping.or.jp/>)

나. 일본 오토캠프 협회

일반사단법인 ‘일본 오토캠프 협회’(이하 오토캠프 협회)는 1969년부터 캠핑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각 단체와 교류 및 관련 업계에 조인 등의 활동을 하고, 야외 활동으로서의 캠핑을 보급하고 진흥시켜, 국민 심신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오토캠프 협회는 1988년 일본 국내에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오토캠핑장의 시설과 운영관리 수준을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캠핑 이용객에게 명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별 표시 등급제도’를 시작하였다.

또한 오토캠프 협회는 ‘별 표시 등급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① 캠핑 이용객에게는 캠핑장에 대한 명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제공한다. ② 캠핑장은 등급제도에서 오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캠핑장 관련 가이드북, 신문잡지 등의 취재 기회가 증가하여 캠핑장을 쉽게 홍보할 수 있다. ③ 홍보를 통하여, 집객력이 향상된다.

오토캠프 협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본 오토캠프 협회 정회원이 관리하고 있는 오토캠핑장이며, 개업일부터 1주일 이상 경과된 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평가를 받기 위해 오토캠핑장에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오토캠프 협회에서 현지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 평가한다. 신청한 오토캠핑장에서 심사비와 등급 인정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정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3년 후에는 갱신을 위해 신청을 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토캠프 협회는 4개 부문(입지, 시설, 서비스, 어메니티)으로 나누어 평가항목을 설정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별로 표시되고, 종합 평가에서 별의 개수에 따른 캠핑장 현황은 <표 4-8>과 같이 정의된다. 오토캠핑 협회의 캠프 정보 사이트 ‘캠프 네비’ 홈페이지에서 조건(별 등급 표시, 급탕, AC 전원, 배리어프리, 애완동물 가능 등)에 따라 검색할 수 있으며, 별 등급을 받은 캠핑장만을 추출하여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각 캠핑장 안내 홈페이지에는 부문별 별 등급도 함께 표시하고 있으며, 기본 정보, 시설 현황, 요금, 주변 시설 현황, 특산품 등의 안내도 상세히 게재하고 있다.

<표 4-8> 일본 오토캠프 협회 등급 설명

별 구분	설명
★	안전·청결하고, 소박한 자연이 있는 캠핑장
★★	안전·청결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캠핑장

별 구분	설명
★★★	안전·청결·쾌적하고, 시설이 잘 정비된 캠핑장
★★★★	환경·시설·서비스 전부가 양호한 캠핑장
★★★★★	환경·시설·서비스 전부가 우량한 캠핑장

자료: 오토캠핑 협회가 게재한「오토캠핑장 별 표시」인정 신청 방법 안내문」에서 발췌·재작성
(http://www.autocamp.or.jp/wp-content/uploads/2012/06/campsite_star_info.pdf)

〈표 4-9〉 일본 오토캠핑장 평가 기준

부문	평가 항목	내용
환경과 입지	접근성	인터체인지와 주요 도로에서 가깝고, 안내가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다 홈페이지 등에서 알기 쉽게 도로 순서가 안내되어 있다
	자연 환경	풍부한 자연 환경 속에 있고, 경관이 좋다
	문화 환경	주변에 박물관이나 명소 유적지 등의 관광 자원이 충실하다
	액티비티	근처에 온천, 수영장 등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충실하다 하이킹과 카누 등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지역 생활	주변에 캠핑에 필요한 식재 등 구입할 수 있는 슈퍼가 있고, 긴급 시에 대응 가능한 병원이 있다
서비스	안전 관리	캠핑장 순찰을 하고 있으며 긴급 시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 시스템	요금 수납과 예약 접수 등이 원활하다
	환경 보전	쓰레기 처리 등 환경 유지가 적절하다
	인적 대응	직원의 대응이 좋다
	안내 정보	팸플릿과 인터넷에 의해 쉽게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그램	이벤트 등 이용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다
여메니티	자연도	캠핑장 안의 식재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다
	청결함	화장실과 취사장 등 경내 시설이 정리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다
	정숙도	특히 야간 등에는 조용하다
	분위기	기분 좋고 즐거운 분위기가 연출된다
시설	텐트 사이트	평평하고 물이 잘 빠진다 전기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다
	캠핑카 사이트	큰 차의 출입이 쉽고 주차 공간이 있다 전원과 덤프 스테이션 등 캠핑카에 대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롯데, 방갈로 등	롯데와 방갈로 등 숙박 시설이 있다 침대와 침구, 난방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펜스, 게이트 등	게이트와 펜스 등으로 외부에서 진입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되어 있다
	서비스 시설	접수와 매점, 직원 숙박, 방송설비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있다
	화장실	적당한 수의 화장실이 있으며, 캠핑카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등 이용자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면장	거울, 콘센트, 급유 등이 설비되어 있는 세면대가 화장실과 별도로 있다
	취사장	적절한 수의 취사장이 있으며 개별 수조와 급탕 시설이 설비되어 있다
	샤워, 목욕	적절한 수의 샤워 및 목욕 시설이 있으며, 온수가 나온다

주체이며, 평가 대상은 각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야영장이다. 평가 기준은 두 협회 모두 자연환경, 시설 및 설비, 운영 관리, 제공 서비스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일본 캠프 협회의 경우 평가 항목이 세세하게 문장화되어 있다. 두 협회의 구성 성격에 따라 일본 캠프 협회의 경우 협회 활동 내용과 관련이 있는 항목(야외 활동 프로그램의 개수 확인, 관리자의 캠프지도자 능력 유무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였고, 오토 캠프 협회의 경우는 자동차야영장 특징에 맞게 캠핑카 사이트 유무, 전원 연결 유무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평가 절차는 두 협회 모두 협회에 소속한 야영장이 등급 평가를 받고자 신청하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의 모든 야영장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일본 캠프 협회의 경우 과거에 평가를 추진한 이후 현재에는 진행되고 있지 않아 과거 정보에 머물러 있다. 한편, 오토 캠프 협회의 경우는 3년마다 등급을 갱신하도록 하여 야영장은 평가 대상이 되는 항목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어 양호한 캠핑장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으며, 이용자는 야영장의 시설과 서비스 관련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2. 프랑스 야영장 등급제

가. 프랑스 야영장 등급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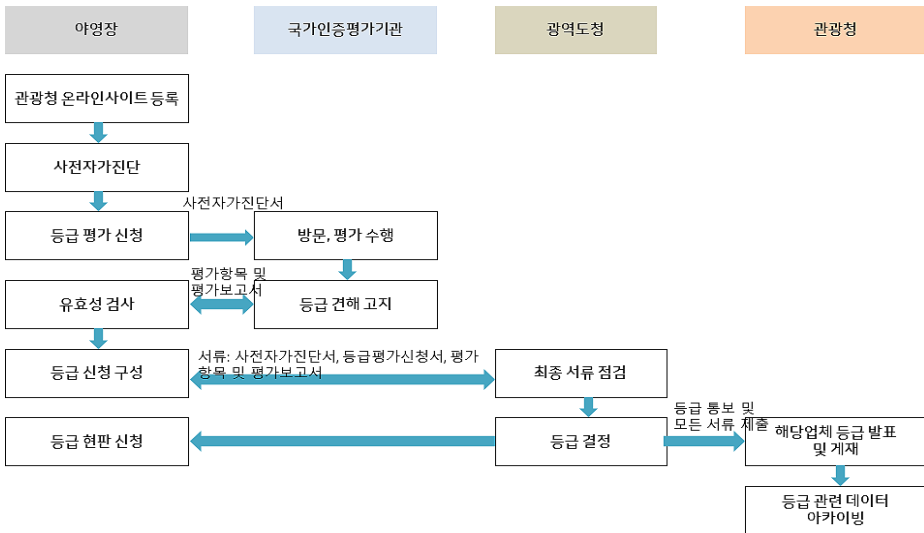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야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숫자의 야영장이 있다. 프랑스의 현행 야영장 등급제는 2009년 개정된 시행령을 근거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관 주도 등급제도의 비효율성과 공정성 등이 문제 제기되었고 타 국가들과의 기준을 맞추고 질적 평가를 강화하며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자 새로운 등급제도가 개편된 것이다. 특히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야영장이 자발적으로 관광청(Atout france)에 온라인으로 등급 평가 요청을 하면, 품질인증기관인 정부단체(COFRAC)의 공식인증을 받은 ICH(등급 평가 전문 단체)가 관광청의 등급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야영장을 평가하는 체계이다. 공식인증을 받은 등급 평가 전문 단체는 18개이며, 지역에 따라 나뉘어 있고, 단체마다 평가 가능한 업체가 제한되어 있다. 등급 유효기간은 5년이다.

① 등급 평가 체계

좀 더 자세하게 절차를 살펴보면, i) 야영장이 관광청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등급 평가를 등록하고, ii) 야영장이 관광청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사전 자가 진단을 수행한다. iii) 야영장이 등급평가를 수행할 공식 인증 평가 전문 단체를 자율로 선정해 신청한다. iv) 평가 전문 단체가 관광청의 등급평가 항목에 따라 야영장을 방문해 평가를 수행한다. v) 평가 전문 단체는 평가항목 및 평가보고서를 야영장에 제공하고, 야영장이 등급평가 신청서와 사전자가진단서, 등급 평가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vi) 도지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vii) 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이후 관광청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viii) 관광청은 등급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출된 서류를 관리한다.

[그림 4-6] 프랑스 야영장 등급 평가 체계



자료: 프랑스 관광청(2009). 2009 관광숙박업 등급체계 개편

② 등급 평가 항목

평가 항목은 크게 시설, 고객서비스, 접근성(이동이 불편한 사람) 및 지속가능성의 세 개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95개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별 4개와 5개의 경우 특정 항목에 한해 불시 점검이 있을 수 있다. 평가 항목에 따라 ‘대체불가 필수항목: 이 항목 만족시키지 못하면 등급 불가’, ‘필수 항목: 필수이지만 일부 점수는 선택항목들에서 대체 가능’, ‘선택 항목: 이 구분 중 해당 업체에 맞는 몇 가지 항목만 만족시키면

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외관 및 보안, 최소 면적, 전기 공급, 사이트 별 전기 공급, 카라반 및 캠핑카 전기·수도 공급, 공동 시설, 통신, 렌탈 숙박 장비 청결도 등의 항목을 포함한다. 고객서비스는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과 정확도, 예약 처리, 리셉션과 응대, 기타서비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고객서비스 가운데 별 1개부터 5개까지 모든 등급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항목은 최소한의 리셉션 데스크 운영, 이용자 불편사항 접수 양식 구비, 아기용품 구비 등 3가지 항목이다. 이 밖에 별 2개 등급부터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의 최신 업데이트 여부(5점), 야영장 주변의 관광자원 설명 가능(4점) 등을 큰 배점으로 설계하였다.

〈표 4-10〉 프랑스 야영장 등급 평가 항목(고객서비스)

2. 고객서비스							
내용	점수	별1	별2	별3	별4	별5	비고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품질과 정확도							
시설과 가격이 표기된 웹사이트 존재 여부	3	o	x	x	x	x	
웹사이트 내 시설 인벤토리 공개	2	o	x	x	x	x	
웹사이트에서 직접 예약 가능	3	o	x	x	-	-	웹사이트에서 예약 이메일 발송가능
반응형 웹사이트	5	o	o	o	x	x	사이트 내 예약모듈
시설 및 가격 한 개 외국어 표기	3	o	x	x	x	x	
시설 및 가격 2개 이상의 외국어 표기	3	o	o	o	o	x	
시설 및 가격 3개 이상의 외국어 표기	2	o	o	o	o	o	
제공된 모든 정보의 최신 업데이트 여부	5	o	x	x	x	x	
예약 처리							
안내 자동응답 서비스	3	o	x	x	x	x	
주 7일 24시간 예약 가능 여부	3	o	o	o	o	x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한 자세한 예약확인	4	o	x	x	x	x	
리셉션 및 응대							
- 리셉션 데스크							
최소한의 리셉션 데스크 존재	3	x	x	x	x	x	
24시간 리셉션	2	o	o	o	o	o	
- 도착 이용객 응대							
이용객 희망 시 캠프사이트로 동행 가능	3	o	o	o	o	o	
야영장 주변의 관광자원 설명 가능	4	o	x	x	x	x	
주변 지역의 관광안내도 지참	3	o	x	x	x	x	
신용카드 결제 가능	2	o	x	x	x	x	
고객만족 설문지 구비	3	o	o	o	o	o	

2. 고객서비스							
내용	점수	별1	별2	별3	별4	별5	비고
불만사항 접수 양식 구비	5	x	x	x	x	x	
프랑스어 외 유럽언어 응대 가능	2	o	x	x	x	x	
영어 외 제 3외국어 응대 가능	3	o	o	o	x	x	
영어 외 2개 이상 외국어 응대 가능	5	o	o	o	o	o	
이용객이 직원의 응대 가능 언어 식별 가능(배지 또는 창구 구분 등으로)	3	o	x	x	x	x	
직원들의 좋은 품질 서비스에 대한 숙지 여부	3	o	o	o	o	o	정부의 Quality Tourism 문서
기타서비스							
반려동물 이용 가능	3	o	o	o	o	o	
성수기 안전한 물놀이 프로그램	3	o	o	o	o	o	
공연이나 체험활동	5	o	o	o	o	o	
아기 용품 구비(하이체어, 기저귀갈이대)	3	x	x	x	x	x	
자전거 대여 가능	3	o	o	o	o	o	
시설 이용 안내문(디지털 혹은 종이)	2	o	o	o	o	o	

주: o는 선택 항목이며, x는 필수 항목임

자료: 프랑스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번역하여 정리함.

file:///Users/spark/Downloads/Tableau%20de%20classement_camping_PRL_MEA01072019%20(1).pdf

〈표 4-11〉 프랑스 야영장 등급 평가 항목(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3.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내용	점수	별1	별2	별3	별4	별5	비고
장애인 및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자의 접근성							
기본 총족 피치 수 (50개 피치당 1개)	3	x	x	x	x	x	
휠체어 접근 가능 화장실	3	x	x	x	x	x	
휠체어 접근 가능 샤워실	3	x	x	x	x	x	
휠체어 접근 가능 세면대 (온수)	2	x	x	x	x	x	
접근성에 대한 정보 사전 제공	3	x	x	x	x	x	(예) 웹사이트
이동불편한 자를 응대하는 직원의 마음	3	x	x	x	x	x	
이동불편한 자를 응대하는 직원 교육	5	o	o	o	o	o	
업장 환경에 맞는 휠체어 구비	3	o	o	o	o	o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2개 이상의 지역생산물, 공정거래 또는 유기농 제품의 지속적인 사용	3	o	o	o	o	x	
에너지 절약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	2	x	x	x	x	x	
물 절약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	2	x	x	x	x	x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직원 인식 제고	2	x	x	x	x	x	
지속가능성 및 환경보호에 대한 내용 공유	3	o	o	o	o	o	
친환경적 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3	o	o	o	o	o	
에너지 물 폐기물 절약에 대한 직원 교육	3	o	o	o	o	o	
하나 이상의 에너지 절약 조치 구현	2	o	o	o	o	o	

3.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내용	점수	별1	별2	별3	별4	별5	비고
공용공간의 에너지 효율 전구 사용	2	o	o	o	o	o	
최소 한 개의 물 소비 감소 조치 구현	2	o	o	o	o	o	
최소 한 개의 폐기물 감소 조치 구현	2	o	o	o	o	o	
친환경 인증 세제 사용	3	o	o	o	o	o	

주: o는 선택 항목이며, x는 필수 항목임

자료: 프랑스 관광청에서 제공하는 문서를 번역하여 정리함.

file:///Users/spark/Downloads/Tableau%20de%20classement_camping_PRL_MEAO1072019%20(1).pdf

프랑스의 야영장 등급 평가 항목 가운데 세 번째 카테고리인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는 별 개수와 무관하게 모든 야영장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이 많다. 특히 장애인이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과 관련하여, 이들의 이용 편의에 부합한 시설 제공과 관련 정보, 그리고 이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마음에 대한 항목까지 6개가 필수 항목이다.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 물 절약, 폐기물 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 노력은 필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나. 프랑스 야영장 등급 현황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스의 8,239개(899,266 사이트) 야영장 가운데 2,193개(전체의 26.6%)를 제외한 6,046개의 등급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중 별 1개와 별 5개는 각각 336개(4.1%)와 235개(2.9%)로 작은 규모를 나타내었고, 별 3개가 2,514개로 전체의 30.5%를 차지하였다. 한편 사이트 수를 기준으로 등급 현황을 살펴 보면, 별 5개의 야영장은 전체 야영장 가운데 2.9%에 불과하나, 사이트 수 비중으로는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별 5개인 야영장은 대규모임을 알 수 있다.

〈표 4-12〉 프랑스 야영장 등급 현황(2021)

단위: 개, (%)

별 구분	야영장 수	사이트 수
★	336 (4.1)	21,811 (2.4)
★★	1,743 (21.2)	147,795 (16.4)
★★★	2,514 (30.5)	290,671 (32.3)
★★★★	1,218 (14.8)	259,637 (28.9)
★★★★★	235 (2.9)	85,173 (9.5)
등급 없음	2,193 (26.6)	94,179 (10.5)
합 계 (비중)	8,239 (100.0)	899,266 (100.0)

자료: 프랑스 통계청 사이트(<https://Insee.fr/en>)

다. 프랑스 야영장 등급제 특징

앞서 살펴본 프랑스 야영장 등급제도는 야영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호텔, 야영장, 리조트 등 모든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항목에 따라 특정 유형의 숙박업체에만 적용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의 숙박업 등급제도는 2009년 전면 개편되었다. 이는 1) 변화하는 숙박업의 다양한 형태와 이용객들의 요구가 기존 평가기준과 맞지 않아서, 2) 공정한 평가를 위해, 3) 단순 검열표에 의한 평가가 아닌 질적평가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새롭게 개편된 등급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인증한 민간단체의 참여이다. 국가 인증기관(COFRAC)이 인증한 18개의 야영장 등급제 평가 수행조직이 신청 받은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¹⁴⁾ 그리고 이 평가를 위한 항목 및 가이드라인은 프랑스 관광청이 제시한다. 광역도가 이러한 등급 신청 및 평가의 절차를 검토, 서류 수집, 최종 평가를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광역도가 관광청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이용자는 관광청에 의해서 검증된 등급 평가 결과를 신뢰하고 관광청 웹사이트에서 야영장의 등급 정보를 제공받는다.¹⁵⁾

등급 신청 절차 가운데 야영장 사업자는 공식 평가 이전에 스스로 자가진단을 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 키트는 50유로에 제공받을 수 있고, 평가단의 본 평가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자가진단 결과는 최종 공식 등급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전에 시설과 서비스, 지속가능성 측면의 평가항목들에 맞춰 야영장의 객관적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등급을 부여받은 숙박업체는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2.3. 우리나라 국립공원 야영장 등급제

가. 국립공원 야영장 등급제

2014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야영장의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38개 야영장에 등급을 부여하여 이용자들이 야영장의 시설 수준을 쉽게 알 수 있

14) 프랑스 국가 인정 기구(COFRAC)의 인정은 항상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산업연구원, 2015).

15) 프랑스 관광청 숙박업 등급제 웹사이트: CLASSEMENT.ATOUT-FRANCE.FR

도록 하였다. 등급 평가 항목은 독일과 일본,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반시설과 안전, 위생, 입자환경 등 4개 영역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등급은 기본, 보통, 우수, 특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며, 별 1개부터 별 4개까지 부여하여 등급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 기준은 4개 영역에 1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기반시설은 영지면적, 영지구획, 주차수용력, 전기, 가로등 등 5개 항목, 안전은 소방시설, 안전장비, 대피계획 등 3개 항목, 위생은 화장실, 개수대, 세면대 등 3개 항목, 입자환경은 이용기간, 시설상태, 쾌적성, 녹지율 등 4개 항목이다.

〈표 4-13〉 국립공원 야영장 등급별 시설 및 서비스

야영장 등 급	등급별 제공되는 주요 시설 및 서비스									
	영지	수세식 화장실	주차수용 (100%)	소화기	구급 약품	개수대	방송 시설	시설상태 (노후도 등)	대형 영지	전 기
기본	○	- (재래식)	-	- (방화사)	-	-	-	-	-	-
보통	○	○	○	○	○	○	-	-	-	-
우수	○	○	○	○	○	○	○	○	-	-
특급	○	○	○ (110%)	○	○	○ (20%)	○	○	○	○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보도자료(2014.11.4.)

〈표 4-14〉 국립공원 야영장등급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기본 (★☆☆☆)	보통 (★★☆☆)	우수 (★★★☆☆)	특급 (★★★★)
기반 시설	영지면적①	20㎡ 미만	20㎡ ~ 40㎡		40㎡ 이상
	영지구획		유 (경계석, 경계목 등)		
	주차수용력 (일반야영장제외)		사이트수의 100%이상		사이트수의 110%이상
	가 로 등		유		
	전 기				이용기능
안전	대피계획 (대피로, 대피공간 등)	비상 대피계획 (대피로, 대피공간 등)			
	소방시설	방화사 또는 방화수	소화기		
	안전장비	구급약품		방송시설	

평가항목		기본 (☆☆☆☆)	보통 (☆☆☆☆)	우수 (★★★★)	특급 (★★★★)
위생	화 장 실	재래식 (간이)	수세식		
	개 수 대		개수대 (사이트 20%미만)	개수대 (사이트 20%이상)	
	세 면 장		유		
입자 환경	이용기간		3개월~7개월		7개월 이상
	접근성(계곡, 해변, 탐방로 등)		500m이내	100m이내	
	녹 지 율③		30~50%	50%이상	
서비스 (권장 사항)	예약시스템			유	
	피크닉 테이블				이용가능
	무선인터넷				유
	샤 위 장			유	온수
	다목적 공간④				유
	무장애 시설⑤			제한적 이용가능	모든시설 이용가능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보도자료(2014.11.4.)

나. 국립공원 야영장 등급 현황

4개 등급에 따른 설명은 다음과 같다.¹⁶⁾ 특급(별 4개)은 야영장비 일체를 빌려주거나 전기이용이 가능한 대형영지를 제공하며 가족단위 야영객 이용이 편리한 곳을 의미한다. 우수(별 3개)는 편의시설 상태가 비교적 우수하고, 방충시설을 갖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고 녹지율이 50% 이상 되는 곳이며, 보통은 수세식 화장실, 취사장 등 기반시설과 소화기, 구급약품 등 안전장비를 갖춘 곳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은 작은 영지와 화장실 등 최소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곳을 뜻한다.

이러한 등급 구분에 따라 (i) 월악산 닛돈재, 덕유산 덕유대, 소백산 남천 등 13개 야영장을 최고 등급인 특급야영장(별4개)으로, (ii) 지리산 내원 뱀사골, 한려해상 학동, 내장산 가인 등의 15개 야영장을 우수야영장(별3개)으로, (iii) 지리산 달궁, 설악산 설악동 등 6개 야영장을 보통야영장(별2개)으로, 그리고 (iv) 월출산 경포대, 다도해해상 시목 등 5개 야영장을 기본야영장(별1개)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등급 결과는 2014년에 평가한 결과이며, 이후 평가 기준의 재설정이나 등급 평가 갱신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6) 국립공원공단 사이트(https://www.knps.or.kr/portal/popup/agency_pop02.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국립공원 야영장 등급 평가 결과

구 분	특급 (★★★★)	우수 (★★★☆☆)	보통 (★★☆☆☆)	기본 (★☆☆☆☆)
계	12개소	15개소	6개소	5개소
풀오피션 야영장	닷돈재, 덕유대, 남천			
자동차 야영장	덕동, 동학사, 내장, 덕유대(자동차), 학암포, 구룡, 금대, 삼가, 천황사	내원, 뱀사골(자동차), 학동, 가인, 치인, 삼정, 소금강, 상의, 팔영산, 닛돈재, 송계	달궁, 설악동	
일반 야영장		백무동, 중산리, 소막골, 뱀사골(일반)	백운동, 덕유대(일반), 덕주, 용하	염포, 시목, 인수, 석굴, 경포대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보도자료(2014.11.4.)

다. 국립공원 야영장 등급제 특징

2014년 당시 야영장이 난립하면서 이용자의 안전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났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장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등급 기준을 만들었다. 당초 야영장의 시설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설계하여, 시설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비스와 관련한 항목은 우수야영장과 특급야영장이 갖춰야 할 권장사항으로만 제시하였다.

이후 야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행태와 눈높이 등이 빠르게 변화하였기에 이에 부합한 새로운 기준 마련과 시설뿐 아니라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있다.

2.4. 우리나라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가.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

① 개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관광사업의 품질 유지 및 정보 제공으로 도 시민의 선택 폭을 넓히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를 운영하고 있다. 시행근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과 「농촌관광사업 등급

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1호)에 있다.

등급 평가는 매년 시행되며 4개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외)으로 분류되고, 등급 유효기간은 2년이다. 등급결정 대상은 농촌체험·휴양마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업자), 관광농원(「농어촌정비법」 제85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중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 농어촌민박(「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 중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자)이다. 등급결정 절차는 등급결정 신청(3월: 사업자→등급 결정기관), 등급결정 심사(3~10월: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급결정 결과통보(10~11월: 등급결정기관→사업자) 과정을 거친다. 등급결정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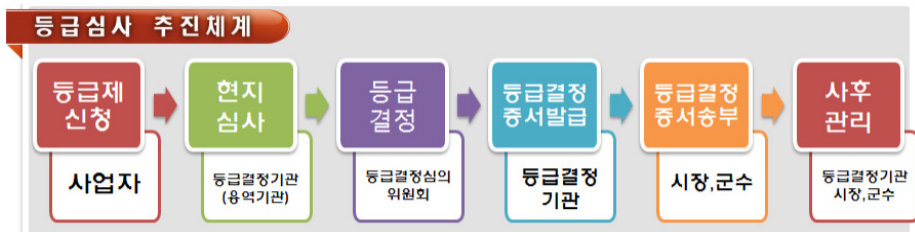
등급을 받은 사업체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촌여행 포털인 ‘웰촌’에 게시하여 전 국민이 쉽게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웰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맛집 등에 대한 모든 정보와 농촌여행 코스 추천은 물론 여행후기, 편리한 온라인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농촌관광 정책 및 사업을 소개하는 사이트이다(한국농어촌공사, 2022).

[그림 4-7] 농촌체험마을 등급결정 현황 이미지

시도	시군	여행재명	우등촌	등급결정					기업인보형	기준연도
				체험	교육	숙박	음식	관광/서비스		
경남	의령	나루마을	 						 	2022
전남	무안	월선권역	 							2022
전북	순창	순창 고추장익는 마을	 							2022
강원	고성	소동령마을								2022
강원	원주	삼송마을	 						 	2022
강원	강릉	정감마을	 							2022
강원	영월	예밀촌마을								2022

자료: 한국농어촌공사(2022), 웰촌(<https://www.welchon.com>)

[그림 4-8] 농촌관광사업 등급심사 추진체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2022), 2022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사업 소개

② 등급결정 평가부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부문은 체험, 교육, 음식, 숙박으로 구분되며 영역별로 필수항목과 공통항목으로 구성된다. 숙박부문은 가점항목이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4조).

‘체험부문’은 체험 관련 시설·인력·안전·위생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체험운영자·체험프로그램·체험환경·운영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교육부문’은 교육 관련 시설·인력·안전·위생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교육운영자·교육프로그램·교육환경·운영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음식부문’은 음식 관련 시설·인력·안전·위생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제공하는 음식·서비스·시설·환경 수준을 평가하고, ‘숙박부문’은 숙박 관련 시설·인력·안전·위생 기본사항 구비 여부 및 경관과 환경·시설·운영 서비스·운영관리 수준을 평가한다.

〈표 4-16〉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부문

부문	평가내용
체험부문	· 체험 관련 시설·인력·안전·위생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체험운영자·체험프로그램·체험환경·운영관리 수준
교육부문	· 교육 관련 시설·인력·안전·위생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교육운영자·교육프로그램·교육환경·운영관리 수준
음식부문	· 음식 관련 시설·인력·안전·위생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제공하는 음식·서비스·시설·환경 수준
숙박부문	· 숙박 관련 시설·인력·안전·위생 기본사항 구비여부 및 경관과 환경·시설·운영 서비스·운영관리 수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4조

등급 부여 기준은 부문별 만점을 기준으로 90% 이상은 1등급, 80% 이상~90% 미만은 2등급, 70% 이상~80% 미만은 3등급을 부여하고, 70%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

는다. 가·감점 항목은 부문별 만점에 포함하지 않고, 산출된 득점에 해당 점수를 가감하여 득점률을 산정한다. 그러나, 체험부문의 실내외 체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 교육부문의 실내외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 음식부문의 상차림이 없는 경우(뷔페식 등)에는 부문별 만점에서 해당 항목 배점을 제외하고 득점률을 산정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2).

이러한 등급결정 평가기준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첫째, 농촌관광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 부문별로 등급을 부여하되, 음식부문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자가 체험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음식부문 등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둘째, 농촌관광사업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등급결정대상 시설(체험, 교육, 음식, 숙박)은 “마을공동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필요할 경우 공동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을규약(정관), 사업계획서 등에 규정되어 있고 마을협의회 대표와 개인 시설 소유자가 마을공동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 합의 후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부문별 등급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셋째, 체험, 숙박, 음식 등 부문별 시설이 복수(숙박시설 중 단독건물에 복수의 객실 포함)인 경우,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인시설(객실)이 5동 이하일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5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의 50% 이상을 추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 평가할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22).

③ 등급결정 평가항목(현장심사)

현장심사 평가항목은 부문별(체험, 교육, 음식, 숙박)로 필수항목과 공통항목으로 구성된다. 첫째, 체험부문의 필수항목은 전문인력, 체험장, 안전물품, 보험가입, 응급전문성, 체험프로그램, 범죄경력 등을 포함한다.

〈표 4-17〉 현장심사 필수항목(체험부문)

평가영역	평가기준
전문인력	· 최소 1명 이상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보유(매뉴얼, 계획서 등에 교육운영자 명시)
체험장	·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장 시설을 갖추어야 함(1개의 시설 보유)
안전물품	· 구급약품과 소화기(최소 1식)를 보유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정기적인 점검 시행
보험가입	· 책임보험 가입(농촌관광보험 또는 책임배상보험)
응급전문성	· 운영자의 응급처치 교육 이수(유관기관의 일반과정 이상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지자체 안전위생교육) · 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다룬 계획서나 매뉴얼 등 문서자료 보유
체험프로그램	· 3개 이상의 체험프로그램 보유
범죄경력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서 제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출 자료를 근거로 서류평가 후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필수항목 미충족 시 평가는 불가하다. 공통항목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90%, 80%, 70% 기준)하고 세부유형 항목의 경우 80% 이상 득점 시 1등급인 경우만 아이콘을 사용하도록 한다.

둘째, 교육부문의 필수항목은 전문인력, 체험장, 안전물품, 보험가입, 응급전문성, 체험프로그램, 범죄경력 등을 포함한다.

〈표 4-18〉 체험부문 공통항목 및 배점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만점
체험 운영자	마인드	체험활동 이해 & 자긍심	6
		다원적 기능 이해	5
	개발역량	통합적 접근	5
		목표설정과 구체화	5
	진행능력	주의집중+상호작용	6
		활동안내	5
체험 프로그램	계획서	체험목표	5
		체험활동	3
		체험일정	3
		환류계획	3
		운영자 명화&역할분담	6
	다양성	수량	5
		대상의 다양성	3
		계절의 다양성	3
체험 환경	첫인상	진입경관	5
		진입경관 환경관리	5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만점
	안내체계	안내도	2
		간판	2
	주차장	주차공간 및 안전	5
	경관과 환경	내부경관	5
		내부경관 환경관리	5
	실외 체험시설	규모와 형태	5
		접근성	3
	실내 체험시설	규모와 형태	5
		채광과 통풍	2
		냉난방	2
	편의시설	남녀 구분된 화장실	5
		세면대	5
체험 운영관리	환경관리	청소상태	3
		정리정돈	3
		관리파일	2
	고객관리	사전협의	1
		평가관리	2
		안전수칙&위험요소	6
	안전관리	행정관리	2
		문서관리	2
	행정관리	카드&현금영수증	3
		교육수료	2
	가점항목		2
	계(가점제외)		143
	계(가점포함)		1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표 4-19〉 현장심사 필수항목(교육부문)

평가영역	평가기준
전문인력	· 최소 1명 이상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자 보유(매뉴얼, 계획서, 조직도 등에 교육운영자 명시)
체험장	·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장 시설 보유(1개의 시설 보유)
안전물품	· 구급약품과 소화기(최소 1식)를 보유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정기적인 점검 시행
보험가입	· 책임보험 가입(농촌관광보험 또는 책임배상보험)
응급전문성	· 운영자의 응급처치 교육 이수(유관기관의 일반과정 이상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지자체 안전위생교육)
교육프로그램	· 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다룬 계획서나 매뉴얼 등 문서자료 보유
범죄경력	· 3개 이상의 교육프로그램 보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서 제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출 자료를 근거로 서류평가 후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필수항목 미충족 시 평가는 불
 가하다. 공통항목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90%, 80%, 70% 기준)하고 세부 유형
 항목의 경우 80% 이상 득점 시 1등급인 경우만 아이콘을 사용하도록 한다.

〈표 4-20〉 교육부문 공통항목 및 배점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만점
교육 운영자	마인드	교육활동 이해 & 자긍심	6
		다원적 기능 이해	5
	개발역량	통합적 접근	5
		목표설정, 활동구체화	5
	진행능력	주의집중, 상호작용	6
		활동안내	5
교육 프로그램	교안	교육목표	5
		교육활동	3
		교육일정	3
		환류계획	3
		운영자 명확&역할분담	6
		수량	5
	다양성	대상의 다양성	3
		계절의 다양성	3
		교재도구	5
		공통 교재도구	5
교육 환경	첫인상	진입경관	5
		진입경관 환경관리	5
	안내체계	안내도	2
		간판	2
	주차장	주차공간&안전	5
	경관환경	내부경관	5
		내부경관 환경관리	5
	실외 교육공간	규모	5
		접근성	3
	실내 교육시설	규모	5
		채광과 통풍	2
		냉난방	2
	편의시설	남녀 구분된 화장실	5
		세면대	5
교육 운영관리	환경관리	청소상태	3
		정리정돈	3
		관리파일	2
	고객관리	사전협의	1
		평가관리	2
		안전관리	6
	안전관리	안전수칙&위험관리	6
		행정관리	2
	행정관리	문서관리	2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만점
	결제관리	결제방식	3
가점항목		전문성	2
		교육수료	2
계(가점제외)			148
계(가점포함)			15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셋째, 음식부문의 필수항목은 수질검사, 원산지 표기, 서류 보관, 유통기한 준수, 소화기 구비, 보험 가입, 사업자등록, 행정처분 등을 포함한다.

〈표 4-21〉 현장심사 필수항목(음식부문)

평가영역	평가기준
수질검사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
원산지 표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원산지 표시
서류 보관	· 식당운영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보관하며, 방문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
유통기한 준수	· 유통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
소화기 구비	· 주방용 소화기 최소 1식, 식당용 소화기 최소 1식 보유
보험 가입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사업자등록	· 음식점업으로 등록
행정처분	· 최근 2년간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음식부문 평가 신청 시, 필수지표 관련 자료 제출은 필수이며 행정처분의 경우 평가기관에서 사전 확인한다. 제출 자료를 근거로 서류평가 후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필수항목 미충족 시 평가는 불가하다. 공통항목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한다(90%, 80%, 70% 기준).

〈표 4-22〉 음식부문 공통항목 및 배점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만점
음식	재료	주재료	7
		부재료	7
	음식	향토음식	5
	메뉴	메뉴구성	3
		차별화	3
		상차림	3
서비스	종사원	종사원 청결	5
		조리원 청결	5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만점	
		메뉴지식	5	
		친절성	5	
	정보제공	정보제공	5	
		정보제공방법	5	
		메뉴판	3	
		가격표	3	
		식당(마을/농장)정보	4	
		지역정보	4	
	운영	카드 & 현금영수증	2	
행정문서관리		1		
거래기록관리		2		
시설	조리시설	조리시설관리상태	5	
		정기소독	2	
		가스누설경보기	2	
		환기시설	3	
		조리도구&식기관리	7	
		음식물쓰레기 관리	5	
		식재료보관	5	
	식사시설	식사공간	5	
		식음시설	3	
		환기시설	5	
		조명	3	
		냉난방시설	5	
	편의시설	주차공간규모	5	
		주차편의성	3	
		화장실과 세면대	5	
	안전시설	전기사용	3	
	환경	건물관리	외관관리	5
			주변 환경	5
			내부분위기&인테리어	5
진입시설		진입로(편의성)	5	
		안내체계	3	
쓰레기		쓰레기관리	5	
가점		친환경농산물	2	
		위생등급	2	
		인증, 대회수상	2	
		문서화된 표준레시피	2	
		식재료 생산지 확인	2	
계(가점제외)			171	
계(가점포함)			18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넷째, 숙박부문의 필수항목은 보험가입, 요금표 게시, 신고서 게시, 소화기 보유, 감지기 보유, 안전물품 보유, 누전차단기 보유, 범죄경력 등을 포함한다.

〈표 4-23〉 현장심사 필수항목(숙박부문)

평가영역	평가기준
보험가입	· 화재보험 가입
요금표 게시	· 요금표가 투숙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신고서 게시	· 농어촌민박의 경우 신고서, 체험휴양마을이나 관광농원의 경우 관련 서류 게시
소화기 보유	· 다층의 경우 층마다 최소 1개, 단독채의 경우 최소 1개의 소화기 보유
감지기 보유	· 모든 객실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단, 대체시설이 있는 경우 인정)
안전물품 보유	· 구급약품 비치
누전차단기보유	· 모든 숙박건물에 누전차단기 설치
범죄경력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이 없다는 서약서 제출 (소유자 및 주운영자 대상, 서약서를 통해 1차적으로 경각심을 갖추도록 하며, 관련 사실을 위배하였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페널티 조항을 신설하여 대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출 자료를 근거로 서류평가 후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는 불가하다. 공통항목 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90%, 80%, 70% 기준)하고 세부 유형 항목의 경우 80% 이상 득점 시 1등급인 경우만 아이콘을 사용하도록 한다.

〈표 4-24〉 숙박부문 공통항목 및 배점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만점
경관과 환경	외부경관	조화성	5
		농촌성	5
	진입로	쾌적함	5
		진입편의&안전	5
	내부경관	쾌적성	3
		농촌성	3
		편의성	3
	환경	쓰레기관리	3
시설	객실분위기	분위기	3
		객실다양성	3
		객실구분	3
	객실청결	청결상태	7
		방충망	3
	객실안전장치	잠금장치	3
	객실냉난방	냉방시설	2
		난방시설	2
	객실침구류	보유수량	3
		교체주기	3
		청결상태&보관방법	8
	객실비품	보유수량	3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만점
	화장실 내부시설	관리상태	3
		청소도구	3
		내부시설	3
		환기시설	2
	화장실	온수이용	3
		청결상태	3
		조명상태	2
	안전시설	비상구 안내	3
		비상 손전등	3
		전기안전	3
소화기		3	
운영 서비스	결제관리	카드&현금결제	3
	정보관리	이용약관	2
		비상시연락처	2
	예약관리	예약다양성	3
		객실정보제공	3
		실시간 파악	3
	정보제공	주변관광지안내	2
		농장/마을안내	2
	지역관광연계	관광연계	3
		농촌관광연계	3
	농업연계	텃밭	3
		자연관찰	3
	고객관리	불편해결	5
		반응평가	5
운영자	태도	대화&접객 태도	5
		불편응대	3
	전문성	문서관리	3
		홈페이지	3
		SNS 역량	3
		교육이수	3
		가점	보험
외국어	2		
객실침구류커버사용	2		
운영일지	2		
주변 CCTV	1		
장애인배려	1		
계(가점제외)			168
계(가점포함)			177

가점 항목	보험가입(+1점)	· 화재보험 이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외국어 서비스(+2점)	· 외국어로 표기된 안내문 등을 보유하고 있는 등 외국어로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가점 부여
	객실침구류 커버사용 (+2점)	· 객실 침구류에 커버를 사용하여 사용 시마다 교체하는 경우 가점 부여
	운영일지 작성(+2점)	·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는 경우 가점 부여
	주변 CCTV 보유(+1점)	· 숙소 주변 CCTV를 설치하여 유지 관리하는 경우 가점 부여
	장애인 배려(+1점)	·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배려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점 부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④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평가표 및 등급결정 예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관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4월 18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농촌관광사업 등급평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22.4.18.).

〈표 4-25〉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개정 평가표

구분	공통		체험(등급결정 부문)		음식(등급결정 부문)		숙박(등급결정 부문)	
필수 항목	구급약품, 보험가입, 응급전문성, 범죄경력, 교육이수, 안전시설		전문인력(1명 이상), 체험프로그램(3개 이상)		원산지 표기, 사업자 등록, 유통기한 준수		요금표 게시, 신고서 게시, 농어촌민박 표시	
평가 항목	경관과 환경(3)		체험 운영자 (20)	마인드	음식 서비스 (27)	식재료 생산지	시설 관리 (21)	객실구분
	화장실 및 편의시설(2)	개발역량		식재료 관리		객실냉난방		
		주차장(2)		진행능력		메뉴		객실침구류
				안전·주의사항 안내		음식정보제공		
			체험 운영조직 활성화					
	고객응대서비스(5)		체험 프로그램 (22)	체험 계획서/매뉴얼	시설 관리 (18)	조리시설 관리	운영 서비스 (20)	객실이용약관
	고객반응관리(4)	체험 시나리오		식사시설 관리		객실정보제공		
		다양성		조리도구·식기관리		환기·냉난방시설		농촌성
		농촌성						
	안전관리(5)	차별성						
	행정관리(2)	체험 환경 (22)	접근성	안전·위생 관리 (25)	종사원청결	안전·위생 관리 (29)	객실청결관리	
			안내체계					
			체험시설				정기소독	잠금장치
	정보관리(5)		체험도구		전기·가스안전관리		화장실 관리	
			체험 안전관리					
	결제관리(2)	교육 연계 (6)	체험 위생관리	음식물쓰레기관리		객실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교안								
교육 진행능력								
가점 (3)	CCTV	가점 (4)	체험 전문성	가점 (2)	조리사 자격증	가점 (1)	지역관광연계	
	장애인 배려 시설 보유		사회적 약자 배려 프로그램					
	응급전문성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4.18.),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등급체계 바꾼다.

개편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급 평가체계가 효율화된다. 평가 부문을 4개(체험, 교육, 숙박, 음식) 부문에서 3개(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개편하며, 평가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이고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22.4.18.).

둘째,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2022.4.18.). 또한 시설 및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을 높인다(농림축산식품부, 2022.4.18.)¹⁷⁾.

셋째,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을 늘린다. 사회적 약자 배려,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프로그램,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변별력을 강화한다.

〈표 4-26〉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개정에 따른 등급결정 예시

공통항목	공통점수 (30점)		등급결정 부문	부문점수 (70점)		최종점수	등급부여
공통	25점	+	체험/음식/숙박	70점	⇒	95점	1등급
	25점		체험/음식/숙박	60점		85점	2등급
	25점		체험/음식/숙박	50점		75점	3등급
	25점		체험/음식/숙박	40점		65점	등급외
	15점		체험/음식/숙박	-		-	등급 미부여

주: (1등급) : 공통 점수(30점) + 등급결정 부문 점수(70점) 합산 시 총점(100점)의 90% 이상

(2등급) : 공통 점수(30점) + 등급결정 부문 점수(70점) 합산 시 총점(100점)의 90% 미만 80% 이상

(3등급) : 공통 점수(30점) + 등급결정 부문 점수(70점) 합산 시 총점(100점)의 80% 미만 70% 이상

(등급외) : △ 공통 점수(30점) + 등급결정 부문 점수(70점) 합산 시 총점(100점)의 70% 미만

(등급 미부여) : △ 공통 점수(30점)가 60%(18점) 미만이거나, △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4.18.),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등급체계 바꾼다.

나. 농촌관광사업 등급 현황

2022년 8월 기준 80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이 가운데 24개 가 으뜸촌(4개 부문 모두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¹⁸⁾ 2022년 5월 기준 전국의 농촌체

17) 안전·위생 평가 비중: (체험) 9.8% → 21.4%, (숙박) 28.6% → 41.4%, (음식) 25.7% → 35.7%

18) 공공데이터 포털 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관광등급결정현황-20210818' 데이터 참고

험·휴양마을은 1,175개소로서 이 가운데 약 70%가량이 4개 등급 가운데 1개 부문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았다.¹⁹⁾ 한편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에 관광농원, 농어촌민박도 포함되어 있으나,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 등은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달리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등급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등급제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특징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부문은 체험, 교육, 음식, 숙박으로 구분되며 영역별로 필수항목과 공통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항목의 경우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 의무사항 등의 내용이며,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않으면 등급 부여가 불가하다. 농촌관광사업체 등급제도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되어 있어 관광 서비스 관점의 수준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특히 평가 항목이 시설의 규모, 시설의 유무, 시설의 위생 및 안전성 등에 치중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체나 마을이 지닌 문화, 자원,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4월 농촌관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위생관리 강화와 시설 이용 정보 등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가 항목 축소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평가체계를 효율화하고,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을 확대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5. 우리나라 호텔 등급제

가. 호텔업 등급결정제도

① 개요

호텔업 등급제도는 호텔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7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4년 9월 12일부터 호텔업은 3년마다 등급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

19) 공공데이터 포털 내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체험휴양마을_20220518’ 데이터 참고

다. 호텔업 등급제도는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호텔 등급제도와 마찬가지로 방한 외래관광객 및 국내관광객에게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등급제도는 호텔 시설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객관성을 확보하고 호텔산업의 질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공신력 확보, 신뢰성 있는 제도 마련을 통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지향, 불시 및 암행평가를 통한 공정성 강화, 전문화된 인력 풀(POOL)과 청렴교육을 통한 엄정한 평가 제도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텔산업 질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호텔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만족 지향,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호텔 서비스 품질 제고, 평가 및 호텔 운영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호텔 경쟁력 강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2)²⁰⁾.

호텔업 등급제도의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제22조(호텔업의 등급결정)에 제시되어 있는 호텔업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이 해당되며 유형별로 상이한 등록기준을 가지고 있다.

② 호텔업 등급결정 기준

호텔업의 등급은 「관광진흥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1성급·2성급·3성급·4성급·5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별 평가기준은 총 배점을 기준으로 관광호텔업은 1성·2성 600점, 3성 700점, 4성 850점, 5성 1,000점으로 구성되며 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은 1성~5성 600점이며 가족호텔업은 1성~5성 1,000점이다.

등급별 결정기준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을 기준으로 1성 호텔은 50% 이상, 2성 호텔은 60% 이상, 3성 호텔은 70% 이상, 4성 호텔은 80% 이상, 5성 호텔은 90% 이상 되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20)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운영하는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홈페이지(<https://www.hotelrating.or.kr/>) 내용을 인용하였다.

〈표 4-27〉 호텔업 등급결정 기준

구분			1성	2성	3성	4성	5성
평가 기준	관광 호텔업	현장평가	400점	400점	500점	585점	700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	-
		암행평가	-	-	-	265점	300점
		총 배점	600점	600점	700점	850점	1,000점
	한국전통 호텔업/ 소형호텔업	현장평가	400점	400점	400점	400점	400점
		불시평가	200점	200점	200점	200점	200점
		총 배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600점
	가족호텔업	현장평가	700점	700점	700점	700점	700점
		불시평가	300점	300점	300점	300점	300점
		총 배점	1,000점	1,000점	1,000점	1,000점	1,000점
결정 기준	등급별 기준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5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6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7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80%이상	평가점수가 총 배점의 90%이상
	공통 기준		1) 호텔업 등급평가기준에 따른 등급별 등급평가기준상의 필수 항목을 충족할 것 2) 제11조(안전 관련 법규 준수여부 확인) 1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가 유효할 것				

주: ① 관광호텔업 1, 2성은 통합 신청 및 접수방식으로 진행하며, 1, 2성 등급평가기준을 공통 적용됨. 관광호텔업 1, 2성은 총 배점의 60% 이상 득점 시 2성을 부여하고, 50% 이상 60% 미만 득점 시 1성을 부여함
 ② 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400점 및 불시평가 2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600점으로 함
 ③ 가족호텔업의 등급평가기준은 등급에 상관없이 현장평가 700점 및 불시평가 300점을 합산하여 총 배점을 1,000점으로 함

자료: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22), 홈페이지(<https://www.hotelrating.or.kr>);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7조제1항 (별표1)

③ 호텔업 등급 평가방법

호텔업의 등급 평가는 호텔업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장평가, 불시평가, 암행평가로 구분된다. 현장평가는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사전통지 후 조사로 수행되며, 불시평가는 등급평가요원이 해당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 조사로 이루어진다(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22). 암행평가는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하는 방법이다. 현재 등급결정기관으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호텔의 등급을 결정한다.

〈표 4-28〉 호텔업 등급평가 구분 및 등급평가단의 구성

구분		현장평가	불시평가	암행평가
		등급평가요원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율평가결과와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사업자에 사전통지 후 조사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방문하여 당일로 조사	등급평가요원이 당해 호텔에 사전통지 없이 암행으로 1박을 하며 조사
관광 호텔업	1~3성	전문가 2인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4~5성	전문가 3인	-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한국전통호텔업	1~5성	전문가 2인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가족 호텔업	1~5성	전문가 2인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소형 호텔업	1~5성	전문가 2인	전문가 1인, 소비자 1인	-
의료관광 호텔업	1~5성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수상관광 호텔업	1~5성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 중		

자료: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22), 홈페이지(<https://www.hotelrating.or.kr>);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호텔업 등급결정 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제8조제2항 / 제12조제1항 (별표4)

2.6. 우리나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① 개요

2000년대 들어 국내 80여 개 이상의 개별인증제 중복 인증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해외 주요 선진국이 국가 단일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경쟁국 대비 국가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광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해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국가 단일 품질인증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관광의 위상과 품질을 높이고자 여러 숙박업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해 왔다. 국내 우수 중·저가 숙박시설 육성 및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한 ‘굿스테이’, 한옥체험숙박시설을 선정하는 ‘한옥스테이’, 중·저가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주거시설을 일부 내어주는 ‘코리아스테이’ 등이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 외에도 숙박업종별 소관부처, 숙박업 관련 유관협회, 지자체별로 80여 개나 되는 제도가 생겨나며 혼란이 발생하자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부문 통합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채청비, 2022), 통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관광 품질인

증제도는 숙박, 쇼핑 등 관광 접점을 대상으로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단일화된 품질인증 및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한국관광공사, 2022).

품질인증제는 다양한 형태의 공급자 및 플랫폼 출현에 따른 정보의 다양화, 상품 소비단위의 개인화에 따른 소비자의 개별 대응력 약화,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및 경제 기여도 증진을 위하여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도의 추진방향은 개별인증제도의 단일 브랜드 내 통합관리, 글로벌 수준의 관광품질표준과 통합평가모델 도입·검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평가 프로세스 검증·보강, 인증을 통한 단계별 서비스 품질 관리프로세스 강화·검증, 인증제도 인센티브 발굴 및 도입 방안 마련이다. 품질인증제 운영을 통해 관광 접점 서비스(숙박업, 면세판매업, 일반음식점 등) 수용태세를 개선하고 안심여행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2).

② 인증심사 기준

한국관광 품질인증 심사는 숙박 및 쇼핑 부문 4개 업종(「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설·서비스, 인력 전문성, 안전관리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야영장도 심사 대상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인증대상 및 기준으로는 총점 800점을 기준으로 숙박업과 한옥체험업 일반은 스탠더드 70% 이상, 프리미어 90%이며 한옥체험업 헤리티지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형은 70% 이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홈스테이형은 80% 이상,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은 70%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표 4-29〉 인증대상 및 기준

인증대상			기준
숙박	숙박업	일반숙박업	[스탠더드] 총점의 70%이상 [프리미어] 총점의 90%이상
		생활숙박업	
	한옥체험업	일반	총점의 70%이상
		헤리티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게스트하우스형	총점의 80%이상 *2차 현장평가 미실시
		홈스테이형	
쇼핑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중대형	총점의 70%이상
		소형	

주: 총점은 800점(1차 400점 + 2차 400점)으로 평가분야는 시설·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이며 통과기준은 1차 + 2차 평가 (각 총점의 70%이상 득점)임. 1차 현장평가 배점의 70%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2차 현장평가 진행됨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한국관광 품질인증 홈페이지(<https://koreaquality.visitkorea.or.kr>)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인증기준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이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 서류평가는 제출 서류에 따른 신청 자격 구비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평가는 시설 및 서비스(60%), 인력의 전문성(20%), 안전관리(20%)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일 것이며 단, 일부 사업의 경우 득점하여야 하는 총점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은 총계의 10% 범위에서 변동이 가능하다.

〈표 4-30〉 평가 분야별 배점 비중

평가 분야	평가 항목	배점비중
가. 시설 및 서비스 분야	건물의 외관·내부시설의 유지·관리	60%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 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규정에 따른 서비스이행표준의 준수	
나. 인력의 전문성 분야	관광객 응대에 필요한 종사원의 전문성	20%
	외국인 관광객 응대를 위한 외국어 능력	
	종사원의 서비스 교육·훈련 이수 결과	
다. 안전관리 분야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 및 관리	20%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관리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관리	
	화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체계 구비	
총 계		100%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한국관광 품질인증 홈페이지(<https://koreaquality.visitkorea.or.kr>)

〈표 4-31〉 인증 대상별 현장평가 통과기준

인증 대상	업종 분야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일반 음식점업	
		일반		생활		일반		헤리티지		G형		H형		중대형		소형		-	
현장평가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배점(점)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X
기준	필수 사항 충족																		
	(스탠더드) 총점의 70% 이상							총점의 70% 이상	총점의 70% 이상	총점 의 80 % 이상	총점의 70% 이상						1차 현장평가 평가 총점의 70% 이상		
	(프리미어) 총점의 90% 이상																		

주: 1차 현장평가 배점의 7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하여 2차 현장평가 진행 (70% 미만 득점 시 인증 부적합). 인증 갱신심사는 1회 불시평가로 진행(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H형)은 1회 현장평가로 진행)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한국관광 품질인증 홈페이지(<https://koreaquality.visitkorea.or.kr>)

③ 인증심사방법

평가방법은 서류 심사, 1차 현장평가, 2차 현장평가(불시, 암행평가), 품질인증운영회 심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1차 현장평가는 평가 총점(400점)의 70%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2차 현장평가 또한 평가 총점(400점)의 70%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을 거치고 난 후에도 지속적인 재심사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채청비, 2022).

품질 인증업소는 인증 홍보물 제공(인증현판, 인증서, 인증스티커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우대 혜택(기준금리 대비 0.75%~1.25% 우대/2022년 하반기 기준), 인증업소 역량 강화 지원(위생/불법촬영범죄 예방 컨설팅, 온라인 서비스 교육 등), 소비자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 제공, 홍보마케팅(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SNS를 통한 인증업소 홍보, 품질인증 브랜드 홍보, OTA연계 인증업소 프로모션 실시) 등의 지원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 2022).

〈표 4-32〉 인증심사 및 평가방법

구분	서류평가	1차 현장평가	2차 현장평가 (불시, 암행평가)	심의
평가담당	한국관광품질인증 사무국	평가요원(2인 1조)	평가요원(2인 1조)	자문위원회
평가분야	신청 자격 구비	필수기준, 시설 및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안전관리 분야		현장평가 결과
평가총점	-	400점	400점	-
통과기준	신청 자격 구비	필수기준 충족		-
		평가총점(400점)의 70%이상 득점	평가총점(400점)의 70%이상 득점	

주: 인증 갱신심사는 1회 불시평가로 진행 (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H형)은 1회 현장평가로 진행)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한국관광 품질인증 홈페이지(<https://koreaquality.visitkorea.or.kr>)

〈표 4-33〉 사업별 필수 사항

구분	필수사항
숙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응대를 위한 안내 데스크가 개방형 구조일 것 · 주차장에 가림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 · 시간제로 운영하지 않을 것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방송을 제한할 것 · 요금표를 게시할 것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 일 것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실, 침구, 욕실, 조리시설에 대한 청결 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 일 것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출입을 제한하지 않을 것 · 품질보증서, 성적증명서 또는 적성검사서 등을 구비할 것 ·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구분	필수사항
일반음식점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일 것 · 식기, 수저에 대한 청결수준이 보통(5단계 평가 시 3단계) 이상일 것 · 남녀 화장실이 분리되어 구비되어 있을 것 · 식재료의 원산지 표기와 실제 원산지가 동일할 것 · 한글 외에 최소 1개 이상의 외국어가 병기된 메뉴판을 제공할 것

자료: 한국관광공사(2022), 한국관광 품질인증 홈페이지(<https://koreaquality.visitkorea.or.kr>)

나. 한국관광 품질인증 현황

2021년 9월 30일 기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관광사업체는 총 530개소이다²¹⁾. 2020년 기준 관광산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사업체 수가 각각 1,935개소, 1,449개소로 집계되었다. 품질인증 대상 사업체의 전체 수를 고려하면, 품질인증을 받은 숫자가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특징과 한계

품질인증기준은 관광객 관점에서 품질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출 것,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으로부터 관광객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해당 사업의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2019년 국정감사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관광사업체들이 폐업 등으로 인증 취소되는 사례와 품질인증을 받았지만 합법적인 운영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 등이 지적된 바 있다.²²⁾ 따라서 인증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대단히 중요하다.

3.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현장에서는 인·허가 미이행 등의 불법 조성 및 운영 사례와 안전·위생 기준 미준수 등의 사례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야영장 사업자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의 현행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안전관리와 관련한 민간위탁 법령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공공데이터 포털 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품질인증현황-09-30-2021' 데이터 참조

2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1011425064118>

3.1. 민간위탁의 개념과 입법 형식

가. 민간위탁의 정의 및 목적

① 민간위탁의 정의

정부가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 사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를 법인·단체나 기업, 개인에게 위탁해 그 명의로 책임으로 수행하게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목적

행정기관이 수행하던 기능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i) 행정규모를 축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ii)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iii)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조

이 영은...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위탁의 입법형식

① 개별법령에 의한 위탁

개별법령에 의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위탁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탁

개별법령에 위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탁하게 되나, 원칙적으로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탁은 가급적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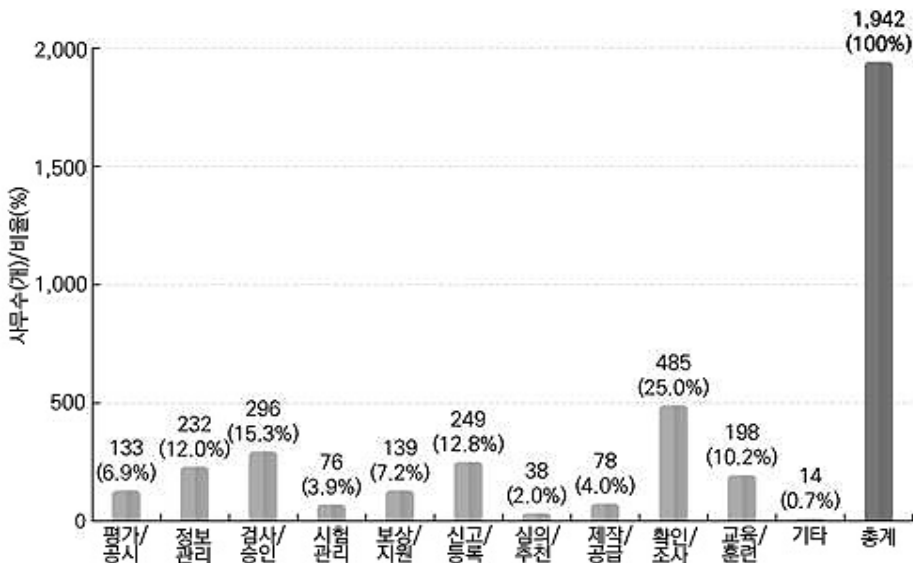
...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민간위탁 현황

2017년 기준, 총 46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36개 기관에서 406개 수탁기관에게 1,750개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요한 위탁사항을 살펴보면, 확인 및 조사 업무가 25%, 검사 및 승인 업무가 15.3% 그리고 신고 및 등록 업무가 12.8%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이유로는 전문성(55.4%), 효율성(15.2%), 서비스 품질 향상(4.4%) 및 비용절감(2%)을 들고 있다.

[그림 4-9]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2017.4.4.), 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보도자료).

3.2. 주요 법령별 민간위탁 규정

승강기,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전기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살펴볼 수 있다.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와 관련하여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정기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2조 (안전인증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7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소방관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법」

전기 안전관리교육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전기안전시공교육은 공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제43조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에, 제2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자단체(이하 “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2.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시공교육
3.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민간위탁 시 고려사항

2016년 시행한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실태조사(‘16.7-’16.12) 결과, (i)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로서 위탁이 부적절한 사무를 위탁하거나 (ii) 수탁기관이 유관 이익단체로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 또는 (iii) 독점위탁의 관행적 장기화에 따라 경쟁력 있는 기관의 시장진입이 차단되거나, (iv) 부실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로 인해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행정안전부, 2017).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 시 위탁이 적절한 사무인지, 수탁기관이 적절한지, 독점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는 없을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가격 및 사업체 등록 정보 게시

이용자의 안전, 위생 등을 비롯하여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격 정보 및 사업체 등록 정보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사례를 살펴본다. 야영장에서의 숙박 활동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위생 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는바, 우리나라의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을 사례로 한다. 또한 관광사업과의 비교를 위해 관광숙박업을 살펴본다. 국외 사례로서 프랑스 야영장에 대한 정보 게시 의무 사례를 살펴본다.

4.1. 농어촌민박사업 요금, 신고 사업장 표시 의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 취약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였다. 이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안전점검 실시 의무, 농어촌민박사업장 표시 의무 등을 추가하였다(「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²³⁾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 3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사항 및 표시 방법을 별표로 제시하였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6.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3) 「농어촌정비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72호, 2020. 2. 11., 일부개정]

4.2. 숙박업 요금 및 신고증 게시 의무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²⁴⁾ 숙박업은 동법에서 말하는 공중위생영업의 일종이며, 이용자가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동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별표 4)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숙박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여야 하고,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 관련)

1. 숙박업자

...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

4.3. 관광숙박업(호텔업) 표지 부착

관광숙박업을 비롯해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에 따라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사업 등록증 게시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한편 호텔업의 경우 등급 평가 신청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등급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1조(목적)

「관광진흥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 ① 관광사업자는 사업장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를 붙일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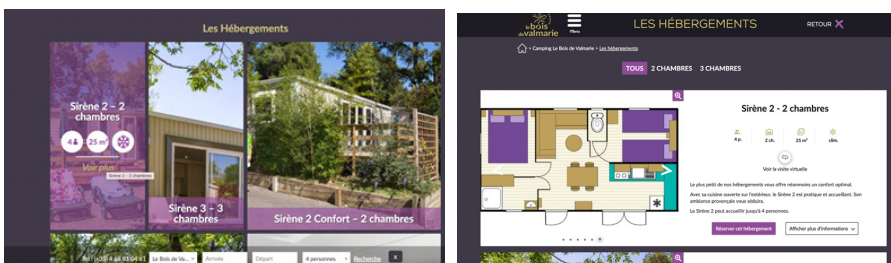
제19조(관광사업장의 표지) 법 제10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광표지”란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말한다.(개정 2008. 3. 6., 2014. 12. 31.)

1. 별표 4의 관광사업장 표지
2.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3. 등급에 따라 별 모양의 개수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텔 등급 표지(호텔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6의 관광식당 표지(관광식당업만 해당한다)

4.4. 프랑스 야영장 정보 게시 의무

프랑스는 DGCCRF(경제부 산하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의 소관 법령(arrêté)에 따라 야영장 이용가격(부가세 포함)을 다음 장소에 자세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장소는 야영장 이용수칙, 야영장 입구, 리셉션, 홍보물 및 웹사이트를 포함한다. 또한 야영장 내 카라반, 모빌홈, 방갈로의 임대는 다른 임대형 숙박업과 마찬가지로 시설과 임대 조건이 이용객에게 자세하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림 4-10] 프랑스 야영장 정보 게시 사례



주: 개별 야영장 웹사이트는 규격화되어 있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야영장 정보를 제공함

5. 사례 분석 시사점

가.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관리 체계, 민간의 참여 동기 유발 필요

일본의 야영장 등급제는 민간 협회 중심으로 회원 사업체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의 야영장 등급제는 정부에서 등급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주고 민간협회 등의 조직에서 등급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전자가진단을 등급 평가 체계 내에 두어 야영장 사업자의 자발적인 관리를 돕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참여 동기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사업은 등급결정 결과를 웰촌 홈페이지를 통해 전 국민이 알아보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등급제도 운영의 취지가 객관적인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이 홍보 효과가 되어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개선 의지를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나. 시설 외에 야영장의 입지적 특성을 비롯한 다양한 평가 기준 고려

우리나라는 2015년 국립공원 야영장에 한해 등급제가 도입되었으나, 편의시설 위주의 평가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되어 야영을 포함한 아웃도어 레크리에이션 만족도의 주요한 지표인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고재열, 2015; 김현정·김학준, 2020). 일본과 프랑스의 야영장 등급 평가기준이 단순 시설 수준 외에도 접근성, 자연 및 주변 환경, 운영 관리와 직원 교육 등을 비롯해 장애인 접근성과 지속가능성까지 기준으로 다루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평가 기준 설정 시, 우리나라 야영장 현황과 정책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등급제 및 인증제도의 도입 목적이나 취지,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는 2013년 처음 시행하였으며, 올해 등급 평가체계와 평가기준 개편을 예정하고 있다. 평가 부문 축소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안전과 위생관리 평가를 강화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 시설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소비자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등급제 평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야영장업 현황에 부합한 제도 설계 중요

야영장은 호텔 등과 달라 정형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제한이 있다. 즉, 국민들의 야영 행태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야영장 사업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영장 특성과 현황에 부합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경우, 인증사업체의 폐업이나 위법한 운영 등으로 구설에 오른 사례가 있다. 등급이나 인증을 부여받는 대상은 적절한 운영과 일정 이상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라. 야영장업 안전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성 활용 검토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승강기,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전기 등의 안전관리 등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의 안전관리업이 별도로 있는 등 민간 참여가 활발하다.

야영장업 관리·감독 현황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 및 위생 관리 부문의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간위탁이 유효한 접근 방안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방식의 도입은 결국 야영장 이용자, 즉 국민들의 안전한 야영장 이용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 가격 및 사업체 등록 정보 게시

가격이나 사업체 등록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차원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숙박업 역시 숙박업신고증과 숙박요금표 게시 의무가 있다. 프랑스 야영장에 대해서도 가격과 이용자가 이용할 시설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요컨대 미등록 사업체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및 피해가 우려되거나, 이용자가 비합리적인 가격 지불로 만족도 및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게시 의무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5장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1. 제도 개선 관점

우리나라 야영 문화는 1980년대 이후 국민 여가활동이 증가하면서 등산객을 중심으로 산이나 계곡에서 야영을 하는 형태가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유리화 외, 2016).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국립공원(환경부)과 자연휴양림(산림청)을 중심으로 야영장을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캠핑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광농원 야영장, 국토교통부의 유원지 야영장 등 다양한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야영장을 조성하였다. 민간에서도 산이나 계곡 등의 부지에서 야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다가 2010년 이후 야영 수요가 급격히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야영장을 조성·운영하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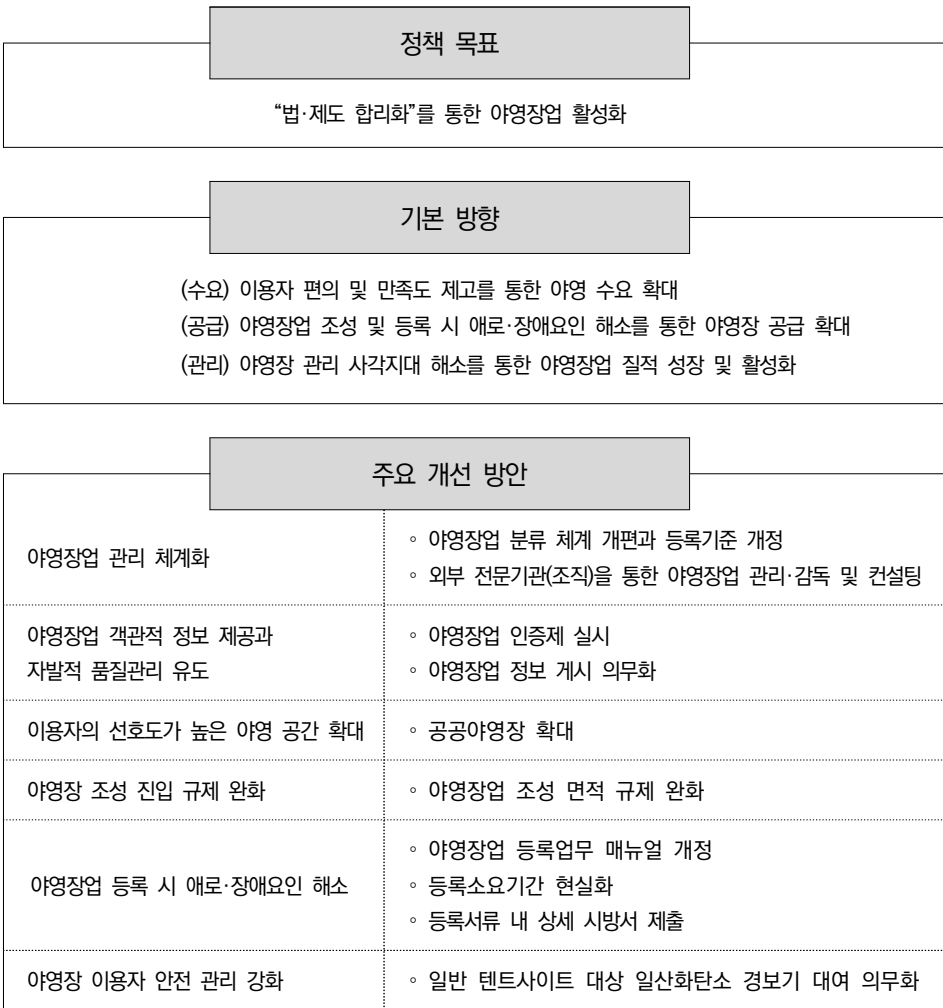
2015년 야영장업을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로 신설하고 야영장의 등록기준과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야영 이용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야영장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신종 야영 시설이 난립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대다수의 야영장이 야영장업 등록 이후, 등록 기준이나 안전·위생 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야영 수요와 공급의 양적 규모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질적 수준이나 이용자의 안전은 담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야영장업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유는 야영장업을 둘러싼 현황 진단과 여건 변화 등을 토대로 야영장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야영장업 활성화’는 야영장 이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야영장에 대한 이용 수요를 확대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이용자 만족 및 안전, 자연환경 보전 등의 기본 원칙 아래, 야영장업 등록 및 운영 시 제약 요인

을 해소함으로써 야영장업계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불필요하고 시대적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 자연환경 보전 등과 관련한 필수불가결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규제 관점이 아니라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관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야영장 이용자(국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지향한다. 공공의 역할을 고려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되도록 한다.

[그림 5-1] 제도 개선 방향



2. 제도 개선 방향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과 안전·위생기준 마련 등으로 야영장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위생과 관련한 법·제도를 강화해 오고 있으나, 야영 수요와 공급의 급속한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 처방적 접근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 시행을 위한 준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법·제도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법·제도를 합리화하여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야영장업을 활성화한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야영 수요를 확대한다. 둘째, 야영장업 조성 및 등록 시 애로·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야영장 공급을 확대한다. 셋째, 야영장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야영장업의 질적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야영장업 관리 체계화, 야영장업 객관적 정보 제공과 자발적 품질 관리 유도,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야영 공간 확대, 야영장 조성 진입 규제 완화, 야영장업 등록 시 애로·장애요인 해소, 야영장 이용자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제2절 제도 개선 방안

1. 야영장업 관리 체계화

1.1. 야영장업 분류 체계 개편 및 등록기준 개정

가. 필요성

야영장업 관련 법·제도가 2015년 이후 본격적으로 마련된 계기는 강화도 글램핑 화재 사고였으며, 현재 야영장업과 관련한 안전·위생 이슈와 법·제도 위반, 관련 규정의 모호성 등 문제로 제기되는 사항의 상당 부분은 야영장에서 제공하는 글램핑 및 야영용 트레일러와 관련한 사항이다. 그런데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를 야영장의 편익시설로 구분하여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어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① 야영장업 세부 분류의 실효성 부족, 등록기준의 부적정

현재 야영장업을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며, 실제 야영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텐트 설치만 가능한 사이트와 차량을 함께 주차할 수 있는 사이트가 혼재되어 운영하는 곳이 많다.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을 해도 텐트 옆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일반야영장에서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텐트 사이트까지 차량 진입 및 주차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 유형 구분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또한 이용자들의 텐트가 대형화되면서 일반야영장업의 등록기준 중 하나인 천막 1개당 15㎡ 이상이라는 기준이 부적정하다는 의견도 많다.

② 편익시설 중심의 운영 행태와 법 적용 및 해석에 대한 혼란

야영장업의 기본시설로서 이용자가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사이트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시설 없이 글램핑이나 야영용 트레일러만 설치해 운영 중인 곳도 많다. 등록신

청 시, 또는 사후 점검 시에만 기본시설 구획을 마련하는 등 사실상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글램핑과 트레일러에 대한 명확한 등록기준이 없어 등록 및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야영장 사업자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해석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마다 상이하여 갈등을 빚는 사례도 나타났다. 글램핑 시설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점검 시 건축물로 판단해 강제 철거 명령이 떨어진다거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 등도 발생하였다.

③ 숙박업과의 차이 모호

글램핑과 트레일러 위주로 운영을 하는 야영장이 증가하면서, 지역 내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글램핑과 트레일러 시설은 내부에 화장실과 샤워실,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색 숙박시설로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야영장업의 입지 요건이나 사업자 의무 사항들이 숙박업에 비해 수월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사실 야영장업 내부에 이용자가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마련하여 제공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의 영업 형태와 유사하게 된다. 한편 야영장의 글램핑 소재 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야영장업계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고 점차 다양한 글램핑 시설 등이 조성되고 있는바, 사업자가 야영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야영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표 5-1〉 야영장업과 (관광)숙박업의 정의

구분	근거 법	정의
야영장업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숙박업	「관광진흥법」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정의)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나. 개선 방안

야영장은 그동안 비교적 저렴하게 가족이나 친구와 자연 속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야외 여가활동 공간으로 기능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다양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야영장 이용 비용과 형태 등이 상당히 달라졌다. 그로 인해 점점 더 현행법과 야영장 현장 간의 법·제도적 간극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야영장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야영장업 분류 체계 개편 및 등록기준 개정은 「건축법」과 숙박업 등 타 법 및 타 업종과의 관계를 비롯해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심도 깊은 연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야영장업 분류 체계 개편 및 등록기준 개정 시, 고려할 사항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한다.

① 야영장업의 본질에 대한 고려: 야영장업 기본시설과 편의시설에 대한 구분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관광숙박업과는 별개의 업종이다. 야영장업은 이용자가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야영에 적합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광숙박업은 이용자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야영장업은 ‘야영’에, 관광숙박업이나 숙박업은 ‘숙박’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야영이란, “텐트나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으로서, 자연 속에 마련한 임시 거처에 머무르며 “동지끼리 협동생활을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17; 유리화 외, 2016). 이러한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야영의 본질은 ‘야외 활동’과 ‘자연 체험’, ‘협동’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용자가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야영덱(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기본시설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숙박 형태에 가까운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은 야영 체험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현행과 같이 구분하되, 야영 체험시설로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야영 체험시설에 대한 명확한 시설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야영장업의 본질을 준수한다는 관점에서 기본시설 대비 글램핑이나 야영용 트레일러 등 야영 체험시설의 조성 규모 제한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글램핑야영장 및 카라반야영장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러한 운영 시 조성이 불필요한 기본시설(야영덱)과 공동이용시설(취사시설, 화장실, 샤워실 등) 설치 기

준을 없애달라는 업계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② 야영장업 세부 업종 재설정: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 통합 등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야영을 하는 공간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구분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이용자가 텐트나 캠핑용자동차 등을 이용해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사이트(토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사업자가 야영을 하는 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모빌홈 등)을 조성 및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를 기준으로 야영 사이트(토지)만 제공하는 야영장을 (가칭)일반야영장업, 그리고 야영 사이트(토지) 외에 편의시설 가운데 숙박이 가능한 야영 체험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모빌홈 등)을 1종 이상 포함하는 야영장을 (가칭)종합야영장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부합한 등록기준을 설정한다. 현재 두 개로 구분하고 있는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은 앞서 제안한 (가칭)일반야영장업 하나로 통합하고, 야영객들이 대체로 자동차를 이용해 야영장으로 이동하는 등 변화한 야영 시장에 부합한 등록기준을 설정한다. 천막 1개당 면적 규모, 차량 진입로 등의 등록기준을 제시한다.

다. 기대효과

야영장업 분류 체계를 개편함과 동시에 등록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현재 법·제도적인 불명확성과 현장과의 괴리 등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이용자의 편의나 만족도에 부합한 등록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등과 같은 신종 야영 시설에 대한 명확한 정책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야영장업 사업자와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1.2. 외부 전문조직을 통한 야영장업 관리·감독 및 컨설팅

가.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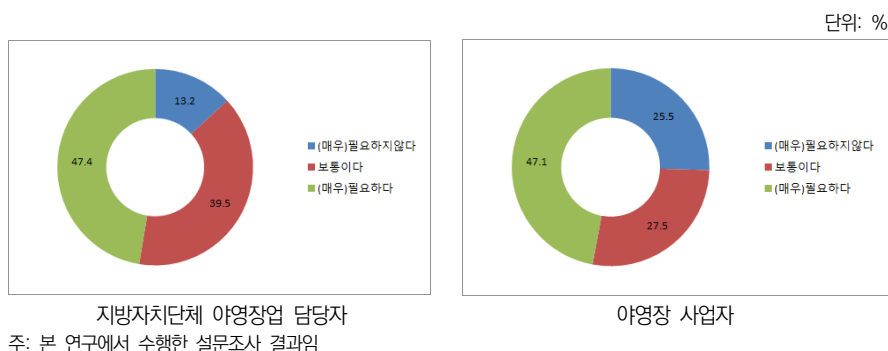
야영장업 등록제 이후 안전·위생기준 강화 등 지속적인 야영장업 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업 관리 실태를 조사할 때 마다 대다수의 야영장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 무단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 설치, 야영장 변경등록 미준수 등 야영장 등록·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축소 가입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은 야영장업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방증한다.

①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부족

야영장업 사업자가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현행 관리감독 체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자와 사업자 모두 전반적으로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자 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현행 야영장업 관리 방식에 대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포함)고 응답한 경우는 47.4%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야영장 사업자 역시, 51명(관리요원 포함) 가운데 47.1%만 현행 야영장업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포함)고 응답하였다. 더욱이 야영장 사업자 가운데 25.5%는 현행 야영장업 관리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매우 필요하지 않다 포함)고 응답하였다.

[그림 5-2] 현행 야영장업 관리 방식의 필요성



야영장업 안전·위생 관리 점검주체 가운데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야영장업 관리 점검주체의 적합성을 보통 이하(2.92점)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점검주체, 점검시기의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각각 2.47점과 2.61점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야영장업 사업자는 점검시기의 적합성을 보통 이하(2.98점)로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성에 있어서도 특히 점검시기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다.

〈표 5-2〉 야영장업 안전·위생 관리 체계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적합성		효과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야영장업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야영장업 사업자
점검주체	2.92	3.31	2.47	3.06
점검시기	3.03	2.98	2.61	2.98
점검항목	3.18	3.24	2.97	3.06

주: 1. 5점 만점(3점 보통)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산술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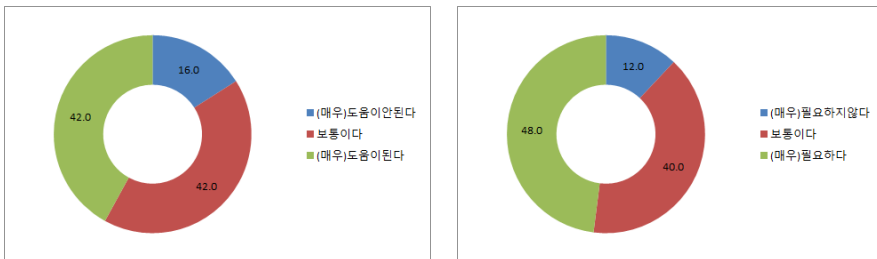
2.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임.

② 야영장업체 대상 안전 교육의 실효성 부족

야영장업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매년 1회 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야영장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위생기준을 숙지하게끔 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실제 야영장업 사업자와 관리요원들은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무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야영장업 사업자(관리요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1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52.9%)만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8.8%로 절반에 채 못 미쳤으며,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42.2%에 불과하였다.

[그림 5-3] 야영장업체 대상 안전 교육에 대한 업계 의견

단위: %



효과성

필요성

주: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임

③ 외부 전문조직을 통한 관리·감독 및 컨설팅 필요성 공감

현행 야영장업 관리·감독 체계와 교육 실효성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야영장업 안전 관리 전문기관에서 야영장을 방문하여 등록기준을 비롯해 안전·위생 관리 기준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38명 대상 설문)의 86.8%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포함)고 응답하였다. 반면 야영장업 사업자(관리요원 포함 51명 대상 설문)의 39.2%가 외부 전문조직을 통한 관리·감독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포함)고 응답하였다. 야영장업 사업자의 필요성 공감이 낮은 이유는 야영장업 사업자(관리요원) 측면에서는 관리·감독의 대상으로서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예상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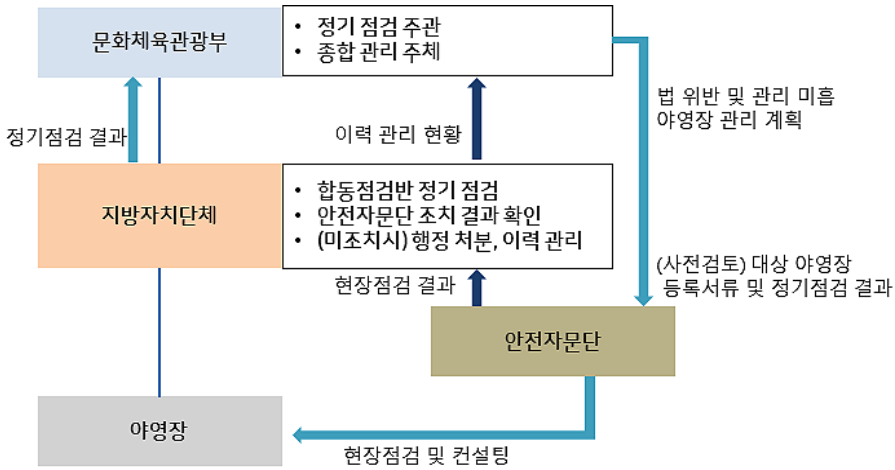
야영장업체 대상 안전 교육을 비롯해 현행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 부족,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불법·편법 운영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부 전문조직을 통한 야영장업 관리·감독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후속관리이자, 사업자 대상 안전 교육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칭) 야영장업 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야영장업 안전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토목, 건축, 소방, 가스, 전기, 위생, 운영·관리 등으로 구분해 각 분야의 자격이나 전문성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로 안전자문단을 구성한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풀을 구성하고, 안전 점검 매뉴얼을 토대로 공통적인 점검과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안전자문단의 현장 점검과 컨설팅은 연 2회 실시하는 정기점검에서 법 위반 및 안전·위생·기준 미흡 정도가 심한 야영장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안전자문단이 야영장업 등록 서류와 정기점검 결과를 검토한 이후, 사업자와 방문일정을 협의해 현장 점검 및 개선 방안을 컨설팅한다. 안전자문단의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미조치 시 행정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행정 처분에 대한 이력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종합 관리한다.

[그림 5-4] 가칭) 야영장업 안전자문단 운영 체계(안)



주: 연구자 작성

② 고려사항

현재 야영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점검은 전체 야영장을 포괄하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정기 점검이나 행정안전부 주관의 국가안전대진단 시, 계곡이나 하천 등에 입지하여 산사태나 홍수·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노후화되고, 글램핑이나 야영용 트레일러와 같은 숙박용 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야영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향후 안전자문단의 현장 점검과 컨설팅 효과를 평가하여 후속 관리 차원이 아니라, 주요 안전 관리 수단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증제 도입과 함께 사업자 요청 시 안전자문단의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이 진행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야영장업 점검 업무를 민간위탁 업무로 규정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과제로 둔다. 또한 현재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업자의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반기별 점검표 취합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다. 기대효과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자체점검과 지방자치단체의 점검표 취합, 사업자 대상

연 1회 이상 안전 교육, 그리고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 현장점검과 환류 체계 부재 등은 야영장업 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다. 야영장업 안전자문단 구성·운영을 통한 현장 점검과 컨설팅은 이상의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안전자문단의 전문성 있는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야영장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야영장업의 품질을 제고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2. 객관적 정보 제공과 자발적 품질 관리 유도

야영장업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자발적 품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야영장업 인증제를 실시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 근절과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야영장업 정보 게시를 의무화한다.

2.1. 야영장업 인증제 실시

가. 필요성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제와 품질인증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이미 2015년과 2018년에 마련된 바 있다. 본 제도의 도입 목적은 야영장 이용자에게 신뢰도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사업자로 하여금 등급 및 인증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질적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가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우선 등록기준을 맞추는 게 순서라는 의견과 야영장업의 영세성, 야영장업의 시설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정형화된 평가 기준을 설계하고 적용하기 어려움 등의 의견이 많아 아직까지 등급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① 이용자의 편의 및 만족도, 안전·위생 등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 필요

하지만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7년여 시간이 흘렀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야영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야영장이 조성·운영 중인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야영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야영장 공급이 늘어나면서 야영장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과 야영장 예약이나 환불, 요금 관련한 이용자 불만 사항

이 커지고, 안전·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즉, 이용자의 편의 및 만족도뿐만 아니라 안전·위생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과 안전·위생 기준이 야영장업이 준수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라면, 인증 기준은 법에서 규정한 표준을 지키되 그 이상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목표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등급제는 특정 기준에 대한 상대적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별 차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현재의 야영장업 현황과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기준에 대한 합·부를 평가하는 인증제 방식을 먼저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등급제·인증제 도입에 대한 이용자의 높은 호응도

전국의 야영장 이용자 200명과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38명, 야영장업 사업자(관리요원 포함) 50명을 대상으로 등급제와 인증제, 그리고 특성화 야영장의 인증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높았다.

야영장 이용자의 경우 등급제 및 인증제 적용에 대해서는 76.5%가 필요(매우필요 포함)하다고 응답하였고, 특성화 야영장에 대한 인증 역시 73.5%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등급제 및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용자 가운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시설 관리가 가능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등급제 및 인증제 적용에 대하여 필요없다(전혀 필요없다 포함)는 의견이 44.7%로서,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포함, 26.3%)는 의견에 비해 우세하였다. 등급제 및 인증제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야영장의 특성상 등급제 적용이 쉽지 않고, 시설과 서비스 이외 자연환경과 같은 요인이 이용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 등급제 적용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다양한 이용자의 욕구(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 야영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콘텐츠(서비스)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야영장을 인증하는 일명 ‘특성화 야영장 인증’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47.4%가 필요(매우 필요하다 포함)하다고 응답하였다.

야영장업 사업자는 등급제 및 인증제 적용에 대해서 필요없다(전혀 필요없다 포함)는 의견이 43.1%이며,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포함, 31.4%)는 의견에 비해 다소 우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비해서는 등급제 및 인증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더 높았고, 특성화 야영장을 인증하고 홍보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

의 53.0%가 필요(매우 필요하다 포함)하다고 응답하였다. 야영장업 등급제 및 인증제가 필요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야영장의 특성상 등급제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 외에 등급 및 인증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급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보수 비용 부담 등을 제시하였다.

〈표 5-3〉 등급제 및 인증제 적용 필요성

단위: %

구분	등급제 및 인증제 적용					
	전혀 필요없다	필요없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필요+매우필요하다
야영장 이용자	1.0	4.5	18.0	52.0	24.5	76.5
지자체 공무원	26.3	18.4	28.9	23.7	2.6	26.3
야영장업 사업자	13.7	29.4	25.5	21.6	9.8	31.4
구분	특성화 야영장 인증 및 홍보, 인센티브 지원					
야영장 이용자	1.0	4.5	21.0	52.5	21.0	73.5
지자체 공무원	7.9	18.4	26.3	42.1	5.3	47.4
야영장업 사업자	11.8	11.8	23.5	41.2	11.8	53.0

주: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임

나. 개선 방안

현재 우리나라의 야영장업 발전 수준과 관리·운영 현황, 이용자 편의·만족도 현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증제를 우선 실시하고자 한다. 야영장의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영세한 야영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차등적 등급제의 도입보다는 야영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함이다.

친환경, 안전 특화, 무장애 등 야영장의 시설이나 특성 중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분야에 따라 우수 야영장을 인증하고 검색포털이나 고캠핑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① 인증 목적 및 평가 체계

국민들의 야영 행태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야영장 사업체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야영장의 특성에 부합한 인증이 가능하도록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위생·안전 및 품질 특성을 갖춘 야영장이 정당한 절차로 관리·운영되

고 있음을 인증함으로써, 야영장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야영장업을 발굴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야영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둔다. 또한 현행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등록기준과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 별표7)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용자에게 공식적이고 객관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 선택권을 부여하고, 야영업자에게는 시설 및 서비스, 관리·운영의 보완과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인 야영장업의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평가 단계는 i) 서류평가, ii) 현장평가로 구성한다.

② 인증 기준(안)

이용자의 야영장 선택 기준이나 선호도가 각기 다를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증 기준을 설계한다. 특히 단순히 편의시설이 많은 야영장이 더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스펙트럼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방향 및 품질 제고에 주안점을 둔다. 예를 들어, ① 친환경 및 탄소 중립, ② 안전 특화(야영장 관리자가 안전요원 혹은 응급처치사 자격증 소지, AED자동 심장충격기 설치 등), ③ 무장애(Barrier-Free), ④ 체험프로그램 다양성, ⑤ 반려동물 친화(반려동물 동반 가능 등), ⑥ 어린이 친화, ⑦ 외국인 친화 등 다양한 특성화 분야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과 안전·위생기준 등 법령 준수는 기본으로 한다.

현재 야영장업 관련 문제 상황 개선과 각 야영장업의 특성에 부합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 항목과 특성화 항목으로 구분해 다음의 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시설 관리는 야영장 등록 및 시설 적법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게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둘째, 안전 관리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중 안전 관련 주요 사항을 포함한다. 셋째, 운영 관리는 이용자 대상 정확한 정보 제공 여부와 지불 편의 등 이용자 편의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한다. 넷째, 위생 관리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중 위생 관련 주요 사항을 포함한다. 다섯째, 실내 관리는 야영장 사업자가 설치한 글램핑 및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를 운영하는 경우 객실 내부 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포함한다. 여섯째, 글램핑 구조 관리는 글램핑 설치 소재 및 구조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포함한다. 이 외에 ESG경영 관련 활동은 가점 사항으로

고려한다. 한편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은 위법 시 인증이 불가한 필수 지표로 선정한다.

기본 항목은 인증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항목이며, 대부분 가/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야영장 사업자 스스로 점검하기 용이하게 설계한다. 여기에 다양한 특성화 항목을 더하는 구조를 고려한다. 특성화 항목은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③ 고려사항

네덜란드의 ASCI(유럽 31개국의 9,900개 야영장(2020년 2월 현재 기준)의 관련 정보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방식처럼 색상(파랑, 노랑, 초록, 빨강)으로 야영장의 특색을 나타내어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선택이 가능하도록(문화체육관광부, 2012)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검색포털이나 ‘고캠핑’ 사이트와 연계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인증제도가 소기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증제에 참여하는 야영장 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인증제에 참여하고 자율적으로 품질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컨설팅, 지원 사업 확대 등의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인증제 도입 및 운영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성화 분야에 대한 ‘우수 야영장’ 선정 제도로서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표 5-4〉 야영장업 인증제 평가지표(안)

구분		평가지표	비고
기본 항목	1. 시설 관리	1) 등록 야영장-실제운영야영장 준수 상태	위법 시 인증 불가
		2) 건축물 및 이용시설의 적법성 (건축법 위반 건축물 운영 여부 확인)	위법 시 인증 불가
		3) 이격거리 확보	
	2. 안전 관리	1) 소화기 설치 및 관리 상태	
		2)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3) 야영장 시설배치도(비상대피도) 부착 여부	
		4) 폐쇄회로TV(CCTV) 설치 여부	
		5) 야영장 안전수칙 게시 여부	
		6)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7) 안전상비의약품 보유	

구분		평가지표	비고
특성화 항목		8) 매월 안전점검 실시 여부	
		9) 안전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여부	
		10) 차량 서행 속도 안내판 설치 여부	
	3. 운영 관리	1) 야영장업 등록증 게시 여부	
		2) 요금표 게시 및 준수 여부	
		3) 환불규정 운영 고지 여부	
		4) 지불수단 편의성(카드결제기 등 보유여부)	
		5) 영업시간 내 관리자 배치 여부	
		6) 온라인정보 업데이트 및 준수 여부	
	4. 위생 관리	1) 위생서비스 제공 (방역물품 제공 여부)	
		2) 영업장 정기적 소독 여부	
		3) 화장실/샤워실 품질 상태	
		4) 화장실/샤워실 환기 및 배수 상태	
		5) 분리수거대 청결관리 상태	
	5. 실내 관리 *글램핑 또는 카라반 시설 설치 운영사업자 해당	1) 객실 청결 상태	
		2) 침구류 청결 상태	
		3) 객실 내 화재경보장치 설치 및 관리 상태	
		4) 객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여부	
		5) 객실 환기 상태	
	6. 글램핑 구조 관리 *글램핑 운영 사업자 해당	1) 소재 확인(방염 처리된 천막 등)	
		2) 비상 시 외부탈출이 용이한 구조	
		3) 글램핑장 관련 시설의 적법성(건축법 등)	위법 시 인증 불가
	7. ESG경영 관련 활동 *가점항목	1) ESG 경영관련 활동 증빙 확인 시 가점 부여	활동 개수에 따른 차등점수
	A. 친환경 및 탄소중립	1) 친환경 및 탄소중립 시설(전기차 충전소 등)	활동 개수에 따른 차등점수
		2) 친환경 및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	
	B. 안전 특화	1) 응급 의료 대응 시설(자동심장충격기 등)	
		2) 관리자의 안전요원, 응급처치사 자격 여부	
	C. 무장애	1)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 여부	활동 개수에 따른 차등점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업소 인증 여부	
	D. 체험프로그램	1) 여가 레크리에이션 시설	활동 개수에 따른 차등점수
		2) 여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E. 반려동물 친화	1) 반려동물 이용 시설	활동 개수에 따른 차등점수
		2)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	

자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 한국관광품질인증 여타업종 평가지표 참조 작성

다. 기대효과

야영장업 인증제의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각 주체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야영장 이용자

우선 야영장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야영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야영장 선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불법 미등록 야영장, 변경 미신고 야영장, 비합리적 요금 및 예약 관련 문제, 안전 및 위생 관리 문제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야영장 정보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여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야영장 이용자의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예약·환불 문제, 요금 문제, 운영자 불친절 및 안내 관리 문제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

② 야영장 사업자

야영장 사업자로 하여금 객관적 기준을 통한 자체점검과 인증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법정임의 형식으로 추진되는 한국관광품질인증제의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으며, 여타 정부의 규제에 비해 자율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수단적 특성을 지닌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전에 제시되는 인증 평가기준을 통해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및 서비스 기준을 자체점검하고 지침을 바탕으로 해당 야영장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부 불명확한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평가기준(안)을 제시하여 사업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인증 받은 야영장의 경우 타 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으며, 인증 받은 야영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정부

정부 차원에서는 인증제를 통한 야영장업 관리 및 활성화 정책 추진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야영장 실태 점검 결과 빈번하게 발견되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 미이행, 변경등록 미준수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인증제를 마련하여 적법한 허가 이행 및 관련 법 준수를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한 특성화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방향에 부합한 야영장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2.2. 야영장업 정보 게시 의무화

가. 필요성

미등록 야영장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안전·위생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미등록 야영장 운영이 지속되는 것은 이용자가 있기 때문이고, 이용자가 등록 야영장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야영장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5%가 야영장업 등록 제도를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등급제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61.3%만 야영장을 선택할 때, 등록 야영장 여부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야영장 이용자 후기에서 추출한 불만 사항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요금에 대한 것이었고, 환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분쟁 사례로 기사화된 바 있다. 요금이나 환불 관련 정보 역시, 이용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야영 수요 증가에 의해 이용 요금 역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관련 정보를 통해 적정 가격 형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

한편 가족단위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야영장 내 수영장이나 트램펄린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러한 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등록 야영장의 경우 야영장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 혹은 공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 하는 이용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정보 게시 의무는 없어 이용자들이 책임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책임보험 혹은 공제 가입은 등록 야영장의 의무사항이자,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이용자의 손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개선 방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제7호 ‘그 밖의 준수사항’을 추가(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야영장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등록 야영장 표시, 요금 및 환불 정보 게시,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정보 게시를 추가한다. 등록 야영장 여부와 요금, 손해배상 관련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건전한 시장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등록 야영장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개정(안)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이하 생략) ...

...

7. 그 밖의 준수사항 (신설)

가. 야영장업 사업자는 야영장 관리실(동) 입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야영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야영장업 사업자는 야영장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야영 이용 요금표 및 환불 기준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요금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환불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른다.

다. 야영장업 사업자는 야영장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 및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책임보험 혹은 공제 가입을 나타내는 증서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 기대효과

야영장업 등록제도와 함께 사업자에 대한 안전·위생 관리,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다양한 의무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즉, 등록 야영장은 법령에 규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미등록 야영장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등록 야영장 표시, 요금 및 환불 정보,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정보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 야영장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미등록 야영장이 이용자들의 선택에서 제외되어 자연스럽게 야영장업계에서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3.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야영 공간 확대: 공공야영장 확대

이용자의 선호도가 높은 야영 공간 확대 차원에서 공공야영장을 확대한다. 다만 민간 영역과 경쟁하기보다 국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야영장의 수준을 높이고 국민 여가 복지 충족과 민간 영역을 선도하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가. 필요성

① 공공야영장 부족, 수요 대비 낮은 공급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야영장은 비용이 저렴하고 시설이나 환경이 양호하여 주말 예약은 거의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공공야영장 예약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기사를 다수 검색할 수 있다.²⁵⁾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야영장 비율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낮은 편이고, 민간야영장의 경우에도 수도권 등 주요 도시와 근접한 거리에 입지한 야영장은 인기가 높아 예약이 힘들다.²⁶⁾ 이처럼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야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표 5-5〉 공공야영장 현황

구분		현황
우리나라 야영장 수 '20년 기준(비중)	공공야영장(공공 조성)	490개(20.7%)
	민간야영장	1,873개(79.3%)
해외 공공야영장 비중	미국('20년 기준)	47%
	일본('18년 기준)	83%

자료: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2022), 해외 캠핑장 운영 사례 조사.

② 이용자들의 공공야영장 확대 요구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야영장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인지 1순위를 질문한 결과, 야영장의 시설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안전·위생

25) 언론기사: 나는 캠핑이 좋다...공공캠핑장 주말 예약 '하늘의 별따기'(연합뉴스, '17.9.21.), '하늘의 별따기' 국립캠핑장 예약...웃돈 받고 불법 양도 눈살(연합뉴스, '22.1.23), 경북 동해안 야영장 예약 빗발...캠핑 명소로 인기몰이(매일신문, '22.3.3.)

26) 미국의 공공야영장은 2020년 기준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며, 일본은 2018년 기준 전체의 약 83%를 차지한다(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2022).

점검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3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공공야영장 확대가 26.5%로 뒤를 이었다. 이용자들도 공공야영장 부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 야영장 이용자들의 개선 필요사항 1순위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1순위)	응답 비율 (%)
공공야영장 확대	26.5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야영장 정보 제공	15.5
야영장의 안전·위생 점검 및 관리	39.0
야영 문화 개선	9.0
야영 사이트 면적 확대	5.0
야영 사이트 간 이격거리 증가	5.0

주: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용자 2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임.

나. 개선 방안

① 유흥지 등 국·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신규 조성

수도권 유흥지 등 국·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야영장 조성을 추진한다. 각 부처와 협력하여 소관부처의 야영장 조성을 확대한다. 예컨대 산림청 숲속캠핑장의 경우 실질 개발면적이 아니라 전체 구역 면적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행정 및 비용 부담이 크다.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등 유사시설은 실질 개발면적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점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부처 소관의 공공야영장 조성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공기업 등이 공공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공공야영장 조성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② 기존 공공야영장 개선·확대

일부 공공야영장의 경우 경영이 원활하지 않아 휴업 중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공야영장을 정비하고 다시 운영하게끔 하여 공공야영장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기존 운영 중인 공공야영장의 규모를 확장하여 공급을 확대한다. 야영장업 역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사업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야영장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운영 중인 30개 사이트 내외의 공공야영장을 대상으로 하여, 인접 부지의 용도, 인허가 등 확장 가능성을 검토해 야영장 규모 확장 사업비를 지원한다.

③ 새로운 야영 수요 대응

공공야영장 신규 및 확장 조성 시, 오토캠핑 사이트(야영공간) 설치 비율을 높이고 차박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와 덤프스테이션을 조성하도록 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박 수요에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야영장으로서 이용 편의성과 친환경 야영장 구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 기대효과

공공야영장은 가족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자연친화적인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적합하다. 즉, 공공야영장의 확대는 국민여가 복지 차원의 접근이다. 또한 최근 높은 야영 수요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야영장이 난립하고 있으므로 공공야영장을 조성해 공급 부족 상황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 야영장업의 표준을 상향시킬 수 있다.

4. 야영장업 조성 진입 규제 완화

가. 필요성

「관광진흥법」에는 야영장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면적과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의 야영장 개발규모를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내 개발 부지면적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것은 야영장업이 유일하다. 다른 관광사업과의 형평성과 「관광진흥법」이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규임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의 진입 규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① 개발규모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야영장 개발 제약

야영장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발 면적과 관련한 기준을 살펴보면, 이용자들이 야영을 할 수 있는 1개 사이트의 최소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고, 야영장 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 최대 기준, 그리고 전체 야영장 부지 면적 최대 기준이 있다. 또한 야영장업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 가운데,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업을 등록할 경우 전체 부지면적의 제한을 두고 있다.

이용자들이 야영을 하기 적합하도록 일반야영장업은 최소 15㎡, 자동차야영장업은 최소 50㎡의 야영공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이용자들의 텐트 사이즈가 커지는 추세라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더 넓은 규모를 조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리고 야영장에 설치하는 관리실, 화장실, 취사시설 등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난개발 방지와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조성하려면 야영장 전체 면적이 1만㎡를 넘을 수 없고, 야영장에 조성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300㎡를 넘길 수 없다.

요컨대 이러한 기준에 맞춰 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 30개 내외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야영장만 조성이 가능하다. 이용자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하며, 수익성이 있게 야영장을 조성·운영하려면 이보다는 사이트 개수가 커야 한다는 게 야영장업 사업자 측의 문제 제기이다. 즉, 민간이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야영장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제약하는 진입 규제로 볼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표 5-7〉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야영장 개발 규모 규정

구분	내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자) (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야영장업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자료: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② 야영장 입지 가능 용도지역의 개발제한행위 규모와의 불일치

야영장 개발부지 면적은 야영장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의 범위 안에서 조례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더욱이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은 조례에 의해 야영장업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여건에 따라 야영장업 입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6년 2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건축물 용도에 야영장 시설을 추가하고, 2016년 3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보전관리지역과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입지를 허용하였다. 이와 함께 2016년 3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에서 해당 용도지역 내 야영장 부지면적 규모를 1만㎡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녹지지역은 5천㎡ 미만, 그리고 관리지역은 3만㎡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야영장업 입지가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동 법에 따르면 3만㎡까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1만㎡까지만 야영장 개발이 가능한 것이다.²⁷⁾ 한편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여 개발할 수 있어 관광농원으로 부지를 개발해 야영장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요컨대, 증가하는 야영 수요에 대응한 다양한 야영장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의 야영장 개발규모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표 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허가

구분	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p>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p> <p>1. 도시지역</p> <p>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p> <p>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p> <p>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p>

27)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관광진흥법」에서 1만㎡로 야영장 개발 면적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에 의해 5천㎡까지만 개발할 수 있어 본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구분	내용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자료: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나. 개선 방안

①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적용

현재 야영장업이 조례에 의거해 입지 가능한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난개발 예방과 자연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전체 부지면적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 등록기준에 건축물의 조성 면적을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미만까지로 두고 있고, 이용자들에게 야영공간(사이트)을 제공하는 것이 중심인 야영장업의 특성상 다른 개발행위에 비해 자연훼손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부지면적 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야영장 시설을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대한 내용을 「관광진흥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야영장업의 공통기준에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9〉 「건축법」 시행령의 야영장 시설

구분	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료: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표 5-10〉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구분	현행	개정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4.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자) (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4.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 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바닥면적 합계가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이하 "폐교재산"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렇지 않다. (자) (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다만,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기존 폐교재산의 부지면적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하지 않고 야영장 입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이 없는 때에는 1) 및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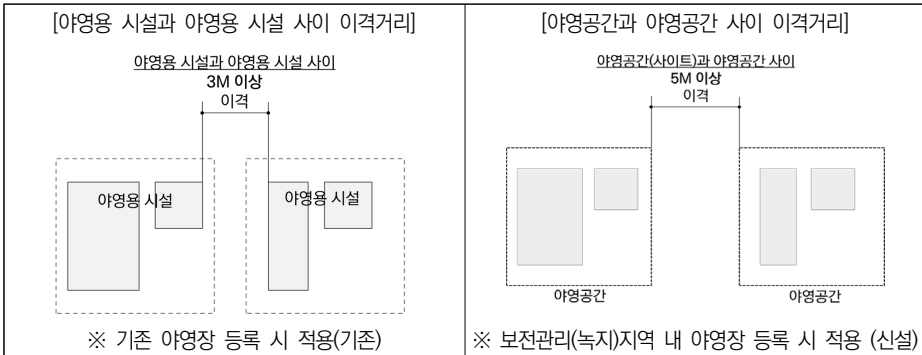
② 고려사항

다만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일종의 숙박 시설로 판단될 수 있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가 편의시설로만 구분되고 가설건축물로도 판단되지 않아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내 설치에 제약이 없는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후 부지면적 규제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와 관련한 별도의 업종 구분과 등록기준을 통해 난개발 예방과 자연친화적 개발이라는 환경적 방향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글램핑과 야

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기본시설인 야영 사이트(야영텍) 대비 설치 가능한 글램핑 등의 시설 조성 사이트 수를 제한하거나,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글램핑 등을 포함한 업종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이격거리 기준을 두어 친환경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5-5]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등록기준(예시)



다. 기대효과

증가하는 야영 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야영장 공급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야영장 사업자 측면에서 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사항을 완화하여 야영장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전체 부지 면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개발의 기초는 그대로 살려 자연친화적인 야영장 조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5. 야영장업 등록 시 애로·장애요인 해소

야영장업 등록 시 애로 및 장애요인 해소를 위하여 i) 야영장업 등록업무 매뉴얼 개정, ii) 등록 소요 기간 현실화, iii) 등록서류 내 상세 시방서 제출을 시행한다.

5.1. 야영장업 등록업무매뉴얼 개정

가. 필요성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야영장업 등록 업무 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매년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을 개선해 배포하고 있으나, 이 같은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등록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다양해지는 야영장업 행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나. 개선 방안

매뉴얼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동일한 판단을 하고, 해당 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예시로 들어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이때 사진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등록업무 수행 시 놓치기 쉬운 점들을 짚어준다.

현행 업무 매뉴얼은 야영장을 신규로 조성하여 등록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기존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야영 공간(사이트)을 마련하여 야영장업 등록을 하는 경우나, 과거에 야영장을 운영하던 곳을 인수해 리모델링하여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도 꽤 많다.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마련되고, 「건축법」 등 타 법령의 야영장업 관련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존 타 용도의 시설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한다.

다. 기대효과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들이 수월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야영장업 등록 과

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업무 수행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 업무 담당자에 따라 등록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는 경우를 감소시켜, 행정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5.2. 등록 소요 기간 현실화

가. 필요성

야영장업 등록 신청 시 처리 기한이 7일 이내로 되어 있다. 하지만 야영장업은 개발 행위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와 하수 처리, 건축 등 타 부서 협의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 이후 7일 이내에 등록업무를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방자치단체 야영장업 담당자 심층인터뷰 시, 실제 2-3주기량 소요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야영장업과 같이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일종인 종합휴양업은 등록 처리기한이 12일이며,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은 모두 14일로 되어 있다.

나. 개선 방안

현재 야영장업 등록 처리기한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인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내에 명시되어 있다. 서식으로 제공하는 양식 내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비교적 변경이 수월하다. 서식도 법령의 일부이므로 법령 개정 절차를 따라야 하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건은 자체 심사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²⁸⁾ 또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민원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2장제2절에서는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처리기간의 설정에 관한 제약은 없다.

요컨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려운 점, 다른 관광객이용시설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14일(안)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28)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표준화 등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음. 해당 규정의 제2장(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에서는 서식의 제정을 위한 서식 설계와 서식의 승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서식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서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등의 표시에 관한 서식 설계 원칙과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자체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다. 기대효과

행정 업무의 처리는 사전에 공표한 기한 내에 완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이 지연될 경우 사업자의 영업 일정에 차질을 줄 수도 있어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되, 실제 이행하기 어려운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해당 업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만약의 경우 발생 가능한 민원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다.

5.3. 등록서류 내 상세 시방서 제출

가. 필요성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는 현재 야영장 내 편익시설로 분류되며, 설계도상 공란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최근 건축물에 준하는 글램핑과 트레일러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위한 현장 확인 과정에서 등록 가능 여부를 놓고 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등록 이후 현장 점검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로 판단되어 철거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따라서 사전에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구성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개선 방안

야영장업 등록신청 시, 시설 평면도와 배치도를 제출할 때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시설의 소재와 구조, 급배수 시설에 대한 상세 시방서를 포함하도록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인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내 신청인 제출서류에 시설 평면도와 배치도 부분에 야영장업의 경우 상세 시방서 포함(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 설치에 한하여)이라고 명시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상세 시방서와 배치도를 제출해 사전에 적절성 여부를 검토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개정(안)

신청인 제출서류 / 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

1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시설)

가. 야영장업: 상세 시방서 포함(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설치에 한하여, 소재 및 구조, 급배수시설 등 포함)

다. 기대효과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카라반) 설치 형태에 대하여 관련 행정 부서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시설물 설치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야영장업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과 사업자 간의 갈등, 사업자의 재산상 손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

6. 야영장 이용자 안전 관리 강화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반 텐트사이트 이용자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의무화를 추진한다.

가. 필요성

야영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가운데 하나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이다. 이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가 설치하는 야영 시설인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이용자가 직접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가 어렵다. 이용자들에게 텐트 내 화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고지하고 안내 현수막을 붙이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텐트 내부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야영 수요가 높아지면서 처음 야영을 시작하거나 야영 경력이 길지 않은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야영장업 사업자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나. 개선 방안

현재 야영장 사업자가 설치하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내부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위생기준 내 1. 화재 예방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안전사고의 일환이므로,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를 추가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개정(안)

1. 화재 예방기준

가.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과 (이하 생략) ...

...

5. 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기준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이용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설)

러. 사업자는 야영장 기본시설 이용객에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해 주어야 한다.

다. 기대효과

사업자가 야영장 이용자에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대여해 줌으로써, 야영 시 숯불이나 난방기기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자가 경보기를 대여해 주면서 이용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해 상기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안전한 야영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6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코로나19로 인해 야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야영 수요와 공급의 양적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 그리고 안전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 2월 야영장업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같은 해 3월 강화도 야영장 화재 사건을 계기로 야영장의 안전·위생과 관련한 세부 대책을 계속하여 마련해 왔으나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영장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야영장 관리 실태 조사 결과 상당수 야영장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새로운 야영 시설인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가 늘어나면서 현행법과 현장의 괴리 문제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제도를 합리화하여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통해 야영장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야영장업 활성화'는 야영장 이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활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야영장 이용 수요를 확대하고, 안전, 자연환경 보전 등의 기본 원칙 아래, 야영장업 등록 및 운영 시 제약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야영장업계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 국민의 편의 등과 관련한 법·제도는 새롭게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을 봉합하기 위한 땀질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다만 야영장 이용자, 사업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각 주체의 요구와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회적 편익과 비용 관점에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야영장업 관리를 체계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야영장업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등록기준을 정비한다. 또한 외부 전문조직을 통한 야영장업 관리·감독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둘째, 야영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과 자발적인 야영장업 품질관리를 유도하고자, 특성화 야영장

인증제와 야영장업 정보 게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는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도 맥이 닿아 있다. 셋째, 이용자들의 향유 기회를 높이고, 민간야영장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공공야영장을 확대한다. 넷째, 다양한 규모의 야영장 공급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야영장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야영장 사업자가 등록 시 겪고 있는 애로 및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i) 야영장업 등록업무 매뉴얼 개정, ii) 등록 소요 기간 현실화, iii) 등록서류 내 상세 지방서 제출을 시행한다. 여섯째, 야영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일반 텐트사이트 이용자 대상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의무화를 추진한다.

제2절 정책 제언

가. 야영장업 관리 체계화 중요

현재 야영장업은 체계화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다수의 야영장이 조성·운영되는 상황에서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가 신설되고, 각종 법규가 마련되면서 야영장업 관리 기틀을 마련해 왔지만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여건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땀질식으로 대책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야영장업 분류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그에 부합한 등록기준뿐 아니라 안전·위생기준 등 전반적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야영장업 법 위반 등 이력 관리를 통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3년간 제외 조치, 영업정지 상태에서 영업 행위 적발 및 위법 사항 3번 누적 시 야영장업 등록해지 등 세부 적발 내용과 경과에 따라 차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사업자 가운데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일종이다. 야영장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현재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나. 야영장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 정책 목표 설정 필요

한편 이상의 근본적인 체계 개편에 앞서 야영장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최근 많이 조성되고 있는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 등의 시설에 대한 관점이다. 당초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새로운 야영 경험을 제공하고자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가 설치되었지만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글램핑과 야영용 트레일러만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그리고 글램핑 소재 완화, 공동시설 설치 부담 완화 등을 주장하는 사업자의 목소리와 함께 숙박업자와의 갈등도 나타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되, 야영장업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야영장업 정책의 중심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다. 효과성 높은 정책 지원 사업 확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과 안전한 야영 문화 확산 캠페인은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법으로 규정한 등록기준이나 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실히 준수하는 사업자만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지원의 효과를 배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차박 수요 증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덤프스테이션 설치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 구축사업을 올해부터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사업자의 필요 사항을 사전에 청취하여 더욱 체감도 높은 지원 사업 방식과 내용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야영 수요층이 늘어나면서, 야영장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세분화되고 있다. 시설 개선뿐 아니라 세무, 경영, 활성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야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영장 이용자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이용자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야영장 이용자가 등록 야영장을 확인하고, 등록 야영장만 이용할 경우 미등록 야영장은 근절될 수 있다. 이처럼 이용자의 선택을 통해 바람직한 야영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야영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하여야 한다.

라. 고캠핑 사이트 개선

우리나라는 민간야영장 비중이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80%)임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부재하다. 이에 객관적인 야영장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고캠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야영장 이용자의 이용률 및 인지도가 낮다. 2020년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약 25%가량이 고캠핑에서 야영 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하였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 야영장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가 고캠핑 사이트를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고캠핑 사이트를 알고 있는 100명의 응답자 가운데, 8.0%만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고캠핑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야영장 선택 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어렵고, 부정확한 정보가 많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고캠핑 사이트의 개설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사이트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고캠핑 사이트는 국민들에게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야영장업

사업자 대상 정부 지원 사업 정보 제공, 온라인 안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야영 이용자들이 정확한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야영장을 직접 방문 취재하여 사진과 이용자, 사업자 인터뷰 등을 신는 등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마. 후속 연구 추진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안)은 각 안마다 충분한 논의와 제도 도입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야영장 이용자(국민), 사업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야영장업 분류 체계 개편과 등록기준 개정 등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관광진흥법」의 야영장업 관련 법령을 정비할 수 있도록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특성화 야영장 인증을 위해서도 인증 평가 지표와 배점, 평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전국의 야영장 관련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물론 등록 야영장만 2천여 개가 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긴 하나, 야영장 현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2022), 관광진흥법 제정·개정문.
- 국립공원관리공단(2014.11.4.), 전국 38개 국립공원 야영장…최초로 등급제 적용(보도자료).
- 고아름(2022.3.24.), “캠핑장, 폭우 쏟아져도 취소 불가”…불공정 약관 다수, KBS news(available at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3115>)
- 김윤영(2013), 「야영장업 법제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인유(2017.9.21.), 나는 캠핑이 좋다…공공캠핑장 주말 예약 '하늘의 별따기', 연합뉴스
- 김학준·김현정·이동환·윤희진·정다혜(2018), 「경기도 우수야영장 평가지표개발」, 경기관광공사.
- 김현정·김학준(2020). 캠핑장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분포 (ROS) 적용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32(2), pp377-395.
- 경기도청(2022.7.24.), 소화기는 없고 연기감지기는 방전돼 무용지물, 도내 중대형 캠핑장 79곳 중 78곳 안전기준 미달(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1), 「농촌관광사업등급제 운영지침」.
- 농림축산식품부(2022.4.18.), 소비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 등급체계 바꾼다(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법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4.11.18.), 야영장 업무처리(등록, 관리)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2019.3.4.),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된다(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9.23.), 코로나 새 일상 속 야영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1a), 「2022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 문화체육관광부(2021b), 「2022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 문화체육관광부(2022a), 「2020 관광산업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2b), “2022년 등록 야영장 지원 사업 추진계획”
- 박영채(2022.3.3.), 경북 동해안 야영장 예약 빗발…캠핑 명소로 인기몰이, (available at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030311194433044>)
- 부산광역시(2021), 야영장(캠핑장) 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2021.10.)
- 산업연구원(2015), 「인정제도 경쟁력 제고 방안」
- 소방청(2022.3.23.), 캠핑장에서도 화재안전 중요(보도자료).
- 연합뉴스(2022.1.23.), '하늘의 별따기' 공립캠핑장 예약…웃돈 받고 불법양도 눈살, (available at <https://www.yna.co.kr/view/AKR20220121102300051>)
- 유리화·장주연·박수진·최가영·이승아(2016), 「미국의 숲속야영장 제도 및 운영실태」. 국립산림과학원.
- 유승목(2019.10.10.), [국감]한국관광 품질인증 ‘유명무실’…폐업 속출, 머니투데이 (available at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1011425064118>)
- 이수진 · 박경철 · 조성한 · 전유나(2016), 「캠핑장 등급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언」. 경기연구원.
- 장정훈(2021.12.20.), ‘캠핑장 예약 만원’ 겨울철 캠핑족 난방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전라북도민일보 (available at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5264>)
-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내부자료(2022), 해외 캠핑장 운영 사례 조사.
- 채청비(2022), 숙박업 인증제도, 안전성과 자긍심 둘 다 갖춰, 호텔앤레스토랑.
- 프랑스 관광청(Atout France)(2009), 2009 관광숙박업 등급제 개편(2009년 7월22일).
- 한국관광공사(2019), 「야영장업 분류체계 개편 및 글램핑·카라반 등록기준 연구」.
- 한국관광공사(2020), 「한국관광 품질인증 평가요원 양성과정 교재」.
- 한국관광공사(2021), 「2020년 기준 캠핑 이용자 실태조사」.
-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22),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2022), 2022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사업 소개.
- 한국소비자원(2019), 캠핑장 안전실태조사-카라반 보유 시설 중심으로-
- 행정안전부(2017.4.4.), 민간위탁 관리체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보도자료).

국내 인터넷 사이트

-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knps.or.kr>)
- 한국농어촌공사 웰촌 홈페이지(<https://www.welchon.com>).
- 한국관광공사(2022), 한국관광 품질인증 홈페이지
(<https://koreaquality.visit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2022), 호텔업 등급결정사업 홈페이지
(<https://www.hotelrating.or.kr>).
- 호텔앤레스토랑(2022), 홈페이지(<http://www.hotelrestaurant.co.kr/>).

해외 인터넷 사이트

- 미국캠프협회(American Camp Association, ACA) 홈페이지
(<https://www.acacamps.org/>)
- 일본 오토캠핑협회(<http://www.autocamp.or.jp>)
- 일본캠핑협회 홈페이지(<https://camping.or.jp/>)
- 프랑스 정부 사이트
(<https://www.economie.gouv.fr/dgccrf/Publications/Vie-pratique/Fiches-pratiques/camping-regles-a-connaître>)
- 프랑스 통계청 사이트(<https://www.insee.fr/en>)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the Revitalization of Camping Industry

Park, Juyoung

There are growing demand and supply for camping as a result of increased interests in camping amid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the camping site users' convenience, satisfaction, and safety are hardly guaranteed. Even though detailed measures to ensure the camping sites' safety and sanitation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camping sites registration in February and the Gangwha camping site fire in March of 2015, the system proves to be ineff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measures to improve relevant laws and systems that would promote qualitative growth of the camping sites industry. It also (1) comes with issues to be improved after gathering opinions from various groups including camping sites users, business owners,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etc. and examining the current condition of camping sites businesses; and (2) proposes measures that would effectively improve the system based on foreign and domestic case analysis.

This study sets out its basic direction to rationalize the laws and systems to invigorate the camping sites industry through systematic support and management. 'Invigorating camping sites industry' would mean forming a virtuous cycle of supply and demand for camping sites. The camping sites industry would be able to continue to expand the demand by enhancing the camping sites users' convenience and satisfaction while forming a healthy industrial ecosystem by

resolving restrictions involved in the registering and operating camping sites business under the basic principles of safety, conservation of natural environment, and legality.

This study suggests preemptive and fundamental system improvements rather than patch-ups to address the current problems. However, because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camping sites users, business owners, government and etc. have different needs and perspectives, du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each in terms of social benefits and costs.

First,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discrepancy between the current law and the camping sites businesses, the camping sites should be reclassified and the registration standards should be modified accordingly.

Second, to eliminate the blind spots in managing camping sites such as safety and sanitation, an external professional organization should supervise, manage and consult the camping sites.

Third, camping sites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facilities and services of camping sit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camping sites industry as a whole which will eventually result in user satisfaction.

Fourth, to expand the supply of camping sites of various sizes and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regulations that hinder the establishment of camping sites should be eased.

Fifth, more public camping sites that are relatively inexpensive and provides higher user satisfa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raise the facilities and services of private camping sites and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users.

Moreover, other improvement measures that can be implemented before introducing the fundamental system improvement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as well. In order to solve the difficulties and obstacles experienced by local governmental officials and camping sites businesses when registering, the following should be implemented: (i) revision of the camping sites business registration manual; (ii) realization of the registration period; and (iii) submission of detailed specifications in the registration documents. In addition, to eradicate unregistered camping sites, protect user interests, and enhance convenience, (iv) posting of

information about camping sites should be made mandatory and (v) the gocamping.or.kr should be improve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event safety accidents for camping sites users, (vi) it should be mandatory to rent carbon monoxide alarms for tent users.

Keywords

Camping sites industry, Invigoration, System improvements, Deregulation, User satisfaction, Hygiene, Safety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부록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가. 설문조사 목적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야영장업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나. 설문대상 및 유효표본

설문대상으로 야영장 이용자, 야영자업 사업자, 야영장업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세 그룹을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유효표본 수는 (G1) 야영장 이용자 200명, (G2) 야영장업 사업자(관리요원 포함) 51명, (G3)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38명이다.

설문 응답의 유효성을 위하여 야영장 이용자는 분기당 1회 이상 야영을 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야영장 사업자(관리요원 포함)와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은 6개월 이상 업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 설문조사 기간

설문조사는 2022년 7월~8월 동안 이루어졌다.

라. 주요 설문 문항

야영장 이용자	야영자업 사업자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야영장(캠핑장) 이용 현황야영장업 등록제도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야영장업 등급제, 인증제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본사항 및 야영장 운영·관리 기간야영장업 등급제, 인증제야영장업 안전교육야영장업 안전, 위생 관리제도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본사항 및 해당 지역 등록, 미등록 현황야영장업 등급제, 인증제야영장업 안전, 위생 관리야영장업 담당 업무 애로사항제도 개선 사항

제2절 야영장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만19세 이상이며 최근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야영(캠핑)을 경험한 성인 2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각각의 응답자 수를 할당 설계하였다.

구분		응답자 수 (명)
성별	남	105
	여	95
거주지역	수도권	100
	충청	22
	전라	20
	경상	48
	강원/제주	10
연령	20대	30
	30대	60
	40대	60
	50대 이상	50
캠핑 경험 기간	1년 미만	40
	1~3년 미만	40
	3~5년 미만	40
	5~10년 미만	40
	10년 이상	40

2. 귀하께서는 야영장업 등록제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단일응답]

- ① 전혀 모르다(처음 들어본다) (4번으로 이동) ② 대략 알고 있다
③ 자세히 알고 있다

3. 귀하께서는 야영장(캠핑장)을 선택하여 이용할 때, 해당 야영장(캠핑장)이 등록 야영장인지 여부가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단일응답]

전혀 영향이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영향이 있다
①-----②-----③-----④-----⑤

[한국관광공사 고캠핑 홈페이지]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등록 야영장에 대한 위치와 시설,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고캠핑(<https://gocamping.or.kr>)”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한국관광공사의 고캠핑 홈페이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단일응답]

- ① 전혀 모르다(처음 들어본다). (7번으로 이동) ② 대략 알고 있다. (5번으로 이동)
③ 자세히 알고 있다. (5번으로 이동)

5. 귀하께서는 한국관광공사의 고캠핑 홈페이지를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일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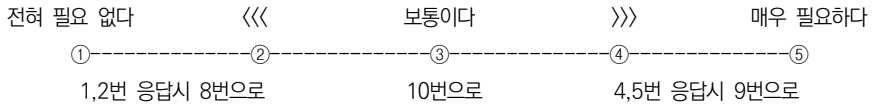
- ① 전혀 이용해 본 적 없다. (6번으로 이동) ② 한두 번 이용해 봤다. (6번으로 이동)
③ 가끔 이용한 적 있다. (6번으로 이동) ④ 자주 이용해 봤다. (7번으로 이동)
⑤ 야영장 검색 시 반드시 이용한다. (7번으로 이동)

6. 귀하께서 한국관광공사의 고캠핑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오픈응답]
()

[야영장업 등급제, 인증제]

우리나라 관광호텔은 시설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별 표시를 1개~5개까지 부여하는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 면세 판매장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을 제시하고자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7. 귀하께서는 이러한 등급제와 인증제를 야영장(캠핑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응답]**



8. 귀하께서 등급제, 인증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픈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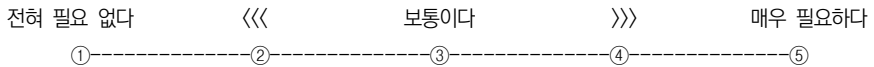
9. 귀하께서 등급제,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픈응답]**
()

10. 이상의 등급제, 인증제와 별개로

다양한 야영객의 욕구(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 야영장(캠핑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콘텐츠(서비스)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야영장(캠핑장)을 인증하고, 홍보,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한 경우, ②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한 경우, ③ 안전에 특화된 경우(야영장 관리자가 안전요원 혹은 응급처치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④ 애완동물 친화(동반 가능) 등)

이러한 특성화 야영장(캠핑장)을 중앙정부가 인증하고, 홍보와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응답]**



[개선 사항]

11. 귀하께서 야영장(캠핑장)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2순위 필수]**

- ① 공공야영장(캠핑장)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 ② 야영장(캠핑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 ③ 야영장(캠핑장)의 시설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안전, 위생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 ④ 야영객들의 매너타임 준수, 서로 간의 배려 등 야영(캠핑) 문화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⑤ 야영(캠핑) 사이트 당 면적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 ⑥ 야영(캠핑) 사이트마다 간격이 일정 거리 이상 되었으면 좋겠다.
- ⑦ 기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절 야영장업 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야영장 관리·운영 경력이 6개월 이상인 51명의 야영장업 사업자(관리요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응답자 수 (명)
성별	남	35
	여	16
야영장 소재지	수도권	19
	충청	12
	전라	3
	경상	14
	강원/제주	3
연령	20대	1
	30대	8
	40대	12
	50대	14
	60대 이상	16
야영장 관리·운영 경력	1년 미만	5
	1~3년 미만	8
	3~5년 미만	10
	5~10년 미만	21
	10년 이상	7
야영장 내 역할	사업자(경영주)	40
	관리요원(피고용인)	11

3. 귀하께서 등급제,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픈 응답]
()

4. 이상의 등급제, 인증제와 별개로

다양한 야영객의 욕구(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 야영장(캠핑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콘텐츠(서비스)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야영장(캠핑장)을 인증하고, 홍보,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한 경우, ②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한 경우, ③ 안전에 특화된 경우(야영장 관리자가 안전요원 혹은 응급처치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④ 애완동물 친화(동반 가능) 등)

이러한 특성화 야영장(캠핑장)을 중앙정부가 인증하고, 홍보와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전혀 필요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야영장업 안전교육]

5.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사업자와 관리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온라인교육을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단일 응답]

① 있다 (6번으로 이동) ② 없다 (7번으로 이동)

6. 귀하께서 이수하신 야영장업 교육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목별 단일 응답]

	매우 그렇지 않다	<<< 보통 >>>	매우 그렇다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도움이 된다	①-----②-----③-----④-----⑤		

[야영장업 안전, 위생 관리]

7. 귀하께서는 야영장이 지켜야 할 안전 및 위생 기준 등에 대해 아십니까? [단일 응답]

① 전혀 모른다(처음 들어본다) (9번으로 이동) ② 대략 알고 있다 (8번으로 이동)
③ 자세히 알고 있다 (8번으로 이동)

8. 야영장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 세부적으로 적합성과 효과성을 판단해 주십시오. (5점 척도) **[항목별 단일 응답]**

	적합성		효과성	
	매우 부적합	매우 적합	전혀 효과없다	매우 효과적
점검주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점검시기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점검항목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8-2. 전반적으로 이러한 야영장업 안전, 위생관리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대단히 불필요하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9. 귀하께서는 (앞의 질문처럼) 매월 야영장에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 점검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 대신,

전문기관에서 야영장을 방문하여 안전, 위생 관리 기준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대단히 불필요하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10. 야영장업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오픈 응답]**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절 야영장업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응답자 개요

야영장업 업무 담당 기간이 6개월 이상인 38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분		응답자 수 (명)
근무지	수도권	9
	충청	6
	전라	8
	경상	13
	강원/제주	2
업무 담당 기간	6개월~1년 미만	14
	1년~1년6개월 미만	11
	1년6개월~2년 미만	10
	2년 이상	3

2. 설문문항

SQ1. 귀하께서는 현재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도로 표시]

- ① 광역자치단체 근무
- ② 기초자치단체 근무

SQ2. 귀하의 근무지의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지도로 표시]

()시/도 ()시/군/구

[기본 현황]

1. 귀하께서는 야영장업 업무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픈 응답]

약 () 년 () 개월 [6개월 이상 응답자만 조사 가능]

2. 귀하가 담당하고 계신 지자체에 미등록 상태로 운영 중인 야영장업체 숫자는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응답일 기준) [오픈 응답]

정확한 숫자를 모를 경우 대략적으로 응답 부탁드립니다.

()개소 [0부터 입력 가능]

3. (시군구 지자체 담당자만) 현재 야영장업 신규등록이 진행 중인 업체 숫자는 몇 개입니까? (응답일 기준) [오픈 응답]

정확한 숫자를 모를 경우 대략적으로 응답 부탁드립니다.

()개소 [0부터 입력 가능]

[야영장업 등급제, 인증제]

우리나라 관광호텔은 시설과 서비스 수준에 따라 별 표시를 1개~5개까지 부여하는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객 면세 판매장의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을 제시하고자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귀하께서는 이러한 등급제와 인증제를 야영장(캠핑장)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전혀 필요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1,2번 응답시 4번으로 6번으로 4,5번 응답시 5번으로

5. 귀하께서 등급제, 인증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픈 응답]
()

6. 귀하께서 등급제,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픈 응답]
()

7. 이상의 등급제, 인증제와 별개로

다양한 야영객의 욕구(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 야영장(캠핑장)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콘텐츠(서비스)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야영장(캠핑장)을 인증하고, 홍보,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 주변 자연환경이 우수한 경우, ②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한 경우, ③ 안전에 특화된 경우(야영장 관리자가 안전요원 혹은 응급처치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④ 애완동물 친화(동반 가능) 등)

이러한 특성화 야영장(캠핑장)을 중앙정부가 인증하고, 홍보와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야영장업 안전, 위생 관리]

8. 야영장업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야영장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점검표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8-1. 세부적으로 적합성과 효과성을 판단해 주십시오. (5점 척도) [항목별 단일 응답]

	적합성		효과성	
	매우 부적합	매우 적합	전혀 효과없다	매우 효과적
점검주체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점검시기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점검항목	①-----②-----③-----④-----⑤		①-----②-----③-----④-----⑤	

8.2. 전반적으로 이러한 야영장업 안전, 위생관리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대단히 불필요하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9. 귀하께서는 (앞의 질문처럼) 매월 야영장에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 점검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 대신, 전문기관에서 야영장을 방문하여 안전, 위생 관리 기준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일 응답]**

대단히 불필요하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①-----②-----③-----④-----⑤

[야영장업 담당 업무 애로사항]

10. 귀하가 야영장 업무(등록, 야영장업 안전·위생 점검 등)를 수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오픈 응답]**
 ()

[제도 개선 사항]

11. 야영장업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오픈 응답]**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필내역

연구책임

박주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제1장~제6장, 연구총괄

연구진

장진희 법학 박사: 제2장 1절 일부, 제4장 2절 일부

연구 자문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 제4장 2절 일부

김현정 한국융합관광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5장 2절 일부

전상준 ㈜플러스앤 실장: 제5장 2절 일부

연구 참여

백리나 정보환경학 자유연구가: 제4장 2절 일부

박연수 문화인류학 자유연구가: 제4장 2절 일부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발행인 류 광 훈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2년 10월 21일

발행일 2022년 10월 21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25-3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7>

이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박주영·장진희(2022), 야영장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7>



9 788960 359253
ISBN 978-89-6035-925-3